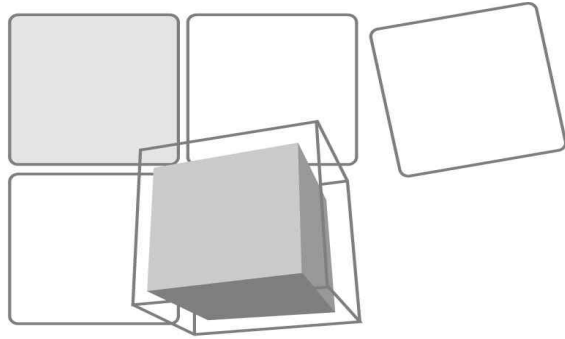


2018년 해사안전 시행계획[안]

2018. 4.



해양수산부



2018년 해사안전시행계획

요 약 본

목 차

◆ 요약본

I. 해양사고 발생 현황 및 해사안전 여건	1
II.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III.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4
1. 5대 핵심과제	4
2. 주요 추진과제	5
1) 선박안전 신뢰성 제고 및 맞춤형 안전관리	
2) 자율적 안전관리 기반확대 및 해사안전관리체계 고도화	
3) 범바다 안전의식의 획기적 전환 유도	
4) 해상 종사자 역량제고와 고품질 복지 제공	
5) ICT 기반 첨단 해상교통 안전관리 체계 구축	
6) 해사안전산업 글로벌 선도국가 입지 구축	
IV. 투자계획	8

I

해양사고 발생현황 및 해사안전 여건

1

'17년도 해양사고 발생 현황

◆ '17년 해양사고는 2,582건(어선 1,778건, 비어선 804건), 인명피해(사망·실종자)는 145명(어선 100명, 비어선 45명) 발생

□ 다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해양사고는 11.9%(2,307건→2,582건) 증가하였으며, 인명피해도 22.9%(118명→145명) 증가

○ 어선사고가 전체사고의 68.9%(1,778건)를 차지(전년대비 8.0%, 132건 증가), 이 중 연근해어선이 전체사고(1,939척)의 87.4%(1,695척)를 차지

- 기관손상*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전년대비 6.5%, 34건 증가)하고 화재 폭발(20.9%, 19건)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 침몰사고는 전년 同

* 기관손상 : 216건('13) → 252건('14) → 477건('15) → 523건('16) → 557건('17)

○ 비어선사고가 전체사고의 31.1%(804건)를 차지하였으며, 이중 레저선박·항만작업선 등 기타선박이 전체사고의 75.4%(606건)를 차지

- 전년대비 여객선(연안·국제)은 해양사고 발생건수 감소(29.2%, 19건)

* 레저선박사고 : 325척('16) → 472척('17), 기타선박 : 105척('16) → 134척('17)

2

해사안전 여건 및 전망

□ 해양수산업 분야 재난·안전관리 혁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 지속

○ 최근 해양사고로 인한 대형인명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지속,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의 해양안전관리 혁신 요구 지속

*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17.3), 낚시어선 선창 1호 충돌사고('17.12) 등

□ 연안해역 이용수요 증가 및 다변화로 해사안전정책의 전환 필요성 대두

○ 국민의 해양이용 다변화 및 증가추이*에 따라, 안전관리 초점을 대형선박과 종사자를 넘어 이용자인 일반국민까지 확대·강화 필요

* (낚시어선 이용객수) ('14) 206만명 → ('15) 296만명 → ('16) 343만명(39.9%↑, '14년 대비)

3 '17년 주요성과 및 반성

- ☐ 다양한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해양사고가 발생하여 안전대책의 근본적인 재점검 필요
- ☐ 해양사고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적과실(약 90%) 발생을 최소화하여 여객선 사고 감소와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도모
 - * 연안·국제여객선의 인명피해(사망·실종) 및 충돌·침몰 등 대형사고 미발생
- ☐ 해사안전감독관을 통한 불시 지도·감독 및 개선조치로 선박 안전관리 강화 및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
 - * '17년 지도·감독(여객선 1,641회 , 개선명령 1,448건, 항행정지 20척/ 화물선 1,492회, 개선명령 3,195건, 항행정지 29척/ 원양어선 210회, 개선명령 26건)

II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1 기본방향

- ☐ 제2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17~2021)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2차년도 전략별 이행계획 수립 등 해사안전 정책 마련
- ☐ 기본에 충실한 안전관리로 정부정책을 혁신하는 한편, 국민의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참여형 체험교육 및 해양안전 캠페인 중점추진
- ☐ 선박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선박검사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LNG, LPG 등 친환경 연료 선박 보급 기반 조성
- ☐ e-Nav, 선박배출 대기오염 저감 기술 등 미래 먹거리 기술을 선도하고, 인명피해 저감기술 등 첨단 안전환경 기술 적극 개발
- ☐ 해사안전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해양안전산업의 국익창출 기여

비전

대형 해양사고 없는 보다 안전하고 친근한 바다이용

**주요사고* 30%
감소(‘18년 196건)**

<1차 계획(‘12~‘16) 평균 223건>

**사망자 수 30%
감소(‘18년 106명)**

<1차 계획(‘12~‘16) 평균 121명>

**대형 해양사고
Zero 화**

<1차 계획(‘12~‘16) 평균 0.8건>

전 략

추진 방향

선박안전

선박안전 신뢰성 제고 및
맞춤형 안전관리

기본과 이용자 중심의 해사안전관리, 연안선박,
어선 안전관리 강화, 선박검사제도 선진화 도모

안전제도

자율적 안전관리 기반확대
및 해사안전관리체계 고도화

관계기관 협업강화, 현장 안전관리 이행력 제고
및 자발적 안전관리 체계 정립, 재난관리 역량강화

의식개선

범바다 안전의식의
획기적 전환 유도

다각적 범바다 안전 캠페인 전개, 국민참여형 해양
안전교육 확대 및 생활밀착형 해양안전체험 확대

안전인프라

해상 종사자 역량제고와
고품질 복지 제공

맞춤형 안전교육 체계 정립, 어선 종사자 안전역량
제고, 고품질 선원복지 서비스, 우수해기사 지속 양성

교통환경

ICT기반 첨단 해상교통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해역별 맞춤형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좁은 연안
수로 통항 안전성 신뢰도 제고, e-Navigation 실현

국제협력

해사안전산업 글로벌
선도국가 입지 구축

해사안전분야 국제협약 대응 능력 및 해사안전 글로벌
선도역량 제고, 해사안전산업 세계시장 주도역량 강화

* 주요사고 : 인명사상, 선박전손, 해양오염(1천 톤)을 초래한 사고(중해심 통계 기준)

Ⅲ 과제별 세부추진 계획

1 5대 핵심과제

◆ '18년 해양안전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사고예방을 위해 중점적으로 수행해야할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

① 연안선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안전 대책 수립·시행

- 영흥도 급유선·낙시어선 충돌사고('17.12)를 계기로 선박 통항량이 빈번한 연안수역에 초점을 맞춘 사고예방 종합대책 수립

* 좁은 연안수로 선박 통항안전성 개선, 국민 눈높이 지도·점검체계 구축 등

② 해사분야 민간자율안전관리 기반 조성

- 민간의 해사안전분야 참여의식 확산과 민간 자율적 정화 기능 강화를 위해 국민참여 감시제도 및 해사안전분야 법제포럼 도입 등

* 연안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제도 운영으로 개선사항 발굴 및 환류체계 마련

③ 용도변경 화물선, 노후선박 중점 안전대책 강화

- 스텔라데이지호 사고('17.3)를 교훈삼아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소유자 안전운항 의무 확대 등 개선대책 수립·추진

* 선박소유자 상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 신설 등 선박안전법 개정 등

④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구축 및 시범운영 추진

- 해상무선통신망 구축사업으로 동서해권(1단계) 설치 및 육해상 재난안전정보 통합서비스를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연계시험 추진

⑤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 구축·운영

- 생활밀착형 해양안전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워터파크와 연계한 체험 시설구축·운영, 청소년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체험확대

1. 선박안전 신뢰성 제고 및 맞춤형 안전관리

◆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지속적 안전관리, 어선 등 소형선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검사강화를 통한 선박 안전성 확보 등

□ 여객선, 유도선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1-1-1) 추진 및 노후선박 안전관리 강화(1-1-2)

* 연안선박 해양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과제를 통합관리하고, 주기적 현장점검을 통해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이행실태 확인

□ 어선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안전문화 확산 등 추진(1-2-1, 2)

□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용, 연안선박 이차보전사업 실시 등 선박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강화(1-5-1)

2. 자율적 안전관리 기반확대 및 해사안전관리체계 고도화

◆ 정부·지자체·기관 간 협업강화, 선사 안전관리 역량강화 지원, 해양수산분야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 등

□ '안전대책점검회의(반기별)' 개최 등 기관간 협업강화(2-1-1), 중·소형 선사 맞춤형 컨설팅 지원 확대 및 부실 안전관리 대행업체 퇴출유도(2-2-1)

□ 선박사고, 해양오염, 풍수해 등 해양수산분야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관리체계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2-3-1)

* 재난유형별 맞춤형 대책 마련 및 유관기관 합동 시설물 안전대진단 실시 등

□ 각종 테러 및 국제항해선박 보안사고 예방활동과 종사자 재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2-3-3)

* 동계올림픽·패럴림픽('18.2~3) 등 안전대책 수립·시행, 선사·선박 보안책임자 법정교육 연중 실시 및 합동 보안훈련 실시('18.12)

3. 범바다 안전의식의 획기적 전환 유도

◆ 대국민·종사자 대상 다각적 안전문화 확산 활동 추진, 생활 밀착형 해양안전체험교육 확대 및 전문체험시설 건립 지원 등

- 해양안전의 날(매월 1일) 대국민 캠페인 행사 추진(연중), 해양안전 문화확산 콘텐츠 제작·배포 등(3-1-1)
- 해양안전 전문강사의 양성과 체험위주의 현장안전교육 실시로 실효성 있는 해양안전 교육체계 구축(3-1-2)
 - * 강사 132명 양성, 학생·일반인 등 55,000명 교육(비상 시 탈출요령, 구명뗏목 개방 및 탑승, 구명조끼 착용법 등 실습·체험위주의 프로그램 운영)
- 해양사고 발생시 국민의 비상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안전 체험 시설 건립지원(3-2-1) 및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 구축·운영(3-3-2)

4. 해상 종사자 역량제고와 고품질 복지 제공

◆ 인적과실 사고예방을 위한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강화, 연안 선박 맞춤형 안전교육 마련 및 경영진(CEO) 안전교육 확대 등

- 인적과실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강화(4-1-1), 연안선박 교육과정 재점검 및 현장방문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4-1-2)
- 외국인 어선원 이탈방지, 안전사고예방 정책지원 및 교육 강화(4-2-2)
-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추진, 권역별 복지지원 사무소 설치, 원양 어선 조업현장 선원가족 방문, 장제비 지원 등 체감형 선원복지 확대(4-3-2)
 - *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선박 : '18년까지 누적 60척 예정
- 선원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운영, 선원인력수급계획 수립 등 지속가능한 안정적 선원고용 기반마련(4-4-3)
 - * 오션폴리텍 등 지속적인 해기인력 양성 및 선원인력수급계획 연구용역 추진

5. ICT기반 첨단 해상교통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좁은 연안수로 통항여건 진단 및 해상교통안전진단의 검증체계 강화 등 고도화 추진, e-Navigation 해상무선통신망 시범운영

□ 최적안전항로 지원 등 e-Nav 서비스 시제품 시연 , 초고속해상 무선통신망(LTE-M) 및 e-Nav 운영시스템 1단계 구축(5-3-1~3)

□ 국내 항로여건을 고려한 항로표지의 확충 및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고도화 추진 등 차세대 항로표지 체계 구축(5-4-1~2)

* 항로표지 통합관리센터 구축 추진, eLoran 핵심기술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 연안해역의 지속적인 수로조사, 주요항만에 대한 정밀 수로측량 실시로 해역별, 선종별 맞춤형 해도정보* 제공(5-5-2)

* 연안·항만해역에 대한 정밀 수로측량 시행, 해상·해저 장애물, 해상사격 훈련 등 수요자가 요구하는 해양안전 관련정보(해도, 항행통보 등) 지속 제공

6. 해사안전산업 글로벌 선도국가 입지 구축

◆ 선박평형수, 친환경 선박 등 해사안전산업 육성 기반마련, IMO A그룹 이사국 10연임 기반조성 등 국제사회 외연 확대

□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발효 후 BWMS 설치기한 유예에 따른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선점 및 국내해운사의 협약이행 지원*(6-1-1)

* 핵심부품의 국산화 기술개발, 해외 마케팅, 형식승인 절차 제도 정비 등

□ 친환경 선박 도입에 대비한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및 기술개발* 지원(6-1-3)

* 선박배출 대기오염원(Black Carbon) 후처리 시제품 개발 및 실선적용을 위한 선박기관 출력별(400kW, 3MW급) 시스템 설계

□ '20년 IMO 회원국감사(IMSAS) 대비, 해사안전법 개정·인력보강(6-2-1), 체계적 국제공조를 통한 IMO A그룹 이사국 10연임('18.12) 추진(6-3-1)

IV 투자계획

□ '18년 해사안전시행계획 투자소요는 3,591억원

- 안전문화 확산, 종사자 의식개선·교육 등 해양사고 예방활동의 지속적 시행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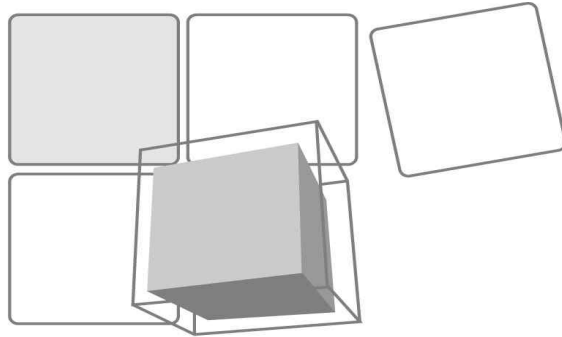
□ 전략 5 “ICT기반 첨단 해상교통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전체예산의 61.5% 소요

- “전략 1” 선박안전 신뢰성 제고 및 맞춤형 안전관리 : 469억원
- “전략 2” 자율적 안전관리 기반확대 및 해사안전관리체계 고도화 : 193억원
- “전략 3” 범바다 안전의식의 획기적 전환 유도 : 148억원
- “전략 4” 해상 종사자 역량제고와 고품질 복지 제공 : 468억원
- “전략 5” ICT기반 첨단 해상교통 안전관리 체계 구축 : 2,207억원
- “전략 6” 해사안전산업 글로벌 선도국가 입지 구축 : 106억원

【 과제 별, 기관 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구분	추진 과제 1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 3	추진 과제 4	추진 과제 5	추진 과제 6	합계
전략 1	-	1,140	-	187	38,588	7,000	46,915
전략 2	859	19	13,599	244	3,940	500	19,332
전략 3	1,050	13,463	280	-	-	-	14,793
전략 4	-	340	5,510	40,923	-	-	46,773
전략 5	175	8,389	28,830	35,466	13,100	134,745	220,705
전략 6	4,100	440	675	1,955	-	-	10,606



2018년 시행계획

I. 해사안전시행계획의 개요

II. 해양사고 현황 및 여건

III. '17년 성과 및 반성

IV. '18년 추진계획

V. 투자계획

목 차

I. 해사안전 시행계획의 개요	1
II. 해양사고 현황 및 여건	5
III. '17년 성과 및 반성	13
IV. '18년 추진계획	17
1. 선박안전 신뢰성 제고 및 맞춤형 안전관리	26
2. 자율적 안전관리 기반확대 및 해사안전관리체계 고도화	77
3. 범바다 안전의식의 획기적 전환 유도	134
4. 해상 종사자 역량제고와 고품질 복지 제공	156
5. ICT기반 첨단 해상교통 안전관리 체계 구축	184
6. 해사안전산업 글로벌 선도국가 입지 구축	216
V. 투자계획	234
[붙임] 1. 과제별 소요예산	236
2. 과제별 담당부서	244

I

해사안전 시행계획의 개요

I

해사안전 시행계획의 개요

- (의의) '해사안전 시행계획'은 범정부적 종합대책으로 '제2차('17~'21)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연도별 실천계획임

* 「해사안전법」 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계획의 범위) 우리나라 내수*, 영해, 항만, 해안, EEZ 및 대륙붕

* 한강 등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있는 강, 하천, 호수 포함

◆ (대상) 우리나라 국민과 국적선박, 영해·내수에 있는 외국적 선박, EEZ에서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외국적 선박 등

- (주체 및 체계)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광역시·도, 시·군·구) 및 공공기관**이 공동 참여

*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병무청, 기상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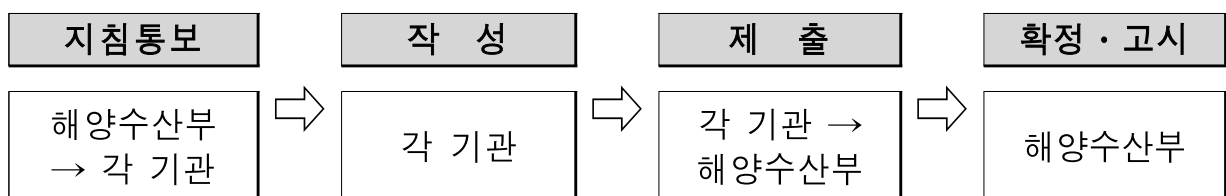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 항만공사, 수자원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환경관리공단

- (절차) 각 기관은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 기관별 시행계획 제출

- 해양수산부는 이를 종합·조정하여 각 기관에 의견조회를 거친 후 시행계획을 확정·고시

< 해사안전시행계획 수립절차 >



Ⅲ

해양사고 현황 및 여건

1. '17년도 해양사고 발생 현황
 2. '17년도 해양사고 증감 내용
 3. 해사안전 여건
-

II

해양사고 현황 및 여건

1 '17년도 해양사고 발생 현황

◆ '17년 해양사고는 2,582건(어선 1,778건, 비어선 804건), 사망·실종자는 145(어선 100명, 비어선 45명) 발생

*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전체) '17년 해양사고는 총 2,582건으로 전년 대비 11.9%(275건) 증가, 사망·실종자는 118명에서 145명*으로 22.9% 증가

< 최근 5년간 해양사고 발생 현황 >

(단위 : 건, 척, %)

구분	해양사고 건수			해양사고 발생 척수			인명피해(사망·실종)		
	계	어선	일반선	계	어선	일반선	계	어선	일반선
2,017	2,582	1,778	804	2,882	1,939	943	145	100	45
2016	2,307	1,646	661	2,549	1,794	755	118	103	15
2015	2,101	1,461	640	2,362	1,621	741	100	81	19
2014	1,330	896	434	1,565	1,029	536	467	133	334
2013	1,093	727	366	1,306	839	467	101	69	32
전년대비	275	132	143	333	145	188	27	△3	30
(증감률)	(11.9)	(8.0)	(21.6)	(13.1)	(8.1)	(24.9)	(22.9)	(△2.9)	(200.0)

* 국내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와 해외에서 발생한 국적선의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사망·실종)

□ (사고율) 전체 등록선박 대비 100척당 3.2척에서 사고 발생

< 최근 5년간 선박등록척수 대비 사고 현황 >

(단위 : 척, 천 톤, %)

구분	합계			일반선			어선		
	등록척수	사고척수	사고율	등록척수	사고척수	사고율	등록척수	사고척수	사고율
2017	76,049	2,410	3.2	9,079	471	5.2	66,970	1,939	2.9
2016	76,152	2,224	2.9	9,182	430	4.7	66,970	1,794	2.7
2015	77,691	2,072	2.7	9,274	451	4.9	67,226	1,621	2.4
2014	77,730	1,565	2.0	9,313	536	5.8	68,417	1,029	1.5
2013	80,647	1,306	1.6	9,360	467	5.0	71,287	839	1.2
전년대비	△103	186	0.3	△103	41	0.5	-	145	0.2
(증감률)	△0.1	7.7	9.4	△1.1	8.7	9.6	-	7.5	6.9

* 비어선 등록 척수는 선박법에 의거 산정되기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레저기구는 제외

** '17년 어선등록척수는 '16년말 기준

□ (선종별) 전년 대비, 어선은 8.1%(145척), 비어선은 24.9%(188척) 증가

< 최근 5년간 선종별 사고 현황 >

(단위 : 척, %)

구분	어선	비어선						합계
		소계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인선	기타*	
2017	1,939	943	46	127	73	91	606(472)	2,882
2016	1,794	755	65	116	67	77	430(325)	2,549
2015	1,621	741	66	115	65	94	401(290)	2,362
2014	1,029	536	51	111	51	102	221	1,565
2013	839	467	29	107	52	78	201	1,306
합계	7,222	3,442	257	576	308	442	1,859	10,664
5년평균	1,444	688	51	115	62	88	372	2,133
(비율)	(67.7)	(32.3)	(2.4)	(5.4)	(2.9)	(4.1)	(17.5)	(100.0)
전년대비	145	188	△19	11	6	14	176	333
(증감률)	(8.1)	(24.9)	△(29.2)	(9.5)	(9.0)	(18.2)	(40.9)	(13.1)

* 기타는 수상레저기구, 유도선(13인 미만), 항만작업선 등

□ (규모별) 100톤 미만 사고선박이 전체 사고선박 척수의 85.3%(어선 1,892척, 비어선 565척) 차지

< 2017년 선박규모별 사고 현황 >

(단위 : 톤, 척, %)

구분	5톤미만	5톤~10톤	10톤~1백톤	1백톤~1천톤	1천톤~1만톤	1만톤이상	미상	합계
어선	811	601	480	38	4	-	5	1,939
비어선	413	32	120	142	132	65	39	943
합계	1,224	633	600	180	136	65	44	2,882
(비율)	(42.5)	(22.0)	(20.8)	(6.2)	(4.7)	(2.3)	(1.5)	(100.0)

□ (시간별) 오전·오후(8~16시) 시간대 해양사고가 49.3%(1,273건) 발생

(단위 : 건)

구분	계	시 간 대					
		0~4	4~8	8~12	12~16	16~20	20~24
어선	1,778	145	345	457	386	282	163
비어선	804	40	75	191	239	199	60
전체	2,582	185	420	648	625	481	223

□ (유형별) 기관손상 > 부유물감김 > 충돌 사고 順으로 많이 발생

- 어선에서 가장 빈번한 사고유형은 기관손상으로, 전년 대비 6.5%(34건) 증가하였으며, 부유물감김은 10.7%(24건) 증가

< 2017년 해양사고 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구분	충돌	침몰	전복	좌초	화재 폭발	인명 사상	기관 손상	운항 저해	부유물 감김	기타	합계
어선	176	13	47	116	72	121	557	49	249	378	1,778
(비율)	(9.9)	(0.7)	(2.6)	(6.5)	(4.0)	(6.8)	(31.3)	(2.8)	(14.0)	(21.3)	(100.0)
비어선	82	16	18	33	24	39	281	82	62	167	804
(비율)	(10.2)	(2.0)	(2.2)	(4.1)	(3.0)	(4.9)	(35.0)	(10.2)	(7.7)	(20.8)	(100.0)
합계	258	29	65	149	96	160	838	131	311	545	2,582
(비율)	(10.0)	(1.1)	(2.5)	(5.8)	(3.7)	(6.2)	(32.5)	(5.1)	(12.0)	(21.1)	(100.0)

□ (해역별) 사고의 88.5%(2,285건)가 영해 內 연안수역에서 발생

(단위 : 건, %)

개 항 및 진입수로	건수(비율)	영해이상 수역	건수(비율)
인천항 및 진입수로	22 (0.9)	남해영해	958 (37.1)
장항, 군산항 및 진입수로	24 (0.9)		
대산항	3 (0.1)		
평택·당진항	10 (0.4)	서해영해	743 (28.8)
목포항 및 진입수로	31 (1.2)		
여수항, 광양항 및 진입수로	27 (1.0)	동해영해	279 (10.8)
삼천포, 통영항 및 통영해만, 견내량수로	17 (0.7)		
마산항, 진해항, 진해만(가덕수로)	5 (0.2)	남해공해	91 (3.5)
부산항 및 진입수로	52 (2.0)	서해공해	43 (1.7)
부산-거제수역(목포, 장승포항)	2 (0.1)	동해공해	128 (5.0)
울산항 및 진입수로, 포항항	52 (2.0)	일본수역	6 (0.2)
동해, 속초, 삼척항	4 (0.2)	동남아	23 (0.9)
제주, 서귀포항	26 (1.0)		
기타 개항	30 (1.2)	원양	6 (0.2)
소계	305 (11.8)	소계	2,277 (88.2)

□ (원인별) 재결결과 사고원인의 58.8%(233건 중 137건)가 운항과실이며 이중, 경계 등 항해 일반원칙 미 준수가 75.9%(104건)임

* 최근 5년간 운항과실 비율 : 어선 55.7%(331건), 비어선 44.3%(263건)

< 최근 5년간 해양사고 원인 현황 >

단위 : 건

구분		어선					비어선				
		'13	'14	'15	'16	'17	'13	'14	'15	'16	'17
운 항 과 실	충돌회피 규정 미 준수	7	3	9	11	8	4	3	5	5	6
	경계 등 항해 일반원칙 미 준수	41	61	43	55	65	39	50	42	40	40
	출항 전 준비 부적절	0	1	1	0	5	0	1	1	5	3
	직무명령 미 준수	0	1	2	9	7	2	0	3	3	0
	운항과실 기타	0	0	2	1	0	4	0	1	3	3
	소계	48	65	57	76	85	49	54	52	56	52
취 급 불 량 및 결 함	기관, 기기, 부속장치 조작 부적절	6	6	11	8	7	3	8	28	27	12
	재해방지 행위 부적절	10	13	22	17	20	6	13	16	11	8
	근로환경의 부적절	0	0	0	0	0	0	0	0	0	0
	기관의 구조 등 안전성 결함	2	2	0	0	3	1	5	0	0	8
	수로, 항만 등 시설의 부적절	0	0	0	0	0	2	1	0	1	3
	전기·하역설비 등 의장의 안전성 결함	5	6	8	3	10	2	2	1	1	4
	소계	23	27	41	28	40	14	29	45	40	35
기 타	선박운항관리 부적절	0	3	4	8	8	1	2	7	5	7
	불가항력	3	0	0	3	0	2	3	0	2	3
	기 타	1	0	2	1	2	0	0	0	2	1
	원인불명	0	0	3	0	0	0	0	0	1	0
	소계	4	3	9	12	10	3	5	7	10	11
합 계		75	95	107	116	135	66	88	104	106	98

2 '17년도 해양사고 증감 내용

□ '17년은 전년 대비 전체 해양사고건수 11.9%(275건) 증가* 하였으며,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 발생**

* 1,093건('13) → 1,330건('14) → 2,101건('15) → 2,307건('16년) → 2,582건('17년)

**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17.3), 낚시어선 선창 1호 충돌사고('17.12) 등

○ 어선사고가 전체사고의 68.9%(1,778건)를 차지(전년대비 8.0%, 132건 증가), 이 중 기관손상* 이 가장 많이 발생(전년대비 6.5%, 34건 증가)

* 기관손상 : 216건('13) → 252건('14) → 477건('15) → 523건('16) → 562건('17)

○ 비어선(레저선박 포함)은 전체사고의 31.1%(804건)를 차지하였으며, 레저선박, 예인선 등의 사고 증가*로 전년대비 21.6%(143건) 증가

- 전년대비 여객선(연안·국제)은 해양사고 발생건수 18.4%(12건) 감소

* 레저선박 : 325척('16) → 472척('17), 예인선 : 77척('16) → 91척('17)

○ 전체 해양사고의 88.5%(2,285건) 영해 내 연안수역에서 발생*하였으며, 100톤 미만의 소형선박**이 전체사고의 85.2%(2,457척) 차지

* 연안사고 : 895건('13) → 1,087건('14) → 1,843건('15) → 1,971건('16) → 2,285('17)

** 5톤 미만 : 1,224척(42.5%), 20톤 미만 : 721척(25.0%), 100톤 미만 : 512척(17.8%)

◆ 해양사고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 영해 內 연안해역에서의 어선과 레저선박 등 소형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연안·소형선박의 통항안전성 개선 및 인적과실 사고 예방, 연안에 적합한 항해 구명설비 개선 등 사고 예방 및 대응력 강화

-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낚시 등 레저이용자, 여객 등 이용자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해양사고 예방 및 해상생존교육 확대

3

해사안전여건

□ 해양수산분야 재난·안전관리 혁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 지속

- 해양에서의 대형 인명피해 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지속,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의 해양안전관리 혁신요구 증대 지속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17.3), 낚시어선 선창 1호 충돌사고('17.12) 등

인적과실 예방 등 기본에 충실한 안전관리로 정부정책 혁신

□ 해양이용수요 증가 및 다변화로 해사안전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 국민의 해양이용 다변화** 및 증가추이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을 연안해역을 향해하는 소형선박과 일반국민까지 확대·강화 필요

* 낚시어선 이용객 : 296만명('15) → 343만명('16), 레저활동 인구 : 443만명('15)→ 457만명('16)

연안항해 소형선박 안전관리 강화 및 일반국민 해양안전 의식 제고

□ 불안정한 국제정세·해운경기로 인한 선사의 안전관리 투자여건 위축

- 해운경기 회복 불투명 등 불확실한 시장여건으로 중소형 선사*의 자체 안전에 대한 투자저조 등 안전 여건 악화

* 국내 내항선사 중 581개사(76.9%)가 3척 이하 보유한 소형선사

선사의 안전관리 지원 강화 및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관리

□ ICT, 융복합 기술 등을 접목한 첨단 해사안전장비 개발수요 증가

- e-Navigation, 연료유·배기가스 규제,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등 해양 안전·환경보호를 위한 국제규제 확대

* 친환경 선박관련 규정 시행('13.1), 선박평형수관리 협약 발효('17.9)

선제적 기술개발 및 산업계 지원으로 국가 경쟁력·영향력 확대

Ⅲ

'17년 성과 및 반성

1. 주요성과
2. 아쉬운 점



III

'17년 성과 및 반성

1

주요성과

□ 다각적 안전대책 추진을 통한 해양사고 인명피해 최소화 도모

- 연안·국제여객선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대책 추진 및 안전의식 제고로 여객사고 “ZERO 화” 달성
- 해운업계의 자체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안전제일주의 문화를 확산시켜 지속적인 사고 감소를 위한 환경조성*

* 해사안전우수사업자 지정, 중소형선사 안전관리 컨설팅, 해양안전 공모전 개최 등

- 해사안전감독관을 통한 불시 지도감독 및 개선조치로 선박 안전관리 강화 및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

* '17년 지도·감독(여객선 1,641회 , 개선명령 1,448건, 항행정지 20척/ 화물선 1,492회, 개선명령 3,195건, 항행정지 29척/ 원양어선 210회, 개선명령 26건)

□ 지속가능한 해양수산분야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정보시스템 혁신

- 4개 항만공사 재난 관리 실태 등 재난안전분야 41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민관군 참여 재난 대응훈련(3회) 등 재난관리체계 구축

* 중앙행정기관 안전점검의날 추진 우수기관 및 재난관리 우수기관 선정

- 선박자동식별시스템 기지국 이중화를 통한 입출항 선박 AIS 수신율 개선, 웹 선박모니터링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한 이용편의 제고

□ 국제적 환경규제 이행 및 해사안전 신산업 창출

- 평형수처리장치 이동형 시험설비 준공식('17.9) 및 민간 상생협업체 운영으로 민관협업을 통한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원활한 이행 지원

- LTE-M 시험망 전파간섭 시험, 국제 공동 실험역 시험 및 한국형 e-Nav 핵심기술 시험모델 개발 등 차질없는 한국형 e-Nav 사업 추진

□ 선종별 선박안전기관과의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 유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해양안전 종합관리 T/F’ 운영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한 안전관리이행 실태 지속 관리

* 연안선박 비노출점검 실시('17.8.31~9.29) 등을 통해 현장 종사자 의견 청취 및 제도개선 등 정책착안사항 발굴(9건), 소관부서별 검토 및 개선 추진

2 아쉬운 점

□ 다각적 안전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 발생 지속

- 대형 인명사고* 발생에 따른 국민의 해양안전 불안감 증대, 선종별 관리주체별 안전기준 및 관리역량의 불균형 등 문제점 노출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17.3, 22명 실종), 낚시어선 선창1호 충돌('17.12, 15명 사망)

- 소형선 기관사고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콘텐츠 제작·배포* 등 지속적인 안전대책 이행에도 경미사고 발생 여전

* 기초안전수칙 준수 등 동영상 2편, 음주운항 예방 등 안전 포스터 3만부 제작배포('17.4)

□ 해양안전관리 강화 및 신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인력 확보 미흡

- 해양수산분야 재난상황관리, IMO 회원국감사, 지능형 해상 내비게이션 구축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전담인력 부족으로 적극적 업무 추진 한계

* 상황실 인력증원(3명) 등 전담인력 신규확보를 통한 업무 추진 강화 필요

IV

'18년 추진계획

1. 기본방향
 2.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3. '18년 핵심추진과제
 4. '18년 추진과제
 - 1) 선박안전 신뢰성 제고 및 맞춤형 안전관리
 - 2) 자율적 안전관리 기반확대 및 해사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 3) 범바다 안전의식의 획기적 전환 유도
 - 4) 해상 종사자 역량제고와 고품질 복지 제공
 - 5) ICT기반 첨단 해상교통 안전관리 체계 구축
 - 6) 해사안전산업 글로벌 선도국가 입지 구축
-

IV

'18년 추진계획

1

기본방향

- 제2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17~2021)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2차년('18년)도 전략별 이행계획 수립 등 기반정립



- 기본에 충실한 안전관리로 정부정책을 혁신하는 한편, 국민의 해양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참여형 체험교육·캠페인 중점 확대

* 여객과 화주 등 이용자 관점의 안전관리 및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교육 중점추진

- 선박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선박검사 제도를 선진화하고, LNG, LPG 등 친환경 연료 선박 보급 기반 조성

* 임시승선자 범위,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도 보완 및 친환경 선박 구조기준 개정 등

- e-Nav, 선박배출 대기오염 저감 기술 등 미래 먹거리 기술을 선도하고, 인명피해 저감기술 등 첨단 안전환경 기술 적극 개발

* LTE-M 통신망과 e-Nav 핵심 서비스 통합 시험체계 구축 및 인적과실로 인한 인명 피해 저감기술과 선박 안전성 평가 기술 등 개발

- 해사안전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해양산업 국익창출

* 개도국 해사안전 인프라 구축 지원, 양자회의 내실화 및 해사보안 역량 증진을 위한 공조 강화

2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비전

대형 해양사고 없는 보다 안전하고 친근한 바다이용

**주요사고* 30%
감소('18년 196건)**

<1차 계획('12~'16) 평균 223건>

**사망자 수 30%
감소('18년 106명)**

<1차 계획('12~'16) 평균 121명>

**대형 해양사고
Zero 화**

<1차 계획('12~'16) 평균 0.8건>

전 략

추진 방향

선박안전

선박안전 신뢰성 제고 및
맞춤형 안전관리

기본과 이용자 중심의 해사안전관리, 연안선박,
어선 안전관리 강화, 선박검사제도 선진화 도모

안전제도

자율적 안전관리 기반확대
및 해사안전관리체계 고도화

관계기관 협업강화, 현장 안전관리 이행력 제고
및 자발적 안전관리 체계 정립, 재난관리 역량강화

의식개선

범바다 안전의식의
획기적 전환 유도

다각적 범바다 안전 캠페인 전개, 국민참여형 해양
안전교육 확대 및 생활밀착형 해양안전체험 확대

의정안전

해상 종사자 역량제고와
고품질 복지 제공

맞춤형 안전교육 체계 정립, 어선 종사자 안전역량
제고, 고품질 선원복지 서비스, 우수해기사 지속 양성

교통환경

ICT기반 첨단 해상교통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해역별 맞춤형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좁은 연안
수로 통항 안전성 신뢰도 제고, e-Navigation 실현

국제협력

해사안전산업 글로벌
선도국가 입지 구축

해사안전분야 국제협약 대응 능력 및 해사안전 글로벌
선도역량 제고, 해사안전산업 세계시장 주도역량 강화

* 주요사고 : 인명사상, 선박전손, 해양오염(1천 킬로그램)을 초래한 사고(중해심 통계 기준)

3 '18년 핵심추진과제

핵심 1 연안선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안전 대책 수립 추진

□ 추진배경

- 최근 해양활동* 증가로 전체 선박사고의 약 84.5%가 연안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낚시어선, 레저선 등 소형선이 87.1%로 대부분 차지

* (레저선박) ('14) 12,985척→('15) 15,172척(16.8%↑)/(여객) ('14) 14,271천명→('16) 15,420천명(8.1%↑)

- ☞ 원양을 향해하는 대형선박과 전문직업인 위주의 안전정책을 연안 해역을 향해하는 소형선박과 일반국민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주요내용

<사고 예방력 강화>

- (수로안전 강화) 연안 수로개선 및 정보제공 강화를 통한 전자해도 개선
 - * 통항안전성 평가, 해역이용자 간담회, 항행주의·어로금지해역 정보 전자해도 제공 등
- (다발사고 개선) 인적과실 및 소형선 기관고장 사고 예방 제도개선
 - * 승무정원 산정방식 및 다중이용선 면허 교육기준 재검토, 맞춤형 교육체계 마련 등
- (확인활동 강화) 현장중심, 이용자 관점의 선박안전점검 강화
 - * 안전수칙 준수 확인 비노출 지도·감독 강화 및 선박안전분야 옴부즈만 제도 운영 등

<사고 대응력 강화>

- (사전교육 강화) 일반국민·종사자의 체험형교육 강화 및 신규 콘텐츠 개발
 - * 워터파크 연계 해양안전체험시설 구축 및 가상현실(VR) 기반 교육교재 개발 등
- (안전설비 개선) 연안 항해선박 특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기준개선
 - * 구멍뚫목·구멍조끼 등 선박구멍설비 및 충돌방지·야간운항 지원 항해장비 등
- (대응체계 개선) VTS 적용수역 확대 검토, 비상시 협조 체계 강화
 - * 소형선박 항해하는 연안수역까지 확대, 지방청 관할 관공선 긴급투입 등

□ 추진계획

- 연안선박 해양사고 예방 종합안전 대책 마련 : '18.2월

핵심 2

해사분야 민간자율안전관리 기반 조성

□ 추진배경

- 정부의 선박검사·안전점검 이외에 민간이 참여하는 ‘옴부즈만제’를 해사안전분야에 도입하여 안전문화 확산 기여
- 안전 활동의 근간인 해사안전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싱크탱크(법제포럼) 필요

□ 주요내용

- (옴부즈만) 민간의 해사안전분야 참여의식 확산과 민간 자율적 정화 기능 강화를 위해 국민참여 감시제도 운영 추진
 - 여객선 분야 국민안전감독관 운영 및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여객선 안전관리 개선방안 도출 등 국민참여 활성화 계기 마련
 - * 청렴, 민원, 원자력안전분야 등에서 종사자, 전문가 등을 옴부즈만으로 위촉
- (법제포럼) 해사안전분야 학회(해사법학회, 해법학회 등), 연구원(한국 법제연구원 등) 등 각계 법제 전문가 참여하는 학술포럼 구성
 - 해사안전 관련 법령*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공동으로 개선 방향 모색 추진(年 2회 세미나 개최)
 - * 해사안전법, 선박법, 선박안전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및 국제협약 등
 - ** 우리부는 가칭 ‘해사안전법제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 추진계획

- 연안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 ‘18.상
- 포럼 구성·운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창립 : ‘18.상

핵심 3**용도변경 화물선, 노후선박 중점 안전대책 강화****□ 추진 배경**

- 스텔라데이지호 사고('17.3.31)를 교훈으로 삼아 유사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박소유자 안전운항 의무 확대 등 개선대책 수립·추진

□ 주요 내용

- 선박검사 이후 철저한 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선박소유자의 안전운항 책임 강화 필요

- 선박소유자의 안전운항 의무 위반 또는 선박검사 후 상태유지 의무 위반으로 대형사고 유발 시 이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18.下)

* 「선박안전법」 제83조 개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신설

- 선박검사원 자격요건 정비, 복무기준 강화, 직무훈련·윤리교육 강화 등으로 선박검사 신뢰성 제고(하위법령 개정, '18.5월)

- 이해관계자 직무 회피규정 운영 의무화, 장기간 연속근무 제한, 윤리강령 운영 및 임직원 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등 시행

- 용도변경 허가절차* 및 검사기준 강화** 추진으로 국제협약 보다 더 엄격한 검사 집행방안 마련(고시개정, '18.下)

* 용도변경·개조계획 사전검토 등 「선박안전법」에 따른 변경허가절차 강화

** 선령에 따른 현장 검사원 증원, 두께측정범위 확대 및 검사대상 확대 등

- 「친환경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16.9월, 상임위 계류 중) 조속 입법 등을 통해 재정지원근거 마련

□ 향후 추진계획

- 선박안전법('18.6월 국회 제출), 하위법령 등('18.5월 공포) 개정 추진
- 국적선사 노후선박 조기 대체건조 유도(~'21년)

핵심 4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구축 및 시범운영 추진

□ 추진배경

- 전국 연안에서 100km 해역까지 통신이 가능한 초고속 해상무선 통신망(LTE-Maritime) 구축* 등 ‘한국형 e-Nav 사업**’ 추진 중

* 국정과제 62-⑤ ‘첨단기술을 접목한 해양 예경보 시스템 신뢰도 제고’ 세부과제3

** 기간/사업비/내용 : ‘16~’20(5년) / 1,308억원 / 핵심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 주요내용

- LTE-M 통신망 1단계(동·서해권) 구축

-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최적 구축방안 도출 및 동해·서해권 기지국 구축(기지국 388개/191억원)

* 관계부처 합동 UHD 전파간섭 시험 및 영향 평가결과 반영(‘17.12~’18.1)

- 육·해상 재난안전 정보의 통합 서비스를 위한 LTE-M 통신망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PS-LTE)간 연계 시험

- e-Nav 서비스 국내·국제 Test-Bed 구축·운영

- 한국형 e-Nav 서비스*의 적정성 검증·고도화 방안 도출을 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축·운영(‘18.3,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전자해도, 최적항로, 기상정보, 충돌예측 정보 등 6종 서비스 개발 중

- e-Nav 서비스 국제 Web 포털 및 국제정보공유시스템 구축·운영

* 한국형 e-Nav, 국제브랜드화 및 국제표준선도(IMO·IHO e-Nav 표준회의 의장국)

□ 추진계획

-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구축 사업자 선정 : ‘18.9월
- LTE-M 통신망 1단계 구축 추진 : ‘18.10월

핵심 5**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 구축·운영**☐ 추진배경

- 해양레저 저변확대와 여객선 이용증가 등 일반인의 해양활동 증가에 따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해양안전 체험교육 필요

* (레저선박)('14) 12,985척→('15) 15,172척(16.8%↑)/(여객)('14) 14,271천명→('16) 15,420천명(8.1%↑)

- 구명조끼, 구명뗏목 작동법 등 기초안전수칙만 숙지하여도 스스로 생명보호가 가능한 데, 이를 체험·교육할 수 있는 공간 부족

* '20년 개장을 목표로 전문체험관(안산, 진도)을 건립 중이나 전국적 체험기회 제공 미흡

☐ 주요내용(세부과제 '붙임' 참조)

- (추진내용) 워터파크와 연계한 “해양안전체험시설 운영”,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버스 운영” 등 5개 분야 10개 세부과제 수립·시행

- 접근성 향상 등 폭넓은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놀이형(2), 이동형(2), 현장형(2), 거점형(2), 이벤트형(2) 등 5개 분야로 과제를 추진

- (추진방향) ‘해양안전교실’ 등은 체험교육을 강화('18.1월~)하고, 신규 사업*은 소요예산 확보 등 단계적 사업추진('18년~'19년)

* 워터파크 해상생존체험장·안전전시관, 안전체험버스, 청소년 진로프로그램 등 6개 과제

- 예산확보 용이 등을 위해 “워터파크 연계 해양안전체험시설 운영 사업”은 상록리조트(천안)와 연계하여 시범사업 추진('18.1월)

☐ 추진계획

- 천안 상록워터파크 해양안전체험시설 시범운영 : '18.1월~

* 사업별 소요예산 확보 및 단계적 사업 추진 : '18년 상~

붙임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 구축·운영 방안’ 세부과제

○ (5개 분야 10개 과제) 소요예산 : 총 29.8억원 /(*) 신규사업 : ‘19년 예산 확보(19.8억원)

추진 과제	주요 내용	소요예산
□ 놀이형 해양안전체험		
① 워터파크 물놀이장 內 해상생존체험장 운영	◦ 상록워터파크 시범사업('18.1) ◦ 전국 광역시·도로 사업 확대('19)	5억원* (17개소)
② 물놀이시설 등 위락시설 內 해양안전전시관 운영	◦ 상록워터파크 시범사업('18.1~) ◦ 전국 광역시·도로 사업 확대('19)	3.4억원* (17개소)
□ 이동형 해양안전체험		
③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버스 (BUS)’ 운영	◦ 체험버스 차량 제작·운영('19~)	5억원* (1대)
④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체험교육 강화	◦ 초중고교, 일반단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장비 체험프로그램 강화('18)	5억원 (5만명)
□ 현장형 해양안전체험		
⑤ 선박해설사를 통한 여객 대상 안전설비 현장교육	◦ 선박해설사 교육·운영('18~) ◦ 인사혁신처 프로그램 제안('19)	1억원 (4명)
⑥ 내항선 지도·감독 시 안전 장비 시연 확대	◦ 구명뗏목 팽창 시연, 구명신호기 등 안전설비 시연 확대('18)	2억원 (110회)
□ 거점형 해양안전체험		
⑦ 지역별 기초해양안전체험관 설치·운영 지원	◦ 전국 광역시도 대상 공모사업으로 해양안전시설·장비 지원('19)	3.4억원* (17개)
⑧ 기초해양안전체험관 VR 기반 체험콘텐츠 확충	◦ VR기반 교육프로그램 개발('17.12) ◦ 체험교육 콘텐츠 확충('18)	2억원
□ 이벤트형 해양안전체험		
⑨ 해양안전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강사 확보 및 협력업체 MOU체결('18)	0.6억원* (6회)
⑩ 현장에서 함께하는 해양 안전홍보관 운영	◦ 지역행사 및 피서철 해수욕장 등 해양안전 홍보부스 운영 등('19)	2.4억원* (130회)

4

'18년 추진과제

1. 선박안전 신뢰성 제고 및 맞춤형 안전관리

☐ 여객선, 유도선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로 대형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 연안선박 종합대책에 포함하여 추진과제 지속관리, 불시점검 확대 등

☐ 안전문화 확산, 안전 인프라 확충, 안전규정 강화를 통해 어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안전한 우리바다를 만들겠습니다.

* 구명조끼 착용 및 안전점검 생활화, 구명·소방·통신 등 안전장비 보급 확대, 복원성·만재흡수선 기준 강화, 어선 불법 증·개축 상시 점검·단속 등

☐ 선박구조·시설에 대한 검사기준 및 집행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안전성을 향상하고 위해요소를 사전 제거 하겠습니다.

* 대항검사기관 품질경영 시스템 도입, 선박소유자 검사이후 책임강화, 선박 구조 등 변경허가 절차 명확화 등을 통해 선박 검사 신뢰도 제고

☐ 위험물 컨테이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 위반율이 높은 선적국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수출입 위험물 안전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등

☐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연안선박 이차보전사업 등 선박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현대화 펀드 : 카페리 여객선 1~2척 신조, 이차보전사업 : 연안선박 7~8척 이상 신조

☐ 국제여객선의 항로별·선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안전대책 시행과 국제공조활동 확대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일반국민과 외국점검관 참여 및 동승점검 등을 통한 점검형식 다변화 추진

1-1

현장중심의 선종별 취약요인 집중안전관리 추진

1-1-1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여객선, 유도선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선박은 전국적으로 약 2,600여척에 이르고 있으며, 연간 3천만명* 이상이 이용

* 레저인구 증가 등 국민의 해양이용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 다중이용선박의 이용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 기 수립된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혁신대책'('16.1)의 지속적 이행 및 추진 지연과제에 대한 재점검 필요

□ 추진계획

◆ 기존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지속적인 이행·환류 및 연안선박 해양안전 종합대책 마련을 통한 대형인명사고 사전예방

- “연안선박 해양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18.2) 미결과제를 본대책에 포함하여 통합관리하는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지속
-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안전관리 이행실태 현장점검 추진(반기별)
 - 각종 안전대책의 실효성 확보방안 등 개선과제 발굴 병행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div>○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점검 대상별 1~2회 지도·감독 실시하고 정기·수시 비율은 4:6정도 유지(총 18회)</div> <div><div>- 여객선 및 사업자는 정기·수시감독, 운항관리자는 정기감독 실시</div><div>- 화물과 차량의 적재·고박상태, 기관관리 실태 등을 중점점검 하고, 불시점검을 통하여 ‘가공된 현장’ 이 아닌 실제 운항 실태 확인</div></div> <div>○ 구멍뚫목 시연 및 소화기 작동 교육훈련 계획</div> <table><tr><td>계</td><td>여객선</td><td>화물선 (일반)</td><td>화물선 (급유)</td><td>원양 어선</td><td>기타</td><td>계</td></tr><tr><td>구멍뚫목</td><td>2척</td><td>3척</td><td>3척</td><td>0척</td><td>0척</td><td>8척</td></tr><tr><td>소화기</td><td>2회</td><td>2회</td><td>3회</td><td>10회</td><td>5회</td><td>22회</td></tr></table> <div>* 소화기 : 케미컬 또는 FOAM 및 CO2 소화기 각 1개/회</div>	계	여객선	화물선 (일반)	화물선 (급유)	원양 어선	기타	계	구멍뚫목	2척	3척	3척	0척	0척	8척	소화기	2회	2회	3회	10회	5회	22회
계	여객선	화물선 (일반)	화물선 (급유)	원양 어선	기타	계																
구멍뚫목	2척	3척	3척	0척	0척	8척																
소화기	2회	2회	3회	10회	5회	22회																
여수청	<div>○ 다중이용선박의 승무원 안전의식 및 역량강화</div> <div><div>- 해사안전감독관 지도·감독 시 안전교육 및 비상대응교육 실시</div></div> <div>○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의 안전의식 강화(연 1회)</div> <div><div>- “여객선 안전, 함께 海 보아요“ 캠페인을 통한 대국민 홍보</div><div>* 해양안전실천 지역본부 활동과 연계, 해양안전의 날 행사와 병행 실시</div><div>- 출항 전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 실시</div><div>* 구명설비 이용법 등 시청각 자료 제공 및 운항관리자 교육 실시</div></div>																					
마산청	<div>○ 다중이용선박의 승무원 안전의식 및 역량강화</div> <div><div>- 해사안전감독관 지도·감독 시 안전교육 및 비상대응교육 실시</div></div> <div>○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의 안전의식 강화(연 1회)</div> <div><div>- “여객선 안전, 함께 海 보아요“ 캠페인을 통한 대국민 홍보</div><div>* 해양안전실천 지역본부 활동과 연계, 해양안전의 날 행사와 병행 실시</div><div>- 출항 전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 실시</div><div>* 구명설비 이용법 등 시청각 자료 제공 및 운항관리자 교육 실시</div></div> <div>○ 여객선 안전 민·관 합동연구회 운영(분기 1회)</div> <div><div>- 여객선 안전과 관련한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div></div>																					
군산청	<div>○ 다중이용선박 승무원 및 이용객 안전의식 강화</div> <div><div>- 승무원 안전의식 및 역량강화를 위한 비상대응훈련 연 2회 실시</div><div>* 여객선 선원 대상 소화·퇴선훈련, 구멍뚫목 투하훈련 및 구명·소화설비 시연</div></div> <div>○ 승선 중 좌석착석, 차도선 차량선적 후 운전자 객실이동 등 승객의 안전수칙 준수 및 해양 선박사고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div> <div><div>* 명절 연휴, 하계 휴가철 등 여객이용 집중시기 대비 캠페인 진행</div></div>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하계 관광수요(강원권) 증가 등 강원 해역 여객선 이용인원 증가를 고려한 여객선 안전점검 실시 ○ 선원·승무원이 참여하는 주기적인 소화·퇴선훈련 실시로 안전역량 강화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선박 승무원 및 이용객 안전의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무원 안전의식 및 역량강화를 위한 비상대응훈련 연 2회 실시 * 여객선 선원 대상 소화·퇴선훈련, 구명뗏목 투하훈련 및 구명·소화설비 시연 - 승선 중 좌석착석, 차도선 차량선적 후 운전자 객실이동 등 승객의 안전수칙 준수 및 해양 선박사고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 명절 연휴, 하계 휴가철 등 여객이용 집중시기 대비 캠페인 진행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여객선 정기·수시감독을 통한 중점 지도·감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기별 1회 정기 및 연 1회 이상 수시감독을 통한 여객 관리, 차량 고박상태 ○ 카페리여객선 연2회 봄철 취약시기 및 동계대비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시행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훈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여객선 승무원을 대상으로 선내비상훈련(소방훈련, 구명뗏목, 비상 조타 등) 실시여부, 기록상태 및 비상대응임무 숙지 확인 ○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대상 해양안전의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국제여객선, 이용객 및 종사자 대상 구명설비 시연회를 개최하여 안전의식 함양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선박 승무원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캠페인 등 해양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통해 안전의식 강화 및 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설비 시연회,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출항 전 안전점검, 안전교육, 비상대응훈련 실시 및 해양안전문화 확산 추진 ○ 연안여객선 및 사업장 지도·감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사안전감독관의 연안여객선 분기별 점검과 특별점검 실시 ○ 연안여객선과 내항선 선원을 대상으로 안전설비 시연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사안전감독관 입회하에 구명뗏목 개방, 소화기, 신호탄 등 시연 ○ 연안여객선 운항관리규정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선(백화산호) 대체선에 대한 운항관리규정 서류 및 현장 심사 ○ 태안어업정보통신국,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수협, 기상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캠페인 및 안전교육 실시(연 4회)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전라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낚시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인 점검으로 사고 개연성 사전차단 ○ 안전관리 현실화 및 안전설비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사고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및 면허 허가·갱신 시 안전 관리 계획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제도 도입 시 의견 송부 ○ 낚시어선 국가안전대진단 및 봄철 어선사고 예방 합동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업 량 : 230척(군산 160, 고창 6, 부안 64) - 점검내용 : 통신장비, 기관설비, 구명설비, 소방설비, 항해 설비, 안전설비 등 * 합동점검반 : 지자체(도, 시·군), 군산·부안해양철서, 선박안전관리공단, 전북지부, 군산어업정보통신국
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선 안전운항 제고를 위한 주기적인 지도감독 및 계절별, 시기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별점검 추진(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합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하계 관광수요(강원권) 증가 등 강원 해역 여객선 이용인원 증가를 고려한 여객선 안전점검 실시 - (연안여객선) 지도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상별 3회 이상 점검 및 하계, 추석 등 시기별 특성을 고려한 특별점검 실시 * (선박·사업장) 정기 2회, 수시 1회(5척, 2개소) / (운항관리자) 정기 4회 - (국제여객선) 국제여객선 다국적 승객 안전을 위한 소화·구명설비 집중점검 및 크루즈선박 입항 시 현장 안전점검 실시(분기별) * ‘18년 동계올림픽 대비 국제여객선 점검주기 확대(반기별→분기별) 선원·승무원이 참여하는 주기적인 소화·퇴선훈련 실시로 안전역량 강화
경상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낚시어선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 낚시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대상 : 도내 주요 항·포구 80개소(국가어항 19, 지방어항 61) * 창원 5, 통영 21, 사천 5, 거제 24, 고성 5, 남해 16, 하동 3 - 추진기관 : 도, 시군, 해경, 수협, 어업인 등 - 추진방법 : 매월 1일 “안전점검의 날” 지정, 유관기관 합동 현수막 게시 및 캠페인 전개(자정노력 유도) - 주요내용 : 낚시어선 안전점검 생활화,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캠페인 ○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단속)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대상 : 도내 낚시어선 1,036척 * 창원 245, 통영 254, 사천 113, 거제 259, 고성 28, 남해 122, 하동 15 - 추진기관 : 도, 시군, 해경, 선박안전기술공단, 어업정보통신국, 수협 - 추진방법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안전대진단 시, 도내 낚시어선 합동 안전점검 확대 실시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방법) 5톤 이상 합동 점검, 5톤 이하 자체 점검 실시 · 성수기 안전저해행위 해상 불시 점검 · 단속 강화(해경합동) · V-Pass 이용 위치확인, 5톤이상 낚시어선 전용선 특별관리(관심선박 지정) - 주요내용 : 낚시어선 안전 확보 사항, 성수기 안전저해행위 등 ·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신고, 승선정원 초과,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 유관기관 협업강화(위기관리 네트워크 구축) - 협업기관 : 도, 시군, 해경, 선박안전기술공단, 어업정보통신국, 낚시어선업자 - 추진방법 ·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2회) : 안전관리 간담회, 안전종합대책 수립 협의 · 정책간담회 개최(2회) : 도, 시군, 해경, KST, 정보통신국, 어업인 · 온나라 PC영상회의(도 및 시·군) 개최(수시) · 성수기(봄·가을) 위법행위 합동 단속(해경 주관, 1,036척) - 주요내용 : 협업방안 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저해행위 단속 ○ 낚시어선 안전운항 조치 확대 - 낚시통제구역 지정 : 7개소(남해, 창원) - 안전의무 제시 확대(영업시간 제한, 구명조끼 착용) : 7개 시군 - 이동수리서비스 우선 지원(14만원 내 부품 무상 지원) → 338개 어촌계 ○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 확대(워크숍, 결의대회) - 참석대상 : 도, 시군, 선박안전기술공단, 어업정보통신국, 어업인 - 추진방법 · “안전점검의 날” 스티커 제작 배포 : 1,036척(100% 부착) · 낚시전문교육 추진 확대 : 1,800명 ·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홍보 활동 강화 : 8회 ○ 스마트폰 밴드(BAND) “낚시안전海” 지속운영 - 대상 : 도·시군·해경 담당공무원, 선박안전기술공단·어업통신국·수협, 낚시어선업자 등('17년 100명 → '18년 200명 확대) - 운영계획 · 道 에서 BAND 개설, 민·관·경 관계자 참여 유도 · 안전관련정보(검사·점검일정) 신속 제공으로 적극적 참여 유도(불만해소) · 출항 前부터 입항 時까지 단계적 정보 공유로 안전사고 예방 · 낚시어선업자 의식전환과 자율적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 유도 · 낚시어선 안내표지판 설치 확대 - 설치대상 : 도내 주요 항·포구(국가 및 지방어항)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면 유선(낙동강생태탐방선) 안전관리 강화 ○ 내수면 낙동강 유선(낙동강 생태탐방선) 재난(안전)사고 예방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유·도선(낙동강 생태탐방선)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 유·도선 사업자·선원·기타 종사자 실무교육 실시 - 유·도선 비상상황 대비 훈련 지도·점검 실시 - 유·도선 안전관리 현장 지도·점검 실시 - 낙동강 유·도선 일일 운항 점검 및 정보공유 ○ 다중이용선박(낚시어선)의 안전관리 강화 ○ 관내 등록 낚시어선 분기별 안전점검으로 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어선안전점검반 안전점검 실시 - 분기별 자체 안전점검 지속적 실시(어선안전점검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 분기 내 신고 낚시어선 전체 점검 실시(504척) * ‘17년 1분기 170척(국가안전대진단 대체), 2분기 167척, 3분기 167척 * 안전장비 비치현황(구명조끼, 소화기 등), 보험 또는 공제가입 여부, 해기사 면허 소지 여부 등 - 국가안전대진단 실시(낚시어선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실시(170척 : 합동 24, 자체 146) * 해양수산부, 부산시, 구·군, 해경, KST, 어업정보통신국 등
인천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등록 낚시어선 분기별 안전점검으로 선박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어선 안전점검반 안전점검 지속 실시 ○ 관내 낚시어선 자체 안전점검 지속적 실시(어선안전점검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장비 비치현황(구명조끼, 소화기 등), 보험 또는 공제가입 여부, 해기사 면허 소지 여부 등 ○ 국가안전대진단 실시(낚시어선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실시 * 해양수산부, 인천시, 군·구, 해경, 선박안전기술공단
전라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무원 및 이용객의 안전의식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 道 차원의 연안여객선 컨트롤 타워 구축으로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각 유관기관 및 선사,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라남도연안여객선 협의체’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 정례 회의(연2회)를 통해 선사 및 승무원, 운항관리자의 안전의식 강화 교육 병행 실시

1-1-2

노후선 안전관리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노후선박의 경우 주요설비와 선체의 결함발생률이 높고, 소형선의 경우 검사 후 상태유지가 어려워 집중 안전관리 필요

* 일반선 기준, 선령 20년 이상 노후선박이 전체의 56.5%(5,190척) 차지

□ 추진계획

◆ 노후선박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선체·주요설비에 대한 강화된 검사·점검 시행, 검사기준 개정 등으로 사고 개연성 사전차단

- 노후 국제여객선에 대한 안전점검체계 다각화
 - (20년 이상) 기관고장 사고예방을 중점으로 정기점검 실시('18.3월, 9월)
 - (25년 이상) 한·중 선박검사관 합동점검 추가 실시('18.4월)
- 20년 이상 일반선박의 취약분야 중점점검 및 검사 시행
 - 기관사고 다발부위 및 화재취약 장비, 선체 피로도 등에 대한 중점점검 실시
 - 검사 시 기관설비 일상점검 요령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규모횡수 등 형식적이고 정형화된 점검방식을 벗어나, 실제 여객, 화주 및 선원 등 이용자 관점에서의 불시점검 시행
 - * 여객선유도선 등에 여객으로 승선하여, 여객 관점의 점검 시행(수시)
 - 점검시 여객 및 화주 등 이용자로부터 점검관련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법령의 한도내에서 수요자의 요청사항을 최우선 개선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항화물선 안전관리상태가 우수(사고無, 결함건수小)한 사업장·선박은 정기감독, 안전관리가 불량한 감독대상은 수시감독 위주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감독은 월 4회(총 48회), 수시감독은 월 17회(총 204회) 실시하고, 2인 1조로 총 252회 지도·감독 (정기 3 : 수시 7) - 감독실적 분석결과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선사(선박)은 감독횟수 저감 등 인센티브 부여하고, 불량한 선사(선박)은 불시감독 실시 【제주해양수산관리단】 ○ 내항선 점검목표 척수 : 110척 ○ 내항화물선 안전점검 :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대상 : 제주·서귀포항 및 연안항(4) 입항 내항화물선 - 점검내용 : 선체·기관 및 ISM 이행여부, 해양사고 예방교육 등 ○ 내항여객선 합동 안전점검 : 분기별, 설·추석 특별수송기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대상 : 제주항 및 산이수동·모슬포항 입출항 여객선 9척 - 점검기관 :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제주·서귀포해경, KST, 한국선급 - 점검내용 : 선체·기관 및 구명·소화설비 등 ○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결함 발견 시 항해정지, 경미한 결함은 기한부 시정지시 - 선체 부식·파공 등 선박검사 관련 결함은 해당 검사기관에 통보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소재 내항 화물선 사업자·선박 대상 연간 48회 정기감독, 계절별 안전대책 중점으로 선박 위주로 수시감독을 연간 120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시 선체상태, 복원성 유지, 화재·인명사고 예방실태 점검 및 교육 병행 실시 ○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지 제고 및 점검의 실효성을 위해 수시감독시 지방청간 교차감독 수행 ○ 점검 결과, 문제 사업자 및 선박에 대해서는 불시감독 병행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선박에 대한 해사안전감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항여객선 및 내항화물선에 대한 감독 강화 및 방선 시 선체·기관·구명설비 등 일상점검 요령 교육 실시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소형선박의 선체·주요 설비상태 집중점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령 20년 이상인 선박의 점검을 연간 2회 이상 시행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항 및 감항 감독관 합동점검을 원칙으로 시행 - 선원에 대하여 안전운항 및 선원법 등 관련 법규 교육시행 - 비상대응훈련·비상대응 능력 파악, 미비한 부분 교육시행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운법」, 「항만운송사업법」 등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내항화물선 및 노후 연안여객선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 * '18년 해사안전지도감독 계획에 따라 추진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령 20년 초과 연안여객선 모니터링 및 특별점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선박 지정, 운항관리센터 선박 모니터링 및 해사안전 감독관 수시 안전점검 횟수 증가 등 특별점검 강화 * 대상 : 옥도훼리호(22년, 169톤, 군산-선유도 운항) ○ 해사안전감독관 내항화물선 점검대상 선정 시, 입항선박 중 선령 20년 이상 노후선박 우선점검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령 20년 이상인 선박의 점검을 우선 점검하고 가능하면 연간 2회 이상 시행 ○ 선체 및 주요설비의 노후상태에 대한 집중점검 및 승무원 대상 안전교육 병행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사안전감독 강화를 통한 노후선박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항 취약선(예·부선, 위험물운반선, 유·도선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집중적으로 선박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최선 ○ 노후선박의 선체·주요 설비상태 집중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체 및 주요설비의 노후상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행하고 해당 선박의 승무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병행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령 20년 초과 연안여객선에 대한 특별관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사안전감독관의 특별점검과 불시점검 강화, 선체 및 주요 설비의 노후상태에 대한 집중점검 및 승무원 대상 안전교육 병행 ○ 항내운항 노후 소형선박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특별점검 시행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효율 기관·장비·설비 대체로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418백만원 - 사업지 : 연안 3개 시(화성, 시흥, 평택) - 사업량 : 기관 14대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저효율 노후기관 교체, 설치하고자 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 - 추진상황 : 사업자 선정(1~3월) → 수협 공동구매 신청 및 설치(4~12월) → 준공검사 및 보조금 지급(5~12월)
부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절감, 선원복지 공간 확충, 경영개선을 통한 어업경쟁력 강화 및 연관 산업 활성화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부가가치 증대 ○ 근해어선 현대화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 대형선망 - 사업내용 : 6,000백만원(응자 3,720, 자담 2,280) - 지원조건 : 개인(고정2% 또는 변동), 법인 3%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국비10억원(이차보전)

1-1-3

선박안전관리 통합운영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선종별 안전관리 기관이 개별적인 안전점검을 이행하고 있으나, 일관된 점검기준의 부재와 중복점검 등으로 선사·선원의 부담 가중
 - 통합적 안전점검 이행을 통해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 필요

□ 추진계획

◆ 통합운영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의 추진

- 해양수산부(여객선), 해양경찰청(유도선, 레저선박), 지자체(어선, 낚시어선) 간 통합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 실무협의 추진
 - 안전관리 주체별 시기별로 중복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선박안전점검의 통합적 운영* 방안 논의(우리부,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 * 안전관리 주체별·시기별 선박안전점검을 통합할 수 있는 부분과 개별법에 따라 단독 수행이 필요한 부분으로 구분, 안전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 및 지원 방안 논의
 - 지자체 등 선박 안전관리 인력 부족기관에 대한 전문성 지원 및 합동점검을 통한 중복점검 민원 해소(연중)
 - * 해양안전종합관리 TF 회의 논의안건으로 선정하여, 점검시기, 합동점검반 구성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 협의 후 시행('18.下)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적 선박 안전관리체제 구축 및 유관기관간 주요 안전정책 공유·협력을 위한 협업체계 운영(해양안전종합관리 TF)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협조사항 지속 발굴 및 정책반영 요청 ○ 계절별 해상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4회 계절별 해양사고 취약요인 분석, 중점 안전관리 방안 및 유관기관 협조사항 수립·전파 * 해양경찰서, 검사기관(KR, KST), 어업정보통신국 등 합동대책 마련 - 계절별 광역·지역해상수난구호대책회의 및 연중 해양사고 저감 TF팀 운영 협조
전라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기관별로 시행되고 있는 선종별 안전점검의 통합 운영으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점검의 효율성 확보 ○ 통합적 선박 안전관리체제 구축 및 유관기관간 주요 안전정책 공유·협력을 위한 협업체계 운영(해양안전종합관리 TF)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안전대책 관련 기관별 협조사항 지속 발굴 및 정책반영 요청 ○ 계절별 해상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4회 계절별 해양사고 취약요인 분석, 중점 안전관리 방안 및 유관기관 협조사항 수립·전파 * 해양경찰서, 검사기관(KR, KST), 어업정보통신국 등 합동대책 마련 - 계절별 광역·지역해상수난구호대책회의 및 연중 해양사고 저감 TF팀 운영 협조 - 해양안전 종합관리 TF회의 참석 및 운영 협의
부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 안전점검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안전점검반(14개반) 운영으로 어업인과 함께하는 어선안전 점검, 사고 위해요소 사전차단(월 50척 점검) ○ 점검항목 : 구명장비, 구명부환, 구명뗏목, 소화기 비상통신기, 항해등화, 기적 ○ 점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 안전점검 : 관내 어촌계와 협의, 안전점검 및 교육 병행 실시 ○ 추진계획 : 매월 연근해어선 50척 점검(반별 7척 점검) ○ 부산남항 해상안전관리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항 통항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한 항행정보제공 서비스 ○ 해양오염 모니터링 및 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신속전파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충돌, 위험구역 접근 등 관찰 및 해양사고 예방 정보 제공 - 계류지 안내, 특이사항 등 항내 운영정보 제공 - 기상특보, 해상정보 등 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정보 제공 - 항내 공사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한 항행제한에 관한 사항 - 해양사고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 및 유관기관 전파
인천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기관별로 시행되고 있는 선종별 안전점검의 통합 운영으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점검의 효율성 확보 ○ 통합적 선박 안전관리체제 구축 및 유관기관간 주요 안전정책 공유·협력을 위한 협업체계 운영(해양안전종합관리 TF)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협조사항 지속 발굴 및 정책반영 요청 ○ 계절별 해상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4회 계절별 해양사고 취약요인 분석, 중점 안전관리 방안 및 유관기관 협조사항 수립·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서, 검사기관(KR, KST), 어업정보통신국 등 합동대책 마련 - 계절별 광역·지역해상수난구호대책회의 및 연중 해양사고 저감 TF팀 운영 협조 - 제21차 해양안전 종합관리 TF회의 참석('17.3월) - 광역해상수난구호대책 회의 참석('17.3월)
전라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간 안전정책 공유로 통합적 선박 안전관리 운영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실천본부' 동·서부 지역본부 및 '해사안전종합관리 TF팀'을 통한 지속적 선박안전관리 운영체제 구축 협의 - 전남도 차원의 '계절별 해양안전 종합대책' 수립을 통한 계절별 해양사고 취약요인 분석 및 중점 안전관리 방안 도출

1-2

어선 안전관리체계 고도화

1-2-1

어선안전관리 제도개선

□ 배경 및 필요성

- 어선안전 관련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마련 필요

* 어선안전 관련 규제(안전교육 의무화, 입출항 신고 등)는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와 직결되나, 현행 「선박안전조업규칙」은 부령에 불과하고 상위 근거법률이 불명확

□ 추진계획

◆ 어선 복원성 기준 개선, 무선설비 상시작동을 위한 제도강화 및 안전조업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으로 사고예방 도모

- (법적근거 마련) 어선 입출항 관리, 안전조업교육, 어업정보통신국 운영·지원, 구명조끼 착용의무화 등 「어선안전조업법」 입법 추진

* 부령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부여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입법 추진
(유기준 의원 대표 법안 발의 '16.9.12., 상임위 소위계류 '16.11.22)

- (선박안전 강화) 운항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어선(낚시 어선 포함)은 복원성 승인 및 만재흘수선 표시 의무화(어선법 공포, '17.10.31)

-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사람, 어획물 등을 승선·적재하고 항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

* 「어선설비기준」상 길이 24m 이상 어선과 13인 이상 승선하는 낚시어선

- (불법 증·개축 방지) 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설치하지 못하도록 어선의 상태유지 의무 부과(어선법 공포, '17.10.31)

* 구조·기관·설비 등을 임의적으로 변경·개조하는 자(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해경·어업감독공무원이 어선 불법 증·개축 등 「어선법」 위반사항을 상시 점검·단속하고 관계기관 합동 단속* 실시

* 어선이 많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무작위 점검·단속 실시하고,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높은 어선은 출항정지 명령 발동

- (안전장비 상시작동) 무선통신설비, 위치발신장치 등을 끄거나, 고장 미 수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과태료 등) 강화

* 무선설비 미작동(0→300만원), 위치발신장치 미작동(100→300백만원), 위치발신장치 고장·분실 미수리(100→300만원) /(어선법 공포, '17.10.31)

- (낚시어선) 해양사고 예방 및 영업질서 유지를 위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선 및 관계기관 합동단속 정례화

-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근절을 위해 해양수산부(해수청), 국민안전처(해경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합동단속 실시(반기 1회)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지도 · 감독을 선박별 2~3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승무원, 안전설비 유효기간 및 비치 상태 확인 등 ○ 방선을 통한 선원(외국인선원포함) 안전교육 실시(연중)
전라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등록선박의 73.4%를 차지하는 어선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확립 ○ 어선 안전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항 안전성 강화를 위한 어선(낚시어선 포함) 복원성 세부 기준 정비 및 만재흡수선 표지대상 추진 ○ 어선안전조업법 제정 시 적극 의견 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 입출항 관리, 안전조업교육, 어업정보통신국, 운영·지원, 구명조끼 착용의무화 등 ○ 어선 위치발신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의적으로 선박위치발신장치를 끄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 VHF-DSC 등 사용방법 교육, 상시작동 계도·홍보 강화 · 어업인 교육 및 합동점검 시 병행실시
경상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낚시어선 관련 제도 개선 건의 ○ 법적 안전전문교육시간 및 실기위주 교육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4시간 - (개선) 8시간, 실기교육 의무제(30%이상) ○ 음주 낚시객 승선거부 의무화 법률 개정 및 제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낚시어선어자 및 선원이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에 ‘음주 낚시객 승선’을 구체적으로 명시 ○ 자기점화등의 의무장비 완화 및 폐기(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에서 자기점화 등 제외
인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등록선박의 73.4%를 차지하는 어선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확립 ○ 어선 안전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항 안전성 강화를 위한 어선(낚시어선 포함) 복원성 세부 기준 정비 및 만재흡수선 표지대상 추진 ○ 어선안전조업법 제정 시 적극 의견 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 입출항 관리, 안전조업교육, 어업정보통신국, 운영·지원, 구명조끼 착용의무화 등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 위치발신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의적으로 선박위치발신장치를 끄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 VHF-DSC 등 사용방법 교육, 상시작동 계도·홍보 강화·어업인 교육 및 합동점검 시 병행 실시
전라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 준법조업을 하는 어업인이 보호받는 어업환경 조성 및 어업인 지도·홍보 강화를 통해 실효적인 어업질서 확립 ○ 시기·업종·해역별 테마 단속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어구, 김양식장 무기산 사용, 포획금지기간 조업 등 - 무허가, 무면허, 표지판 미부착 등 어업 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단속 ○ 불법어업 사전예방을 위한 대어업인 지도·홍보 활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어업인 지도·홍보 및 출어선에 대한 해상 승선지도·홍보활동 강화

1-2-2

어선 안전설비·장비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어선은 상선에 비해 사고에 취약하나,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안전 조업을 위한 구조·설비를 갖추지 못한 채 조업하는 경우가 많음
 - 소형 영세어업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안전보장을 위한 시설·장비 (통신장비 포함) 지원 시급

□ 추진계획

◆ 안전관리가 열악한 어선에 대하여 안전설비 지원 강화로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양사고 예방

- (구명·소방·통신) 화재 및 충돌사고 예방, 신속한 위치파악, 구조 교신을 위한 자동소화장치, 팽창식 구명조끼, VHF-DSC 등 안전장비 지속 보급

* ('18년 계획) 구명조끼(4.9천개, 20억원), 자동소화장치(7백대, 3.4억원), VHF-DSC(16백대, 5.9억원)

- (노후기관 대체) 기관고장 문제 해소를 위해 노후기관 대체 및 장비개량* 지원 확대

* ('13) 33억원 → ('14) 39억원 → ('15) 41억원 → ('16) 73억원 → ('17) 65억원 → ('18) 57억원

- (이동수리서비스) 지자체를 통해 도서벽지 등 정비업체가 없는 지역을 대상('18년 53개소)으로 엔진, 전기·소화·구명설비 등 안전 점검, 부품교환 등 찾아가는 이동수리서비스 제공

* 지자체가 육상의 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 공무원과 수리업체가 순회 방문, 무상 점검·수리 서비스 제공 ☞ ('18) 16억원(53개소×30백만원) / 국고 50%, 지방비 50%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전라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어선 노후기관 장비 현대화를 통한 안전조업 에너지 절감 5톤이하 소형어선 소유 어업인들에게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방법 마련 ○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 26척(군산 15, 고창 8, 부안 3) - 사업비 : 340백만원 - 내 용 : 저효율 기관 및 오래된 노후기관 설비 대체 등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 403대(군산) - 사업비 : 212백만원 - 내 용 : 초단파대문선전화(92대), 자동소화시스템(38대), 구명조끼(273개) 등 ○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 100대(군산 86, 김제 14) - 사업비 : 400백만원 - 내 용 : GPS플로터, 어군탐지기, 레이더, 그물인양기 등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단파대무선전화(VHF-DSC), 자동소화설비, 구명조끼 등 어선의 소방, 구명 및 항해안전설비 지원으로 어선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피해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14백만원 - 사업지 : 화성시 - 사업량 : 30대(구명조끼 20, 자동소화설비 2, VHF 8) - 사업내용 : 5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하여 초단파대무선전화, 자동소화시스템, 구명조끼를 지원받고자 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 - 추진상황 : 사업자 선정(1~3월) → 개별 및 공동구매 신청·설치(4~12월) → 준공검사 및 보조금 지급(4~12월)
경상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관·장비·설비 보급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효율 노후기관·장비설비 설치·교체 지원 : 360척/3,600백만원 * 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자담 40% ○ 어선 사고예방시스템 구축 : 749척/90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자담 40%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 12개 반/37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 50%, 도비 50% ○ 세부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관내 연근해 어선 - 지원내용 - 저효율(육상기관 등) 기관 및 노후기관의 대체, 무동력 어선 신규 기관 설치 - 어선 노후 장비·설비 대체 및 신규 어선 장비·설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상 설치 의무 장비·설비 및 어업·항해 등에 사용되는 장비 - 초단파대 무선전화 및 자동소화시스템 설치 - 수리업체가 순회 방문, 무상 점검·수리 서비스 제공(12개반) ○ 구명조끼 보급을 통한 사고 예방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볍고 착용이 간편한 개량 구명조끼 보급을 통하여 어선조업 시 상시착용으로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 세부추진계획 - 사 업 량 : 364개 - 사 업 비 : 5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자담 40% - 지원대상 : 관내 연근해 어선 - 사업내용 : 연근해 어업인 구명조끼 보급(14만원/개 이내)
부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시행에 따른 국비, 시비를 구·군에 교부하여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소화설비, 구명조끼 - 사업비 : 18대/18,828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설치 지원(15대, 18,000천원) * 소화설비 지원(3대, 828천원) - 추진계획 : 구·군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 고효율어선 유류 절감장비 지원 ○ 저효율 기관·장비 대체로 어업경영 개선 및 해양사고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물량 : 133척 - 사업기간 : 2018년 2~12월 - 대 상 자 : 기관·장비·설비를 대체 또는 설치하는 어업인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산 액 : 873,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어업인 재해보상보험 및 안전보험 지원 ○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전 어선원의 보험가입으로 어선원을 보호하고, 10톤 미만 영세 연안어업인의 어선재해 시 보상함으로서 어촌사회 안전망 구축 - 사업량 : 어선원(658척/4,608명), 어 선 : 648척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지원 사업 추진 - 사 업 비 : 387,500천원(시비 100%) - 사업규모 : 어선원 : 658척 4,608명, 어선 : 648척 -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원 : 자담금(국고지원액 및 연체금 제외)의 어선톤급별 차등지원 * 어선 :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납부 보험료의 35% 지원 ○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 추진 - 사 업 비 : 56,858천원(시비 28,429, 구·군비 28,429) - 사업규모 : 어업인 1,177명
인천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어선 노후기관 장비 현대화를 통한 안전조업 에너지 절감 5톤미만 소형어선 소유 어업인들에게 안전하게 조업 할 수 있는 방법 마련 ○ 노후기관 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 기관대체 척당(보조 60%) × 26척 - 사업비 : 497백만원 - 내 용 : 저효율 기관 및 오래된 노후기관 설비 대체 등 ○ 안전장비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단파대무선전화 18대 ≍ 13,167천원 - 자동화소화시스템 8대 ≍ 7,568천원 - 구명조끼 54개 ≍ 4,572천원 - 내 용 : 화재 및 충돌사고 시 예방 및 신속 구조요청 교신
전라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어선 안전사고 발생 시 사망·실종 예방 안전인프라 확충 및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으로 안정적 어업활동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장비가 없거나 구매여력이 없는 소형영세 어업인에게 지원 ○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 3종(2665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단파 무선전화(VHF-DSC) 606대, 자동소화설비 254대, 구명조끼 1,805개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조업과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어업인 지도·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1일 「어선안전의 날」 운영, 대어업인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12회) - 출어선 안전조업 지도 : 1,000척(구명동의 착용, 배전반 및 전선상태 등) - 안전조업 여건조성을 위한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158개 어촌계

1-2-3

원양어선 안전관리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북태평양 베링해에서 침몰한 제501오룡호 사고('14.12) 계기로 원양어선 안전관리체계 강화 추진

* 선원 60명 중 27명 사망, 26명 실종, 7명 구조

- 원양어업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원양어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안전조업 유지

□ 추진계획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 (제도 정비)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규정 작성·운용 등 선사별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추진('17.12~)

* 법령 개정(안) 추진방안 검토보고('17.12월) 및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의원입법, '18년)

- (안전 점검) 원양분야 안전점검 강화* 및 해사안전감독관 추가인력 확보

- 국내출항 원양어선에 대해 안전점검 전수조사 실시

* 최저승무원, 안전설비 비치 확인 및 소화기 사용, 대피방법 등 안전교육 실시

- 국내 입항하지 않고 해외기지에서 입출항하는 원양어선에 대한 안전 점검을 위해 해사안전감독관 추가인력 확보

- (현지 합동점검) 사고 우려가 높은 베링해, 러시아 수역에 출어하는 원양어선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

* 조업감시센터(FMC),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원양산업협회 등

1-3

선박검사제도 신뢰도 제고

1-3-1

선박검사제도 선진화

□ 배경 및 필요성

- 선박 구조·시설에 대한 검사기준 및 집행절차의 지속적 개선으로 선박안전성 향상 및 해양사고 위해요소 사전제거
- 국제협약 발효에 따른 이행체계 개선 및 대항검사기관 품질경영 시스템 도입으로 선박검사제도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 추진계획

- ◆ 선박시설기준·검사제도 정비, 대항검사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 도입 및 검사 집행제도 개선을 통하여 선박시설 안전성 제고
- ◆ 국제협약보다 강화된 선박검사기준을 도입하여 해양사고 예방

○ 국제협약 등을 반영한 선박검사제도 개선 추진

- 선체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측정인력·장비 등 지정기준 및 자체업무 규정을 정하여 측정업무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18.5)
- 컨테이너 수출화물의 총중량 검증방법*을 명시하여 화물소유자의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18.5)

* ①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한꺼번에 계측, ②개별화물, 화물 고정장비 및 컨테이너 자체중량을 각각 합산

- 임시승선자의 범위를 선박업무에 종사하는 선사직원으로 한정하고 나잡어업 종사를 제외하는 등 임시승선자의 범위 명확화('18.5)
- 대항검사기관의 품질유지, 공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경영 시스템 도입 등으로 검사 신뢰성 제고

【주요내용】

- ▶ 대항기관 간 공정경쟁 및 기술 교류협력 도모, 관리감독 실효성강화를 위한 관리감독 근거 신설
- ▶ 이해관계자 직무 회피, 종전 근무지 관련업무 배제 등 윤리강령 제정 및 윤리교육 시행 등의 윤리경영체계 도입
- ▶ 대항업무의 품질유지, 안전, 환경오염 방지 및 공정성과 재정적 독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경영시스템 마련
- ▶ IMO협약의 제·개정사항의 적기수용, 최신 국제동향 및 기술정보 공유, 국내외 사고 사례분석연구 및 업체·학계 등 의견수렴을 위한 선박검사제도 발전방안 연구

* 예) 검사기준 개선협의회 정기적 개최(분기별), 연안선박 등 주제별 선박시설 기준 개선 워크숍(연 1회) 등

○ 선박소유자의 선박검사 이후 안전운항 책임 강화

- 선박검사 후 상태유지 의무위반으로 선원 사망 또는 선박 멸실에 이르게 한 선박소유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18.11)

○ 국제협약보다 강화된 선박검사기준 도입

- 선령에 따라 선체 두께측정범위를 확대, 검사원의 증원 등 노후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18.8)
-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검사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운항 안전성 제고('18.6)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검사 이후 운항과정에서의 선박소유자 상태유지 의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시설·구조변경에 대하여 검사기관과 협력하여 선박 구조 등 변경 허가사항 홍보 및 신청에 따른 자문위원회 소집·의견수렴 * 외부 자문위원에 한하여 수당 지급 및 선박톤수 측정을 위한 업무기기(측정자 등) 강화 ○ 선박검사기관 등과의 제도·규정 정보공유체계(가칭 해사안전 연구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검사 신설 규정 등 학습 및 선박검사제도 미비사항 발굴(연3회)

1-3-2

선박용 물건 형식승인제도 선진화

□ 배경 및 필요성

- 선박용 물건 형식승인* 증서의 유효기간 갱신제도 도입(선박안전법 개정, 17.12)에 따른 세부절차 및 통일지침 마련 필요

* 13개 지정시험기관(형식승인) 및 3개 선박검사기관(검정 및 예비검사)

-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기준, 예비검사 등 선박용 물건과 관련된 고시의 지속적인 최신화를 통한 제도의 유효성 확보 필요

□ 추진계획

◆ 형식승인 증서 갱신절차 마련(시행규칙 개정, '18.5) 및 관련고시 개정

- 형식승인증서 유효기간 설정 등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18.5)
 - 갱신신청을 위한 서식개정, 증빙서류의 종류 등 세부기준 마련
 - 갱신신청 대상 및 기간 등의 명확화를 위해 지방청 의견 취합 후 통일된 지침 하달
- 예비검사 제도 개선으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선박용 물건의 원활한 보급 추진('18.7)
 - 수입 선박용 물건에 대해서는 수입된 이후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 신청된 표본에 대해서는 발취하여 검사(시행규칙, 고시 개정)
- 연안선박용 구멍뚫목 형식승인 시험기준 개발 추진('18.9)
 - 연안선박의 건현높이, 재질 등을 고려 페인터 길이와 수압이탈장치 작동 수심을 별도로 지정토록 기준 개정

※ 선박의 규모, 적정작동 수심 결정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8.2~7)

1-3-3

선박검사 인력·장비 확충

□ 배경 및 필요성

- 신규검사원(입사 3년 미만)* 지부배치 확대와 전국 15개 항·포구에 산재되어 있는 지부 검사원 대상 체계적인 교육훈련 체계 마련 필요 (선박안전기술공단)

- 전 검사원을 대상으로 연차별 직무교육과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검사수행능력 함양 필요

* 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원 총 172명 중 3년 미만 신규 검사원은 54명(31.3%)

□ 추진계획

◆ 2018년도 검사원 종합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차질 없는 추진

- 신규검사원의 역량강화 및 지부검사원의 직무보수교육을 위하여 철저한 계층별 직무(자체 및 위탁)교육 시행(선박안전기술공단)
- 검사규정 제·개정 사항 등을 중심으로 실무교육을 병행하여 검사 현장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토록 자체교육 추진
- 전공분야 또는 전공분야 외 실무검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배양하기 위하여 분야별 위탁교육 추진
- 교육 강사(선체·기관 각 1명)가 지부를 직접 방문하여 검사규정 제·개정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부 순회교육' 추진

1-4

위험물 운송 안전관리 이행력 강화

1-4-1

위험화물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위험물 운송선박과 화물의 경우 폭발 등 사고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나 선박침몰, 해양오염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우려 상존
 - * 위험물 대형사고 사례 : 텐진항 위험물 폭발사고('15.8) : 사망·실종 173명, 부상 798명, 재산피해 69억 위안 / 허베이스리피트호사고('07.12) : 기름 12,547㎥ 유출
- 위험물 컨테이너는 육해상 복합운송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간 정보 공유부족으로 운송현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사고발생시 신속·정확한 대응 곤란
 - 기관간, 국가간 위험물 운송선박 정보공유를 위한 통합안전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및 선박과 터미널간 실시간 상호정보 교환체계마련 필요

□ 추진계획

◆ 위험물 컨테이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추진

-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Container Inspection Program)의 개선 및 내실화
 - '18년 CIP 운영계획 수립, 선적국가별 CIP 점검 분석결과, 위반율이 높은 선적국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 수출입 위험물 안전관리 사각지대(화주 창고↔항만)를 해소하여 대형 위험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안전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수출입 위험물 취급全过程의 통합 관리방안 마련으로 관리 사각지대 제거 및 신속한 방재활동 지원으로 2차 피해 최소화

- 수출입 위험물 안전관리시스템* 보완을 통한 서비스 확산 및 기능개선 완료 추진('18년말)

* 위험물 컨테이너에 선별적으로 비콘을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안전정보 등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기능을 보완하여 시스템 고도화('18년 예산 : 1.78억원)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율이 높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컨테이너 우선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경고장 발송 등 규정을 준수토록 유도 ○ 중대결함사항(표찰 없음, 고박 불량 등) 발견 시 반출 전 시정조치 요청(터미널 협조) ○ 화주, 운송인 등에게 위험물에 관한 국제기준, 동향 등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 등 위험물 안전운송 홍보 추진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점검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율 상위 국가에서 수입되는 컨테이너 우선 점검 - 표시·표찰 분야 상세 점검 - 용기 및 수납상태 등 점검을 위한 개방점검 실시 ○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관련 부서 협조 체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사, 항만공사, 소방서 등 관련부서 비상연락망 유지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반입제한 물질(화약류, 독물류, 방사성 물질 등) 등 위험물 반입신고 모니터링 강화 및 안전조치 이행여부 현장 확인 등(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반입 신고 누락 업체에 과태료 부과 및 반입제한 물질 반입 시 추가안전조치 요구 및 현장점검 수행 ○ 위험물 취급화물 및 취급량 조사 실시(연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화물의 종류 및 연간 취급량을 조사 및 데이터 구축(하반기) ○ 위험화물 취급업체 자체안전관리 이행실태 확인(반기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취급업체 하역현장 점검 강화, 업체별 자체점검실시 및 자체안전관리계획서 현행화 여부 확인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컨테이너 현장점검 30 TEU (개방점검 3TEU 포함)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실있는 수입위험물 컨테이너 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컨테이너의 외관점검과 개방점검을 전체 수입컨테이너 물동량 대비 10% 이상 달성 ○ 유관기관과의 점검을 통한 협력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유관기관(세관, 소방서, 해경, 평택시 등)과 합동 개방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예방과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향상

1-4-2

위험물 운반선 안전성 제고

□ 배경 및 필요성

- 세계적으로 65백여 종의 고위험 유해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수백종의 신규위험화학물이 운송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적 안전관리체계 강화 필요

□ 추진계획

◆ 위험물 운반선 취약요인 중점확인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등 위험물 관리역량 강화

- 폭발·질식·오염 등 위험물운반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의 예방을 위해 인증심사시에 안전절차 적합성, 이행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
 - 위험물 취급 방법, 화물창 진입절차, 해양오염 예방·방재 등 관련 절차 등 적합성, 숙지 및 이행 여부 등 확인(연중)
 - * 사고선박·선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특별(수시)심사를 시행하고, 기타 위험물 운반선은 2.5년 주기로 안전관리체제 인증 심사 시행
- 위험물 취급 육상 종사자를 위한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 실시
 -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 교육 실시
 - * 교육기관 :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주관하에 경기, 부산 등에서 30회 실시예정
 - 위험물 적재차량 운전자 교육 실시
 - * 교육기관 :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주관하에 경기, 부산, 인천 등에서 10회 실시 예정
- 선박입출항법 개정에 따른 산적액체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 경기, 울산, 여수 등에서 7회 실시 예정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폭발사고 위험성이 높은 유조선 작업절차 준수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창 세정절차 준수 · 방폭 장비 사용 여부 등 점검 - 점검 시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현장지도 점검 강화 ○ 필요 시 정부대행검사기관(KR, KST) 합동 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창 세정절차 준수 · 방폭 장비 사용 여부 등 점검 ○ 위험물하역현장 단속(무역항질서 단속 시 병행 시행)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운송선박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수시점검 및 결함 신고선박 특별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반입(반출) 선박에 대한 현장점검 · 기초안전수칙* 준수여부 위험물 취급 시설, 인원, 장비 등 유지여부 등 현장 지도·감독 강화 * 작업 전 안전점검표 작성, 하역작업매뉴얼 및 화물취급지침 제공·교육 여부 ○ 항내 급유작업 현장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안전관리계획서 현장 비치 및 승인된 안전관리자 배치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운송선박 안전점검 및 결함신고선박 특별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운송 자체안전관리계획 비치 및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등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 ○ 급유업 등록 시 급유선 방충재 적재, 방제장비(오염물질 제거용) 탑재 및 유류오염 손해보험 가입 여부 등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관련 사업체 운영실태 조사 및 등록 시 사진대지 확인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안전대진단(위험물 하역분야) 및 자체안전관리 이행실태 확인(반기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취급업체 하역현장 점검 강화, 업체별 자체점검실시 및 자체안전관리계획서 현행화 여부 확인 ○ 급유선 등 위험물운반선 하역현장 점검 및 종사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하역 전 안전수칙 준수 여부 및 안전관리자 현장 배치 여부 등 하역현장 점검 및 종사자 교육 추진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하역회사와 선박검사단체로 이뤄진 합동점검팀 구성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또는 안전기준 위반 등으로 파악 된 위험물운반선에 대해 항해·통신설비, 소화·구명설비, 위험물 취급에 대한 승무원들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토록 시정조치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운송선박 자체안전관리계획을 대상으로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지속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현상에 안전관리자, 위험물 운송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비치 여부 및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 ○ 관내 위험물 운반선에 대한 수시 지도·감독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조선, 급유선, 화학제품운반선 등 위험물 운송선박에 대한 점검 기준을 체계화하여 특별관리 및 우선점검을 통해 화재·폭발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해양사고 및 오염사고 유발 선박·선사 등에 대하여 우선 점검 실시 ○ 위험물 취급 종사자 관련 워크숍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운송관련 관계자에게 안전교육,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등을 위한 간담회 개최(연 1회) - 위험물 검사원, 해양환경관리공단, 위험물 하역 담당자, 위험물 운송 담당자 등 관련 업·단체 참석
울산항만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부두 현장근로자 대상 전문 안전교육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대상 : 울산항 위험물취급업체(24개사) - 교육내용 : 위험물선박 및 안전한 하역작업 관련 교육 ○ 위험물 부두 입항정보 책자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대상 : 위험물 부두 입항선박 - 제고정보 : 울산항 전체 위험물부두 상세정보 * 터미널 비상연락망, 비상절차, 대피로, 터미널 일반정보, 요구조건, 특별 규정, 선박 계류정보, 하역절차 등
여수항만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부두 이용자 협의회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부두 이용자(선사, 화주, 하역사 등)와의 주기적 업무 협의를 통한 위험요소 발굴·개선 추진

1-4-3

위험물 하역시설 안전성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15.8.12) 및 우이산호 유류 유출사고('14.1.31) 등을 계기로 위험물 하역시설 안전기준 강화 등 선박입출항법 개정('17.9)
 - 위험물 하역시설에 대한 강화된 세부 안전기준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 실무교육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필요
- 항만 내 위험물이 물질별로 소관부처에서 개별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있어 소관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필요

□ 추진계획

◆ 위험물 하역시설 강화 및 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과 항만 내 위험물 통합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의체 구성

- 위험물 운송선박 계류시설 안전장비 등 세부기준 마련
 - 5만톤급 이상 위험물 운송선박의 계류시설에 대한 하역 안전장비 설치 의무화에 따라 세부 설치기준 등 마련
 -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의무화에 따라 교육대상 및 주기, 취급 물질별 세부 교육과정 마련
- 항만 내 위험물통합관리협의체 구성 추진
 -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항만 내 위험물 관리를 위하여 물질별 소관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해수부, 산자부, 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반 구성) 우리 청 위험물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 합동 점검 필요 시(인천해경, 항만공사 등) 합동 점검반 구성 ○ 점검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선박입출항법」 제35조(위험물취급시 안전조치), 제48조(검사·확인 등) - (대상) SK인천석유화학(주) 등 총 10개 위험물하역 사업장 - (방법) 시설물 관리점검 등 현황, 안전점검,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실적 등 서면점검을 통한 적정이행 여부, 현장 시설물 정비 상태 등 확인 - (점검내용) 점검표에 따른 점검 실시 및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이행상태, 비상연락망 최신화 여부 등 - (시정조치) 지적사항 발생 시 사업개선명령 등 기한부 시정 지시 및 미 이행시 행정처분 부과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하역현장 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반입신고 위반업체 집중 점검 - 위험물 하역 자체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점검 ○ 해양시설 합동 안전점검 및 운영자 자체안전점검 실시(정기, 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경,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합동 안전점검 실시 -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소유자의 자체안전점검 실시 결과 확인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하역시설 안전점검 실시(상·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류 하역시설, 송유관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정기점검 실시 - 유류부두 안전시설과 장비의 설치·유지상태 점검 ○ 위험물 분야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현장점검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종사자의 주기적인 교육여부, 위험물 하역 전 안전 점검 및 작업 중 안전수칙 이행실태 등 확인 -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배치여부, 위험물 특성에 적합한 소화 장비 비치 및 하역설비의 작동상태 등 현장 확인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하역시설 현장 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안전수칙 준수여부 점검 및 시설관리자 자체 안전점검 감독, 관리 * 위험물 하역시설 점검(타 기관 합동점검 포함) 추진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항 질서 유지를 위한 단속 실시(연 2회/상,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 및 하역현장에 안전관리자 배치여부,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 점검 실시 - 해경, 소방서, 해사위험물검사원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 본부시달, 「무역항 해상안전 중점관리 지침」에 의거 단속계획 수립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항 질서유지를 위한 단속 실시(연2회/상·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 및 위험물 취급시 안전조치 등 점검 실시 - 위험물 반입신고 현황 모니터링(PORT-MIS 확인) 및 순찰 강화 - 위험물 하역시설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 ○ 해양시설 합동 안전점검(1회) 및 자체안전점검 실시(연2회/상·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경 합동 안전점검 및 교육 실시 - 소유자의 자체안전점검 실시 결과 확인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하역현장 안전점검 실시(연 2회, 상·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류관련 시설(송유관, 하역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장비와 설치된 시설의 안전 유지 상태를 점검 ○ 위험물 분야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하역 전 안전점검 및 작업 중 안전수칙 이행실태를 현장 근무자 및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행 여부 확인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하역 사업장(현대오일뱅크(주) 등 총 5개 사업장) 현장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분기, 3분기는 항만물류과, 해양수산환경과 등 민·관 합동점검 실시 - (점검반) 우리 청 위험물담당자 등 - 민·관 합동 점검 시(태안해경 관계자, 한국해사위험물 검사원 관계자) 합동 구성 - (방법) 시설물 관리점검 등 현황, 안전점검,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실적 등 서면점검 및 현장 시설물 정비 상태 등 확인 ○ (간담회 개최) 반기별 지적사항 등 미비점 및 우수사례에 대한 점검결과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안전관리 수준 향상 촉진
여수항만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류부두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 정기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자체 계획 수립·시행 - 외부진단기관과 연계하여 정밀점검 실시를 통한 개선사항 발굴 ○ 위험물 취급 항만시설 합동 교육·훈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해경 등)과 연계한 합동 훈련 실시를 통한 예방태세 확립 - 위험물 관리 워크숍 정례화를 통한 항만종사자 안전의식 고취 - 위험물 저장시설 소유자 자체 안전점검실시 결과 합동확인

1-5

선박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

1-5-1

선박안전성 확보 및 신조선 건조지원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노후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선사의 영세성 및 수익성 저하로 노후선 운항 지속
- 신조선 건조를 위한 금융지원방안 마련 및 민간의 신조 추진을 위해 정부 주도의 신조선 지원정책 마련 필요

□ 추진계획

◆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및 연안선박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노후 연안선박 10척 이상 신조대체 추진('18년 목표)

-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활용하여 노후 여객선 신조대체 추진
 - '18년 확보예산(300억원)을 활용하여 카페리 여객선 1~2척 신조* 추진
- * '19년까지 총 1,000억원을 조성하여 매년 1~2척의 카페리 및 초쾌속선을 건조 지원 예정으로 '16년 1척 건조 중(197천톤급 / '16.11.25 건조계약 체결)
- 노후화된 연안선박(화물선 및 여객선) 대체를 위한 이차보전사업 활성화
 - 이차보전 협약 금융기관 확대(수협 → 산업은행) 및 RG(선수금 환급 보증) 보증보험 활용을 통해 연안선박 7~8척 이상 신조 추진
- * 내항여객선 및 화물선 신규건조시 건조자금 대출분에 대한 금리 2.5%를 정부가 지원(대출기간 15년), '17년 대출한도 1,250억원내에서 금리지원 예정

1-5-2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항로별·선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대책을 통해 국제여객선에서 주로 발생하는 주요 해양사고 예방도모 필요
- 한·중 항로는 20년 이상 노후선박의 기관고장 사고^①가 지속되고, 한·일 항로는 고래 등 수중물체 충돌사고^②로 운항지연 사례 발생
- * ① '14년(4건)→'15년(5건)→'16년(3건) ② '14년(3건)→'15년(6건)→'16년(4건)

□ 추진계획

◆ 항로별·선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주변국과의 국제공조활동 확대로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 항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관리 추진(21개 항로 28척 운항)
 - (한·중 항로) 25년 이상 노후선박 및 최근 기관고장 발생선박에 대해 한·중 합동 특별점검 실시('18.3~4)
 - * 한·중 항로 운항선박(16척)에 대해 전수점검 실시('18.3월, 9월)
 - (한·일 항로) 추진기 이물질 유입, 고래 등 수중물체 충돌사고로 인한 운항지연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감속운항 등 중점 관리('18.3월, 9월)
 - * (중점점검) 경계구역에서의 감속운항, 견시 철저, 안전벨트 착용 철저 등
- 국민이 참여하는 안전점검 추진
 - 일반 국민을 국제여객선 점검에 참여하게 하는 등 여객 관점에서 점검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추진('18.상)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관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대형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제여객선 상·하반기 안전점검 실시 및 선사간의 안전정보 공유를 위한 간담회 개최(반기별) - (고속선) 고속선 기준 충족, 기상악화시 감항성 확보, 추진기 이물질 유입 등으로 인한 운항지연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감속운항 등 중점 관리 - (카페리) 선박 중요화물 적재 및 고박, 제조사 매뉴얼에 따른 계획정비 실행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중점 관리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령 25년 이상선박은 분기별, 25년 미만 선박은 반기별 점검 ○ 기관고장 사고 예방을 위해 ISM Code와 연계, 계획정비 이행 실행 및 회사의 정비지원 현황 등 점검 ○ 구명·소방설비 위주의 점검 및 비상대비 훈련을 통해 선박의 비상대비 능력을 강화하고 한·중 정부간 합동점검도 추진 ○ 신조 투입 선박에 대해서는 운항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분기별 점검 실시 <p>* '18.10. 인천-위해간 신조 여객선(3만톤급) 운항 개시 예정</p>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여객선 다국적 승객 안전을 위한 소화·구명설비 집중점검 및 크루즈선박 입항 시 현장 안전점검 실시(분기별*) <p>* '18년 동계올림픽 대비 국제여객선 점검주기 확대(반기별→분기별)</p>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로별(한-중)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점검 연 2회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령 20년 이상 노후선박의 기관고장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신조대체 유도('17.12~'18.1) 및 실효적 사고예방대책 시행 <p>* ISM Code와 연계, 기기 제조사의 매뉴얼에 따른 계획정비 이행실행, 수리요청 처리실행, 정비절차 및 시기의 적정성 등 회사 정비지원 현황 등</p>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대응훈련 및 맞춤형 안전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여객선 승무원을 대상으로 비상대응훈련(연 2회/4척)을 실시 하고 기존점검 시 부적합사항의 데이터화 및 주요취약요소 식별 - 기본적인 비상훈련(소화·퇴선) 및 다양한 상황의 비상대응훈련과 비상기기 작동을 시행하여 승무원의 대응능력을 향상

1-5-3

페어망·로프 감김사고 예방 대책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추진기 감김사고에 의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원인물질 발생 억제, 수거사업 강화 등 분야별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

* 감김사고 발생건수 : ('14) 165 → ('15) 259 (51% ↑) → ('16) 279 (12% ↑)

□ 추진계획

◆ 페어망·로프 사고예방을 위해 원인물질 발생억제, 수거활동 강화, 자구적 대책추진, 종사자 홍보 등 단계별·다각적 대책 추진

- 원인물질 발생억제와 발생된 해양폐기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어구관리법」 및 「해양폐기물관리법」 제정 추진

* (어구관리법) '16.12월 국회 제출, (해양폐기물관리법) '17.6월 의원발의

- 어선(약 68천척) 세력 등을 활용하여 원인물질 수거를 확대*하고, 수매단가 현실화** 등을 통해 효과적인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기반 구축

* 연도별 수거량 : '16년(15,017톤) → '18년(18천톤) → '21년(21천톤)

** 페어망·로프 수매단가(마대 100리터 기준) : '16년(1만원) → '18년(1.5만원) → '21년(2만원)

- 국고여객선 대상으로 로프절단장치를 설치*·효과성을 분석·검토하여 쏠 연안여객선 및 다중이용선박(유선 및 낚시어선)으로 확대 검토

* 국고여객선 26척 중 기설치 2척 → 추가설치 3척('17.12월)

- 해양폐기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등 종사자 의식개선 추진

* 기획기사, 라디오캠페인 송출, 수협방송 등을 통해 동영상 상영·송출

- 사고 통계관리(중해심)를 세분화(선종별)하고, 종합상황실과 중해심 간 페어망·로프 사고자료 공유* 및 정책환류 추진

* 종합상황실(실시간 사고보고 자료), 중해심(사후 축적된 종합자료)

- 조류·해류를 이용한 페어망 수거기술 개발 및 페어망·로프 걸림 방지 선형개발 타당성 연구 추진(~'18.9)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의 적극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항선, 관공선을 통하여 해상부유물 상시 확인 및 수거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업체에서 수거된 해양폐기물 운반·처리 ○ 각종 해양정화활동 실시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지역주민과 합동정화활동 실시 및 타 정화 활동에도 인력·장비 등 적극적 지원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부유 장애물 적기 수거 처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항로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근무시간 외(공휴일, 야간 등) 항로 장애물 적기에 제거 - 지속적인 해상·육상 순찰 시행으로 불법 투기 현장 적발(시기별 순찰 주기 탄력 운영) ○ 해상부유 장애물 발생 방지를 위한 불법어로 특별단속 실시(상·하반기)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어망페로프 등 해상부유물 및 침전물(해양쓰레기 및 항만 폐기물) 발생 시 신속한 수거 조치 ○ 해상부유물 발생 시 해양환경관리공단(동해지사) 청항선 등 투입 수거(위탁)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장항항내 순찰 및 무역항 특별단속(반기1회) 시 여객선 항로 중심으로 페어망, 로프 등을 수거하여 사전예방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시달, 「무역항 해상안전 중점관리 지침」에 의거 단속계획 수립 ○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 실시(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공선, 청항선(해양환경관리공단)을 통해 해상부유물 상시 확인 및 수거 실시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항 항계내 수중침적 폐기물 수거(청항선/ 정기 또는 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로, 정박지(1~5구), 신항 항로주변 해역 등 ○ 해상부유 쓰레기 발생신고 접수시 즉시 수거처리(우리청,공단)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시설 내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택·당진항 내 해양폐기물을 관공선 및 청항선(환경공단 위탁)을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p>이용하여 수거하고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적정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용역을 통해 연간 160톤(예상)의 해양 폐기물을 관련 법령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 ○ 해양폐기물 배출 금지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제도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처리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각종 매체 (홈페이지, 신문, SNS 등)를 이용하여 해양폐기물 근절을 알림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물 제거를 위한 순찰활동 강화(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찰선(청) 및 청항선(해양환경관리공단) 활용 순찰활동 지속 ○ 대산항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협의체 구성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서, 지자체, 해양환경관리공단과의 협조체계 강화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업 중 인양된 폐어구, 폐어망, 폐비닐 등의 수매·처리로 바다에 재투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개선, 수산자원 회복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지 : 연안 2개 시(화성, 안산) - 사업량 : 100톤 - 사업내용 : 어업인이 어업활동 중 폐어구 등 쓰레기 수거하여 위탁기관(수협)에서 해양쓰레기를 수매하고,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운반하여 폐기·처리 - 추진상황 : 위탁계약(3월) → 수매 실시(4~11월) → 정산(12월)
경상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프·페그물 등 바다쓰레기 제거 ○ 연근해 어장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어장 관리사업 : 7개시군 1,163백만원 - 연안변 방치 페스티로폼 수매 : 4개시군 140백만원 - 연안 낚시터 환경개선 : 7개시군 250백만원 ○ 연안 해역 보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폐기물 처리 : 7개시군 720백만원 - 해양쓰레기 정화 : 6개시군 600백만원 -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 7개시군 620백만원 -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수거 : 1식 100백만원 -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 3개시군 400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어로 합동 단속 및 계도 강화 ○ 불법어업 지도·단속 효율성 강화를 위한 육상단속 강화 :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판장, 횃집, 어시장, 대형마트 판매, 수산물 포획금지 기간, 체장, 체중 위반행위 중점 단속 ○ 정치성구획어업 불법행위 일제정비 : 4~5월, 10~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류 예정해역 불법어구 자율정비 유도 및 강제 철거 - 어획강도가 높은 통발의 치어 채포행위 강력단속 병행 ○ 산란·성육기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추진 : 5월,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류 등 산란기 정부주관 합동단속 실시, 언론매체 홍보 등 - 종묘방류, 수산자원 보호수면 등 어업지도선 집중 배치 ○ 낚시어선 안점점검 및 지도 : 수시, 시·군,해경 등 합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낚시어선의 설비기준 등 준수사항 중점 점검

1-6

선박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 확대

1-6-1

선박 안전성 확보기술 개발

□ 배경 및 필요성

- 국제해사기구(IMO) 협약의 이행과 선박안전관련 신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선제적 기술개발 필요
- 전체 해양사고의 80%를 차지하는 중소형 선박의 구조·설비 등에 대한 투자 및 연구강화로 해양사고 저감 필요

□ 추진계획

- ◆ 국제규제의 선제적 대응, ICT 기술접목 등을 통한 선박안전기술 제고
- ◆ 분과위원회 재편성을 통한 ‘중소선박안전기술포럼’의 운영 개선 추진

- 소형선박 안전기술 향상을 위한 설계 및 성능평가 프로그램 개발
 - 소형선박(어선 포함)의 선형설계, 저항(속력), 복원성능, 운동성능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플랫폼에서 계산 가능한 소형선박 전용 통합 선박계산 프로그램 개발 추진
 - * ('18년 자체연구과제) 소형선박 안전기술 향상 설계 및 성능평가 프로그램 개발
- IMO 선박안전 및 환경규제 기술동향 및 국내 산업계 영향에 대한 현안조사를 통한 미래기술 예측분석('11~'20, / 매년 1억원)
 - 선박안전 및 환경규제와 관련한 국내외 해사정책/산업/기술 동향 및 IMO 정책동향 분석을 통하여 해사부문 주요 이슈 및 트렌드를 분석함으로써 관련 연구개발 로드맵 및 기획연구보고서 개발
 - * ('18년 과제) IMO, 산업기술 및 기획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통하여 중요 기술아이템 후보군을 도출하고 기획전담팀을 구성하여 안전 및 환경 분야별 기획연구보고서 개발

- 해양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기반연구('14~'18 / 총사업비 72억원)
 - 선원피로관리, 선상문서 간소화 등 인적과실 예방 프로그램, 인간 중심 항해장비 설계기준 및 VR기반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개발
 - * ('18년 과제) 선상 피로도 감소를 위한 워크로드 기반 피로 평가기법 개발, 선박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및 자동화 기술 개발, 인적과실 유발요인 프로그램 개발 등
- 북극항로 운항선박용 항행안전지원시스템 개발('14~'18 / 총사업비 50억원)
 - 고정밀 북극항로 빙상정보 예측기술, 안전속도 예측기술, 안전속도 시험·평가 및 DB 구축을 통한 북극항로 운항 선박용 항행안전 지원 시스템 개발 및 실선검증
 - * ('18년 과제) 고정밀 북극항로 빙상정보 예측시스템 시범서비스, 북극항로 운항선박용 항행안전지원시스템 실선검증 및 보완, 선급 AIP 인증획득 등
- 선박 및 인명대피 지원 기술개발('16~'19 / 총사업비 128억원)
 - 연안여객선에 위급상황 발생 시 선장이 단독으로 상황을 판단 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골든타임 내 효과적으로 인명과 선박의 대피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대피안내 지원시스템 개발
 - * ('18년 과제) 긴급대피지원안내 선상운용시스템 개선 및 운용 테스트, 유도 등형 인명대피안내기기 선급인증, 여객선용 복원성지수 산출기술 개선, 선박 탑재형 대피항로·조종지원 시스템 개발 등
- 중소형선박 안전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포럼 운영
 - 現 선종별 전문가 그룹을 요소기술 분야로 재편성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매분기 분과별 세미나 개최
 - 국내연안운항 선박에 대한 안전기술 개발 및 해양사고 저감을 위한 정책제언 등 로드맵 제시(4/4분기)

1-6-2

국내 어선의 최적화 표준선형 개발

□ 배경 및 필요성

- 연근해어선의 노후화로 해양사고에 취약하고 유류 과소비, 어선원 과다 소요, 복지 열악으로 어선원 승선기피 등 어업기반 악화
 - * 선령 21년 이상(연근해 43천여척 중) : ('16)19%(8,107척)→('20)45%→('25) 69%
 - ** '11~'15년 어선사고 건수는 연평균 1,124건이며, 사망·실종자는 연평균 99명임
- 어선원 안전·복지공간 확보와 운영 경비절감 등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을 위해 '고비용·저효율 노후어선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시급

□ 추진계획

◆ 어선원 안전·복지공간 확충, 운항경비 절감 및 조업특성 등을 고려한 한국형 표준선형 어선 개발로 어업현장 보급기반 마련

- 연근해어선 차세대 한국형 표준선형 개발 추진
 - '17~'20년간 국비 242억원(R&D 출연금) 투입, 연근해 10개 업종 차세대 한국형 표준어선 개발·보급 추진
 - * (근해) 채낚기(70톤급), 근해자망, 근해통발, 근해연승, 외끌이대형기저 (연안) 연안복합, 연안통발, 연안자망, 연안개량안간망, 이동성구획어업(1종)
 - 연안 3종, 근해 1종 설계, 건조 및 실증화 사업('17~'18)
 - * 연안 3종(자망·복합·구획) 설계('17.9)→시제선 건조('17.12~'18.6)→시험조업('18.7~) 근해 1종(채낚기) 설계('17.10)→ 시제선 건조('18.2~12) → 시험조업('19.1~)
-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지원
 - 고비용·저효율의 노후어선을 에너지 절감, 자원관리, 어선원 복지·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지원
 - 한국형 표준선형을 어업현장에 보급하기 위하여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추진

1-6-3

선박설비 및 기타 안전분야 기술개발

□ 배경 및 필요성

- 첨단 ICT 기술발전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기술 융·복합 요구 증대
- 국제사회에서의 ICT 기반 해양안전 기술개발 경쟁은 심화되고 있으나 국내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여력은 부족한 실정

□ 추진계획

◆ 중소형 선박 안전설비 개발 및 상용화, ICT 기술을 활용한 선박 안전관리 프로그램 개발 추진

-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고도화
 - AIS(선박위치정보)와 ASM(디지털 해사안전정보) 통합기술 개발
- VR(Virtual Reality), AR(Augmented Reality) 등 가상 체험형 선박 검사·점검 프로그램 개발
 - 구명정 탑승, 구명뗏목 작동 및 팽창 시연, 여객선 비상대피 등 해양사고 대처요령 습득을 위한 가상체험 프로그램 개발
- 페어망·로프 등 해상 부유물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기술 개발
 - 로프걸림 방지 가능한 선형(船形) 및 로프커터·로프가드의 개발

1-6-4

차세대 자율운항선박 설계 및 운항기준 마련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IMO는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선박의 안전, 선원의 승무, 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제·개정 논의를 시작

- 현재 개정이 필요한 협약 식별 등 초기단계이나, IMO는 '20년까지 관련규정을 정비할 계획으로 향후 다수의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

* '18.5예정인 IMO 99차 MSC(해사안전위원회)에 자율운항선박 관련 의제문서만 19개

□ 추진계획

◆ 실무그룹(WG) 구성 및 운영을 통해 新선박 등장에 따른 국제사회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아국주도의 신규 의제개발로 국제표준화 선도

- IMO 자율운항선박 대응 실무그룹(WG) 구성·운영('18.4~)

- 자율운항선박 관련 IMO 의제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국내외 동향분석 및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아국 주도 신규 의제개발

- 국내외 회의·세미나 참석 및 주요개발국과의 협력 강화('18.1~)

- IMO 등 국제회의 및 세미나 참석을 통해 관련 기술동향 파악 및 정보 공유, 덴마크 등 자율운항선박 주요 개발선도국과의 협력 강화*

* 해운협력 MOU 개정 및 양자회담시 주요 신규 의제로 추가하여 국가간 협력강화

2. 지율적 안전관리 기반확대 및 해사안전관리체계 고도화

□ 관계기관 협업 강화로 안전대책 현장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안전정보 공유 등을 통해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 '장관님 주재 안전점검회의로 격상, 상황관리 카드 작성을 통한 이력관리 강화

□ 해사안전감독 인력 추가확보로 전문분야별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선종에 대한 맞춤형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 화물선 해사안전감독관 확충(28명) 및 전문분야별 감독체계(2인 1조) 운영

□ 선사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부실 안전관리 대행업체의 퇴출을 유도하여 안전관리 실효성을 확보 하겠습니다.

* 영세선사 안전관리 컨설팅지원 확대('17년 30개사→'18년 50개사), 내 항선 안전관리업무 대행사업장 인증심사 강화로 기준 미달업체 퇴출 유도

□ 선박사고, 해양오염, 풍수해 등 해양수산분야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고 대응역량을 강화 하겠습니다.

* 재난유형별 맞춤형 대책 수립, 유관기관 합동 해양수산분야 시설물 안전대진단 실시('18.2~3), 안전한국훈련을 통한 현장·도상훈련('18.상)

□ 각종 테러 및 국제항해선박 보안사고 예방활동과 종사자 재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18.2~3) 등 성공적 개최지원, 선사·선박 보안책임자 법정교육 연중 실시 및 합동보안훈련 실시('18.12)

□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의 이행과 시민이 참여하는 4중 안전관리 체제를 도입 하겠습니다.

* 여객선 국민안전점검관 제도 도입('18.3) 및 해사안전감독관 불시점검 강화

2-1

정부의 안전관리제도 기반·역량 고도화

2-1-1

해양안전 관계기관 협력기반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중앙정부 주도의 안전관리 업무체계는 현장 해사안전업무의 복잡·다양성으로 효과적인 이행에 공간적, 조직적 한계
- 안전대책의 실효적 이행을 제고하기 위해 해사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유관기관(해경, 수협, 검사기관 등)의 적극적 업무참여 유도 필요

□ 추진계획

◆ 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을 통한 해양안전관리 역량의 불균형 해소 및 해양안전 관계기관의 자체적 역량강화 지원

- ‘해양안전 종합관리 TF’ 운영 및 내실화를 통해 유관부처·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안전정책의 현장 이행력 제고(‘18년 1분기 이후)
- 장관님주재 안전대책 점검회의로 격상하고, 안전에 대한 상황관리 카드 작성 등을 통해 기관 협조사항에 대한 이력관리 강화
- 위해요소 발굴 등 주제별 소규모 회의, 워크숍, 교육 참여, 정책 현장 방문, 지역별 순회개최 등을 통해 참여기관의 관심도 제고(연중)
- 지자체·검사기관 등의 일선 담당자 교육 등에 참여하여 우리부의 해사안전정책 및 안전대책을 적극 소개하여 공감대 확산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인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사고, 해양오염, 풍수해 및 지진 등 해양수산 분야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역량 강화 ○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체계적 재난발생 대응을 위한 유형별 상위 매뉴얼 개정에 따른 소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및 재난대응수칙 개선 ○ 재난안전분야 공무원 전문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장 및 실무자 교육(3월, 4월, 10월)
울산항만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항 해양안전벨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항 13개 유관기관 및 업·단체의 장으로 구성된 울산항 해양안전벨트 운영을 통한 안전시책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 울산항 해양안전벨트 : 울산항만공사,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해경,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해양환경관리공단 울산지사, 울산항도선사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 울산항탱크터미널협의회, 울산항운노동조합, SK에너지(주), (주)S-OIL, (주)신흥사 ○ 항만안전보건협의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역근로자 산재예방을 위하여, 4개PA 및 안전보건공단으로 구성된 항만안전보건협의회 운영 ○ 안전관리협의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항만공사, 하역사, 항운노동조합 안전관리자가 공동 참여하는 안전관리자협의회 구성·운영하여 주요 사고 사례 공유 및 분석 ○ 해양안전실천본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실천본부 공동본부장 수행 및 안전 캠페인 실시
여수항만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 운영을 통한 안전관련 활동 공동 추진 ○ 항만안전보건 합동패트롤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하역업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체계 점검 및 정보공유 등 * 참여기관 : 4개 PA, 안전보건공단, 부두운영사 등 ○ 안전관리자 T/F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개선사항 의견 조회 및 개선방안 논의 * 참여기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부두운영사, 하역사 등 ○ 항만하역 안전관리 담당자 간담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하역 안전관리 및 재난대비 관련 사례 공유 등 * 참여기관 : 하역사, 부두운영사 안전담당자 등

2-1-2

해사안전감독관 안전관리 고도화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화물선 및 그 사업장에 대한 감독이 약 2.2년에 1회 주기로 시행됨에 따라 감독 주기가 길어 화물선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 체계적인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및 고도화를 위해 해사안전감독관 충원 및 다양한 선종에 대한 감독관별 역량강화 필요

* ('16 화물선 감독실적) 대상: 2,989 개소 → 실적: 1,361개소(45.5%), 약 2.2년에 1회

** 여객선 및 사업장은 연간 3회, 운항관리자는 연간 4회(분기별 1회)의 지도·감독 실시

□ 추진계획

◆ 감독인력 추가 확보로 화물선 감독 강화, 전문분야별(운항, 감항) 2인 1조 감독체계 운영, 다양한 선종에 대한 맞춤형 지도·감독 실시

- 화물선 안전감독 강화를 위해 해사안전감독관 확충(28명) 및 전문분야(운항·감항)별 감독체계(2인 1조) 운영

- 감독주기 단축을 통한 화물선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화물선감독관을 향후 '21년까지 단계적으로 17명 증원** 추진

* ('16실적) 연간 45.3% → ('21년 계획) 연간 100%(모든 화물선을 연간 1회 점검)

** 인원/점검률 : '18년(20명/59%) → '19년(26명/73%) → '20년(32명/88%) → '21년(37명/100%)

- 감독인력 증원('18, 4명)에 따라 전문분야별 감독체계(2인 1조) 운영

- 선종별 감독역량 강화와 매너리즘 예방 등을 위해 감독관별 취약분야에 대한 주기적 보완교육 및 교차감독* 강화

* 감독률 : ('17)본청 85%, 타청 15% → ('19)본청 77%, 타청 23% → ('21)본청 70%, 타청 30%

- 결함지적 위주의 감독에서 지도·교육 중심의 감독체제로 전환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차 감독을 통한 선종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 보완 등 해사 안전감독관 업무 역량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도 해사안전 지도·감독 계획에 따라 지방청별 교차 감독 실시 ○ 결함의 지적보다는 현장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미비점을 발굴·개선하는 형태의 해사안전감독 실시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항 3단계 공사사업, '18년 평창동계 올림픽 등 관내 현안 사업을 고려한 맞춤형 지도·감독 및 교차감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선, 해상공사 작업선박 등 주요 취약선종에 대한 현장 점검 및 방선교육 추진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운항 차도선 증가(2척→4척)로 차량적재 및 고박에 대한 감독역량 강화 ○ 결함지적 위주의 감독에서 지도·교육 중심의 감독 시행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선박을 우선으로 한 지도·감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취약선(모래운반선, 위험물운반선 등)을 대상으로 지도·감독 빈도수를 높이고 취약요소가 많은 선박을 개별중점관리 ○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안전관리에 주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선종의 다양한 지식을 외부 전문가 교육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해사안전감독관이 스스로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함 - 반복되는 지도·감독업무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연령층, 직업군을 대상으로 해양안전인식에 필요한 구명설비 시연회를 개최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1조 감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화물선 분야 감독관 충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청별 교차 감독을 통한 전문지식 보완 및 격차 해소 - 감독관 워크숍 및 직무교육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

2-1-3

중대해양사고 발생선박 안전관리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사망·실종사고, 충돌·좌초·전복사고, 기름유출 발생사고 등 중대해양사고 유발선박과 선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지속적 안전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대형해양사고* 방지에 한계 노출

* 세월호('14.4), 제501오룡호('14.12), 돌고래호('15.9), 스텔라데이지호('17.3)

□ 추진계획

◆ 사망·실종사고, 충돌·좌초·전복사고, 기름유출 발생사고 등 중대해양사고 유발선박과 선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중대 해양사고가 발생선박 안전도정보공표 및 합동점검 실시

- 중대해양사고 발생선박의 사고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관리자·검사기관·지방청 등 합동점검 실시('18.1~)

* 중대사고 발생선박의 안전도정보 공표('17.10.13, 27척)

- 사고발생 선사·선박에 대한 특별(수시)심사·감독실시

- 중대해양사고 2회 이상 발생 해운선사·안전관리 대행업체 등에 대한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특별 지도감독 실시

-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선사(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적정 이행여부 확인,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피드백체계 구축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인천청	○ 중대해상사고 발생 선박에 대해서는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대행검사기관(KR, KST)과의 합동점검 실시
여수청	○ 중대해양사고 발생선박의 사고재발방지를 위해 정부대행검사기관(KR, KST)과의 합동점검 실시(2차사고 예방) ○ 사고발생 선사 또는 선박에 대해 경중을 고려하여 수시심사 및 안전점검 실시 -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증서 회수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안전관리체제 이행의 적절성 및 재발방지대책 확인 ○ 종사자의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사업장·선박의 심사 이력 관리를 통해 차기 심사 시 종사자의 업무 친숙도 제고
마산청	○ 사고발생 선사·선박에 대한 집중관리 추진 - 중대해양사고 2회 이상 발생 해운선사·안전관리대행업체 등에 대한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수시심사 및 지도·감독 실시 * 사고선사(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적정 이행,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피드백 체계 구축 -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선사의 안전관리 역량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
동해청	○ 기존 사고 발생 선박 및 선사에 대한 수시심사 및 지도·감독 실시 - 안전관리체제 이행여부 확인, 수시 지도·감독 실시 등 해당 선박 및 선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과거 유사한 사고이력, 사고의 경중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실시
군산청	○ 안전도정보 의무공표 대상 선박*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 시행 - 중대해양사고 발생선박의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관리자·검사기관(KR, KST) 등과 합동점검 실시 *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인명·선박·기름 유출사고 ○ 사고발생 선사, 선박에 대한 수시인증심사 실시 - 중대해양사고 2회 이상 발생 해운선사, 선박에 대한 사업장·선박 안전관리체제 수시인증심사 실시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해양사고 발생선박의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자·선박검사대행기관 등 합동점검 실시 ○ 사고발생 선사·선박에 대한 특별(수시)심사·감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해양사고 2회 이상 발생 해운선사·안전관리 대행업체 등에 대한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특별 지도감독 실시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발생 선사·선박에 대한 수시심사·감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해양사고 2회 이상 발생 해운선사·안전관리 대행업체 등에 대한 수시심사·지도감독 실시 * 사고선사(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적정 이행여부 확인, 사고 재발방지대책 확인 및 재발방지를 위한 피드백체계 구축 -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업무수행 역량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사고의 규모 및 피해정도, 인명사상 여부, 사고 원인 등에 따라 선박 및 선사(사업장) 대상 수시인증심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관할청 사업장의 경우 관할 지방청과 협조체제 구축 ○ 선박 및 선사와 합동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선박 수시심사(지도·감독) 시 선주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면담 및 안전관리매뉴얼 교육 병행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 해양사고 발생선박에 대한 수시심사 및 집중관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이행여부 확인, 선원의 비상대응능력 제고 및 선사의 재발방지대책 강구 -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선박검사기관과의 합동점검 실시

2-1-4

해양사고 통계 개선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사고 통계 품질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반영 및 통계 이용자에게 관련성 있고 유의미한 통계 생성을 위한 개선 필요
- 해양안전정책 수립에 활용도가 높은 맞춤형 통계 생산·제공을 통해 해양사고율 저감을 위한 정책 등 추진 지원 필요

□ 추진계획

◆ 해양사고 통계 세분화 및 통계종류 확대

◆ 지속적인 해양사고 통계개선 추진

- 해양사고 통계 분석의 혼선 감소 및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해양사고 현황을 전달하기 위한 통계표 변경 추진
 - ‘비해당’ 사건 및 전년 이월분에 대한 설명, 유사 통계인 해상조난사고통계와의 구분기준과 분류방식 차이 등의 설명 명시
 - 선박용도별 국적별* 해양사고 통계표 신설 및 선종 대분류 항목 중 비어선에 대한 세부설명** 별표 추가
 - * 국적/외국적으로 구분하여 사고현황 명확화
 - ** 비어선 사고에 수상레저기구 사고가 포함되어있는 점 명시
-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통계 제공항목 추가
 - 나홀로(1~2일 승선) 조업현황, 인명피해의 국적구분(내·외국인) 등
- 통계 실효성 확보 및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의견수렴
 - 해양사고 통계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합리적인 통계 개선

2-2

선사의 안전관리 능력제고로 자발적인 안전관리체계 정립

2-2-1

안전관리체제 이행 선진화

□ 배경 및 필요성

- 안전관리 전담인력 부재 및 선원의 고령화 등으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영세선사 등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지원 필요

<2척 이하 소유 영세사업장 현황, 17.2월 기준>

관할	합계	영남권(232)				호남권(160)			수도권(74)		기타(16)	
		부산	마산	울산	포항	목포	여수	군산	인천	평택	동해	대산
영세 사업장	284	140	64	17	11	81	67	12	72	2	3	13

□ 추진계획

◆ 선사의 자체적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확대 및 부실 안전관리 대행업체의 퇴출유도로 안전관리 실효성 확보

- 안전관리 전담인력 부재 및 선원의 고령화 등으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영세선사에 대한 안전관리 컨설팅지원('17.4~)

- (대상) ① 전담인력 부재로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중인 선사,
② 안전관리체제 적용 非대상 선박(500톤 미만)을 운영하는 선사,
③ 해양사고를 발생 선사 및 컨설팅 지원 희망선사 등

* '17년(30개사) → '18년(50개사)→ '19년(70개사) → '20년(90개사) → '21년(100개사)

- 내항선 안전관리업무 대행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 강화로 기준 미달 업체를 해운시장에서 퇴출 유도('17.3~)

* 총 121개 대행업체에서 전체 대상선박의 60%(620척/1034척)를 안전관리대행 중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p>【제주해양수산관리단】</p> <p>○ 선박 및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p> <p>– 2018년 안전관리체제 심사 계획</p> <table><tr><td>구 분</td><td>선박</td><td>사업장</td><td>계</td></tr><tr><td>횟 수</td><td>15</td><td>9</td><td>24</td></tr></table> <p>– 형식적인 서류 작성 지양 및 실제 이행여부 확인 강화</p> <p>– 고령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면담으로 개인임무 숙지여부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체제 이행상태 확인</p> <p>– 해양사고 발생시 수시인증심사(또는 사업장 지도감독) 실시</p> <p>– 대상 : 해양사고 발생 선박 또는 선사</p> <p>–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컨설팅 활성화</p>	구 분	선박	사업장	계	횟 수	15	9	24
구 분	선박	사업장	계						
횟 수	15	9	24						
여수청	<p>○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강화(안전관리대행 사업장의 인증심사 포함)</p> <p>– 인증심사 결과 중부적합사항의 식별로 인증서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불법행위 등을 한 경우 행정조치(영업정지 등) 시행</p> <p>– 심사 및 교육의 병행실시를 통한 종사자의 안전관리능력 제고</p>								
마산청	<p>○ 안전관리 전담인력 부재 및 선원의 고령화 등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영세선사 등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 컨설팅지원</p> <p>○ 내항선 안전관리업무 대행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 강화로 기준미달 업체 해운시장 퇴출 유도</p> <p>– 인증심사 결과 중대결함으로 인증서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불법행위* 등을 한 경우 강력 행정조치(영업정지 1개월 등) 시행</p> <p>* 효력정지 기간 중 관리 선박이 불법 항해 시 또는 해양사고를 발생시킨 경우</p>								
동해청	<p>○ 사고 발생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수시 지도감독 실시</p> <p>– 안전관리 체제 이행여부 및 선사↔선박 간 개선조치 여부 확인 등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피드백 체계 구축</p>								
군산청	<p>○ 내항선 안전관리업무 대행사업장 및 소속선박에 대한 인증심사 강화로 기준 미달 업체 해운시장 퇴출 유도</p>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심사 결과 중대결함으로 인증서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불법 항해 등을 한 경우 강력 행정조치 시행 * 안전관리적합증서 효력정지 사업장의 소속선박 운항 집중 모니터링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원의 고령화 등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영세선사 등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 컨설팅지원 ○ 내항선 안전관리대행업체에 대한 인증심사 강화로 기준미달 업체 퇴출 유도 - 인증심사 결과, 중대결함으로 인증서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불법행위 등을 한 경우 강력 행정조치 시행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시 부적합 사항을 식별하여 모든 업무 수행에 안전관리가 적절히 적용되도록 안내 ○ 선사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간담회를 활성화하여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안전의식 제고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항선 선원의 고령화와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영세한 선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관리체제 이행을 위한 안전교육, 계도 위주의 인증심사 실시 및 자체 안전관리 역량강화 지원 - 안전관리책임자의 매월 방선점검 이력 등을 통한 육상지원 여부 및 필수정보 제공여부 확인, 선원의 교육 및 훈련 이력 검토 - 안전관리 인력 부족 및 무리한 운항 스케줄 소화로 인한 적정 휴식시간 미 준수 등 안전을 저해하는 관행적인 운행 실태 개선 ○ 고령화 선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방선교육 및 교육자료 배포

2-2-2

해양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종전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해운기업 등 해사안전 주체가 자발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갈 수 있는 제도 신설
- 해사안전의 수준 향상과 해양사고 감소에 기여한 선사를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공표하기 위해 해사안전법령 개정('14.11)
- * '16년도 해사안전 우수 해상여객운송사업자 2개사(내항1, 외항1) 지정 완료('17.5)

□ 추진계획

◆ 100개사 미만 업종은 상위 1개사를 우수사업자로 지정토록 하고, 우수사업자 평가지수(저사고율(70→60점) + 안전경영지표(30→40점) 조정 등

- (제도개선) 안전에 대한 업체의 노력도 비중을 높이고 안전경영지표의 평가항목 유사·중복 제거 및 대상 명확화
- (지정절차) 평가방법 수립·안내 → 자료 수집 및 공모 → 평가결과 안내 및 이의신청 접수·검토 → 현장실사 →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선정위원회 개최 → 우수사업자 지정
- (인센티브 제공) 우수사업자 표지 제공 및 포상, 인증심사 수수료 경감 및 면제, 해수부 주관 안전점검 면제 등 추진

2-2-3

선사의 안전관리능력 제고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최고경영층에 대한 안전의식 함양 및 안전관리자의 선박 안전관리 능력 제고 등을 통해 해운업계 전반에 안전문화 정착도모 필요
- 선사 경영층을 대상으로 '14년 시범사업 실시 및 '16년 '선사 CEO 대상 해양안전리더' 교육 지속 확대 운영
- * (교육실적) 15명('14년 시범사업) → 364명('15년) → 360명('16년)

□ 추진계획

◆ 선사의 안전관리능력 제고를 통해 안전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임을 인식시켜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경영문화 정착 추진

- 최고경영층에 대한 안전의식 함양 및 안전관리자의 선박 안전관리 능력 제고 등을 통해 해운업계 전반에 안전문화 정착 추진
-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안전문화 정착교육,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론 및 사례 위주의 강좌 확대* 운영('18.5~, 10회, 330명)
- * (기존) 여객선 및 화물선사 CEO (확대) 다중이용사업자, 정유터미널 운영사 등
- 사업장 안전관리시스템 상시 컨설팅 제도 실시
- 상시 컨설팅 접수창구(선박안전기술공단)의 효율적 운영으로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자발적 컨설팅 요청 활성화('18.4~)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사 안전관리강화 종합대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심사 강화, 안전관리대행업체 강화, 제도 강화 등을 통하여 내항선 안전관리 이행 내실화 ○ 선사 자체안전관리 능력 향상 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이행 안내서 발간을 통한 선사 및 선원의 안전 관리능력 향상 도모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 CEO 해양안전리더교육과 연계하여 안전관리 수범사례 공유 등 최고경영층에 대한 선박 안전관리 능력 향상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여객선 및 화물선사 CEO → (확대) 통선 등 다중이용사업자, 정유터미널 운영사 등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 CEO 해양안전리더 교육과 연계하여 최고경영층에 대한 선박 안전관리 능력 향상 교육과정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사별 안전관리 수범 사례 및 미흡사례 공유 ○ 최고경영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간담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실천 지역본부 활동과 연계한 교육 및 캠페인 행사 시 병행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사 최고 경영자 대상 안전관리 수범사례 및 미흡사례 등 공유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해양안전리더교육과 병행 실시) ○ 사업장 지도·감독 및 안전관리체제 심사 시 부적합사항 지적 보다는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반기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 있는 해양안전 관리와 국민 해양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해운 업·단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전문지식 정보 등 교류·소통 추진 ○ 위험물운송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업·단체 간담회 개최 및 건의·애로사항 청취(반기별)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경영층 대상 해양안전리더교육과 연계하여 토론 및 사례 위주의 강좌 운영(연 1회)으로 업계 안전문화 정착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화물선사, 위험물하역업 및 해운대리점 등 업계 전반 CEO 대상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사 최고경영자 안전의식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사 최고 경영자 대상 안전관리 수범사례 및 미흡사례 등 공유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해양안전리더교육과 병행 실시) - 사업장 지도·감독 및 안전관리체제 심사 시 안전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안전관리매뉴얼 상 최고경영자 의무·책임사항 교육

2-3

지속가능한 해양수산분야 재난관리체계 구축

2-3-1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역량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이상기후(폭염·한파·태풍 등) 심화로 대형재난* 발생 가능성 상존, 경주·포항 지진 및 지속적 선박사고로 재난피해에 대한 국민우려 증가

* 최근 5년('13~'17)간 태풍으로 인한 해양수산시설 피해액은 연평균 6,195억원

- (필요성) 국가 재난관리·대응 역량 제고를 통해 자연·사회재난으로 인한 국민피해 최소화 및 대형재난으로 확산 방지 필요

□ 추진계획

◆ 정부기관간 유기적인 재난협업체계 구축, 재난업무 종사자 교육, 시설물 점검 강화, ICT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첨단화 등

- 해양수산재난 범정부 협업 강화 및 재난유형별 맞춤형 대책 수립
 -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분야에 특화된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 합동 안전대진단** 실시('18.2.5~3.30)

* 재난유형(사회·자연·안전관리)별 대응체계, 예방·대비·대응 대책 수립·시행

- ① (자연재난) 풍수해(연안침식 포함), 적조, 조수, 지진·해일
- ② (사회재난) 해양오염, 선박사고, 방사능 누출, 감염병, 육상화물운송 차질 등
- ③ (안전관리) 물놀이(해수욕장) 안전관리, 수산물 안전관리

** 해양수산 시설물(항만·어항·여객터미널·선박·양식장·청사 등) 안전진단 실시

- 재난대비 범정부 합동훈련 및 교육 등을 통한 자체대응역량 강화
 - 해양수산재난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한 현장·도상훈련 실시('18.上), 재난업무 종사자 워크숍 및 전문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연중)

- * 자연재난-선박-인명-오염-항만-양식장 등 1차 사고에 기인한 연쇄적 사고 발생
-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을 통한 재난교육과정(사이버 교육과정 포함) 이수

○ ICT를 활용한 태풍대비·대응 시스템 첨단화 추진

- 태풍으로 인한 공사현장·선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항만건설 및 여객선 운항 현황, 유관기관간 실시간 확인·공유·전파 체계 구축('18.12)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반기 안전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항구남방파제 등 기존시설 82개소 및 시공중인 건설현장 ○ 설·추석 명절, 해빙기·우기 대비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점검 실시 ○ 지진대응 훈련 및 지진교육(워크숍) 개최 및 참석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분야 재난대비 훈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하여 도상·현장훈련 실시 ○ 재난업무 담당자 교육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교육, 교육기관 전문교육 등을 활용한 상시교육 실시 ○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 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체계적 대응을 위한 매뉴얼 상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 수시 정비 ○ 태풍·폭설 등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기, 태풍철 등 대비 항만·어항시설, 항로표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사고 관계기관 상호 협력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분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도상·현장) 실시 및 수난대비 기본훈련(국민안전처 주관) 참여(분기별)를 통한 상황처리 능력 배양 ○ 해양 선박사고(일반선박)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및 업·단체 비상연락망 최신화, 유관기관 합동훈련 등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 반영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평창 동계올림픽기간 중 교통소통대책 수립으로 재난 대응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한 각 반별 비상대응체계 구축 ○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 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개인 대응수칙 현행화 및 시의적절한 매뉴얼 개정 (표준·실무매뉴얼 개정, 비상연락망 최신화 등) 등으로 현장 실행력 확보 ○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실태 점검 실시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난(태풍, 지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공사* 추진 * 묵호항 북방파제 보강공사(∼'17.12월/공정률 83%) 및 접안시설 내진보강공사(∼'18.12월/공정률 36%) ○ 국가기반체계 보호 및 재난관리자원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반체계 보호지침에 따라 동해·묵호항 시설·장비·인력 등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계획 및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수립·시행 ○ 해양수산분야 재난대비 교육·훈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전문교육 이수 의무자(재난관리책임기관 관리자, 실무자)에 대한 교육대상 관리카드 유지 및 교육 참석·독려를 통한 능력강화 추진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체계적 재난발생 대응을 위한 유형별 상위 매뉴얼(표준·실무) 개정에 따른 소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및 재난대응 수칙 개선 ○ 태풍, 폭설 등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철(태풍, 호우 등), 겨울철(폭설, 한파 등) 재난예방 비상대책반 구성·운영 및 계절별(해빙기·여름·겨울철) 재해위험 시설 등 사전점검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기간 운영 : '18.4.15~5.14(예정) * 여름철 자연재해대비 소관시설 업무에 대한 사전점검 실시, 자연재난 사전대비 전담 T/F팀 구성·운영, '18년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 수립·이행 ○ 해양수산 분야 재난대비 교육·훈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국훈련 중 해양수산부 주관재난에 대하여 현장·도상 훈련 시행 및 재난담당자 전문교육 등 재난 담당자에 대한 주기적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재난발생 대비 신속한 재난전파 체계 구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및 조수 대비 위험물 취급업체, 유관 기관 및 어촌계 등과 신속한 전파체계(문자 전송서비스) 구축·운영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대비 항만·어항시설 및 항만·어항공사현장 안전점검 실시 ○ 본부(해사안전관리과, 항만기술안전과)에서 실무매뉴얼 배포시 우리 청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하여 배포 예정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 선박사고 대비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한 도상 훈련 실시 및 개선사항 분석·반영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 선박사고(일반선박)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및 업·단체 비상연락망 최신화 유지, 보완사항 개선 ○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 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개인)대응수칙 현행화 및 매뉴얼 개정소요(행동매뉴얼 개정, 비상연락망 최신화 등)에 대한 시의적절한 반영 추진 ○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실태 점검 실시 - 자연재난(태풍, 지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공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신항 8부두(#84,#85) 내진보강공사(~'17.4월) 및 포항신항 7부두(#73,74,75,75), 8부두(#81,82,83) 내진보강공사 중 ○ 국가기반체계 보호 및 재난관리자원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반체계 보호지침에 따른 포항항 시설·장비·인력 등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 및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수립·시행 ○ 해양수산업자 재난대비 교육·훈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전문교육 이수 의무자(재난관리책임기관 관리자, 실무자)에 대한 교육대상 관리카드 유지 및 정기교육 참석을 통한 실적 관리 추진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유형별 관리되는 행동매뉴얼의 지속적인 관리로 비상 상황에 적극적인 대응과 수습을 도모 ○ 재난 관련 담당자의 각종 재난에 대한 전문지식을 외부 전문가를 통해 꾸준히 습득하게 하여 현실 업무에 반영
전라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사고, 해양오염, 풍수해 및 지진 등 해양수산 분야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역량 강화 ○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체계적 재난발생 대응을 위한 유형별 상위 매뉴얼 개정에 따른 소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및 재난대응수칙 개선 ○ 재난안전분야 공무원 전문교육 실시
전라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업자 재난 대비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를 통한 신속·체계적인 대응 체계 확립 ○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체계적 대응을 위한 매뉴얼 비상연락망 등 현행화 ○ 재난업무 담당자 교육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교육 관리카드 작성·관리로 재난관리 담당자 역량강화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경상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사고, 해양오염 등 해양수산분야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역량 강화 ○ 해양수산분야 맞춤형 재난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유관기관 합동 해양수산분야 시설물 안전대진단** 실시('18.上) * 재난유형(사회·자연)별 대응체계, 예방·대비 대책 수립·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연재난) 적조, 조수 ②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해양오염, 선박사고 * 해양수산분야 시설물(어항, 항만), 낚시어선 등에 대한 점검 실시 - 분야별 매뉴얼 정비 및 개정 및 현행화('18.上) : 도, 전 시·군
부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재난 매뉴얼 통합 지도·점검 ○ 점검대상 : 부산시 9개 기관(부서) 및 11개 구·군 ○ 재난유형 : 해양 선박사고, 해양오염, 조수 등 14개 유형 ○ 점검내용 : 해양재난 매뉴얼 보유현황 및 작성·운영실태 점검 ○ 중점점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재난 매뉴얼 보유현황 및 비상연락망 정비 현황 - 누구라도 쉽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간결한 표현으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 매뉴얼 구성의 적정성 및 실효성 검토 ○ 연근해 어선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적용이 가능토록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 재난대응 프로세스별 행동요령 개선(징후감지→초기대응→비상대응→수습·복구) - 매뉴얼 적용 기준을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고유형 고려, 확대 - 관련부서와 임무 및 역할 명확화 * 시 및 유관기관 협업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역할 및 기능 규정 ○ 어항 등대 유지·보수 ○ 매월 1회 정기 점검 실시 어항 등대(항로표지) 도색 등
여수항만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분야 재난대비 훈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하여 도상·현장훈련 실시 - 해수부 재난대비 월별 추진계획에 따라(선박사고, 해양시설 등) 재난 훈련 계획 수립·실시(10월) ○ 재난업무 담당자 교육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교육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재난업무 담당자의 체계적인 재난 교육이수 관리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교육, 교육기관 전문교육 등을 활용한 상시교육 실시 ○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 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체계적 대응을 위한 매뉴얼 상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 수시 정비 ○ 태풍·폭설 등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 대비 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2-3-2

해양사고 발생대비 상황관리체계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사고는 유동성·연계성*이 강한 바다환경의 특성상, 초기 대처 능력이 미흡할 경우 사고의 확산, 복합적 피해 발생 개연성이 높음

* 바닷물의 유동성, 해상-육상의 연계성으로 인해 해양사고는 대형피해로 확산 가능

-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파·대응을 위해 기관간 협업 강화 및 상황관리시스템의 지속적 첨단화 필요

□ 추진계획

◆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강화 및 상황관리시스템 고도화

- 해수부 종합상황실 인력 보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 (상황관리) 24시간 상황관리가 필요한 재난관리 및 해상보안(해적·테러) 업무 신규 추가, 빈틈없는 상황관리를 위한 소요정원 확보 추진('18.4)
 - (협력체계) 민·관 합동워크숍('18.11) 및 유관기관간 업무전학('18.9)을 통한 협업체계 강화, 상호 벤치마킹을 통한 발전 도모
- 해양사고 상황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계속)
 - (상황전파) 사고상황 보고·전파의 신속한 처리, 데이터베이스 지속 활용을 위한 상황관리전파시스템 기능 개선('18.3)
 - (선박운항정보) 모바일 서비스 확대(現안드로이드用 → 現+아이폰用), AIS 기지국 신설·교체 등 안정적 선박위치신호 수신 기반 마련

* 선박운항정보관련 전산용역(GICOMS 및 AIS) : '18.5~11, 15.4억원

2-3-3

항만 및 선박보안관리 체계 공고화

□ 배경 및 필요성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위협(국제테러·해적·북도발 등)이 상존하는 국제적 현실을 감안, 보안사고 예방·대응태세 유지 필요
- 특히, 대규모 국제행사(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18.2~3월)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범정부 보안활동에 적극 참여

□ 추진계획

◆ 대규모 국제행사 안전대책 추진, 보안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시행, 소관시설 보안활동 강화 등

-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18.2~3월) 테러예방 안전대책* 시행, 대테러센터(국조실) 업무 협조·지원 및 소관 시설에 대한 보안활동 강화

* 비상대책반 가동, 항만보안등급 상향, 소관 시설 보안점검 등

- 지방청 선박보안심사관 전문교육(신규·보수, '18.上) 및 선사·선박 보안책임자 법정교육(보안교육기관, 연중) 실시
- 국제협약 및 국내법령*에 따른 합동보안훈련 실시('18.12)

*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 ISPS Code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러 관련 정보 공유체계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 등에서 테러징후 신속 포착 및 정보 공유로 대 테러 사고 예방 및 예찰 활동 강화, 테러·무단 하선자 발생 시 합동조사 - 다중이용 시설, 취약 지역 및 시설에 대한 순찰 횟수 증가로 사전 대테러 예방 ○ 밀입국자 등 항만보안 위해 요소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 항만시설 불시 보안점검을 통한 보안근무자의 보안의식 강화 - 항만보안시설 정기 점검을 통해 각 부두운영사 취약한 보안 시설 보강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러예방대책 수립·시행('18.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러대상시설 합동 점검(상·하반기) 및 간담회 실시(연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안시설(29개소) 및 다중이용시설(크루즈터미널) 대상 - 연안여객선 테러예방대책 수립·시행에 따른 점검 실시 ○ 보안인력 및 시설·장비 확충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울타리增高(2.7m 이상) 및 재질 강화(EX메탈 등) 기능 강화(감지 기능 추가 등) 추진 -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추가 설치, 화질 개선 및 녹화기록 기간 조정(10일 이상 → 90일 이상) - 보안구역 주출입구 보안인력 확충(1인 이상 → 2인 이상) ○ 선박보안심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이수 및 보안심사 강화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보안 위해요소의 체계적인 관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문제점 검토·발굴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동해, 묵호, 속초, 삼척, 호산항,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 - '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항만보안등급 상향 등 항만보안태세 강화 - 무역항 항만보안 시설·장비의 확충 및 항만 출입관리시스템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초항 항만출입관리시스템 도입 등 항만보안시설 확충(투자계획에 배정) ○ 무단이탈사고 선박에 대한 입항금지 등 제재조치 철저이행 및 항만보안사고 발생선박 점검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허가(금지) 대상선박 입항 시 선박감시원 배치 및 해당선박 순찰강화 · 선박보안심사관 전문교육 참석 및 보안인력 역량 강화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보안심사관 및 보안담당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참석 및 타 항만시설 견학 등 추진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항만방호 계획 수립·시행으로 테러 및 비상사태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 경비·출입통제 철저, 교육·훈련 실시, 보안 취약요소 집중관리 및 시설·장비(CCTV 등) 유지관리 철저 ○ 관리대상선박 대한 감시 인력배치, 모니터링 및 순찰활동 강화 등 특별관리 실시 ○ 보안 관계기관 정보공유 및 상시 공조체계 구축 ○ 선박보안심사관 자격유지를 위한 보안교육 및 국제항해선박 보안심사시 출입통제, 보안책임자 면담, 선반 보안활동 기록, 보안훈련 등 선박보안계획서에 따른 이행실태 심사 철저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항만방호 계획 수립·시행으로 테러 및 비상사태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 경비·출입통제 철저, 교육·훈련 실시, 보안 취약요소 집중관리 및 시설·장비(CCTV 등) 유지관리 철저 ○ 관리대상선박 대한 감시 인력배치, 모니터링 및 순찰활동 강화 등 특별관리 실시 ○ 보안 관계기관 정보공유 및 상시 공조체계 구축 ○ 선박보안심사관 자격유지를 위한 보안교육 및 국제항해선박 보안심사시 출입통제, 보안책임자 면담, 선반 보안활동 기록, 보안훈련 등 선박보안계획서에 따른 이행실태 심사 철저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 보안사고 발생선박 중점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보안체계 주요결함 식별 시 시정 완료 후 출항 허용 ○ 항만보안 위해요소의 체계적 관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보안 시설·장비의 확충, 항만 출입관리시스템 강화 - 무단이탈사고 선박에 대한 입항금지 등 제재조치 철저이행 * 선박감시원 배치 및 해당 선박 순찰 강화 등 ○ 선박보안심사관 전문교육 참석 및 보안인력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인력 및 보안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참석 및 타 항만시설 견학 등 추진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 보안사고 발생선박 중점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보안체계 이행 상 주요결함 식별 시 시정 완료 후 출항 허용 ○ 항만보안 위해요소의 체계적 관리 추진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항 항만보안 시설·장비의 지속적 확충, 항만 출입관리 시스템 강화 - 무단이탈사고 선박에 대한 입항금지 등 제재조치 철저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감시원 배치 및 해당 선박 순찰 강화 등 ○ 선박보안심사관 전문(신규·보수)교육 참석 및 보안인력 역량 강화 - 심사인력 및 보안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참석 및 타 항만시설 견학 등 추진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시설)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훈련·교육 및 보안점검 추진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보안훈련) 자체 모의상황을 가정한 청원경찰, TOC 부두 운영회사, 특경 등이 참석한 합동 보안훈련 실시(분기별 1회) - (합동보안 훈련) 보안책임자 및 보안담당자 등 공동으로 참여, 1년 1회 이상 훈련실시(18개월 초과 불가) - (보안점검) 항만시설 보안업무 현장 실태점검 및 보안계획서 ○ (선박)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심사 시 보안관리체제 이행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청의 승인을 받은 선박보안계획서 원본 비치와 본선 이행 여부 확인, 보안장비와 각종 보안서류 관리 상태 확인 및 항만 보안사고 유발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 선박 자체 보안훈련 및 보안교육 실시 여부와 육·해상 합동보안 훈련 실시 여부 확인
여수항만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러예방대책 수립·시행, 보안시설물 점검·개선 및 항만보안 근무자 교육·훈련을 통한 항만보안 활동 강화 ○ 2017년 광양 항만 테러예방대책 수립·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서, 군부대 등과 광양항만 테러대책 협의회 적극 활용 - 여수·광양항 테러예방대책 수립·시행 및 보완 ○ 항만보안 취약시설 점검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심사 및 평가 등 점검기관 지적사항 보완조치 적극이행 - 자체 취약사항 점검 및 개선을 통한 불순분자 침입기도 예방 ○ 항만 경비·보안인력 교육훈련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교육(4H/월) : 항만내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근무수칙 등 - 보안훈련(1회/분기) : 항만 경비인력의 초동조치 및 상황별 대응훈련 - 합동보안훈련(1회/년) : 유사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확립 및 대테러 역량 배양 - 사격훈련(2회/년) : 경비인력의 사격능력 향상을 위한 실사격 훈련

2-4

외국선박 및 국적 외항선 관리 강화

2-4-1

안전관리 부실 외국적선박 항만국통제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선박시설, 선원의 자격·교육·훈련 상태 등 국제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외국적선 국내 입항시 해양사고 발생 우려
- 고위험선박에 대한 강화된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시행으로 기준미달 외국적 선박의 국내항만 입항 억제 필요

□ 추진계획

◆ 부실기국 등록선, 고위험선박 등 기준미달 외국적 선박의 입항차단 및 해양사고 등 유발선박 등에 대한 점검 강화

- 기국, 선급 및 점검이력 등을 감안, 고위험선박 점검집중
- 아태지역 항만국통제협약체(Tokyo MOU) 공표 안전관리 취약선박* 우선점검 시행
- * 항만국통제 점검대상 선박 선정방식인 NIR(New Inspection Regime)에 따라 분류된 고위험선박
- Tokyo MOU 공표 기준미달선박(Under-performing ship)에 대해서는 매입항시 점검 시행
- 선령 30년 이상, 최근 2년내 출항정지 이력, Tokyo MOU 공표 Black list에 해당하는 국가 및 非IACS 등록선박은 우선점검 및 상세점검 시행
- 해양사고 및 항만보안사고 등 해상교통질서 교란선박 특별 점검

- 항만운영과 등 유관부서와의 공조체계 강화로 해양사고 및 항만 보안사고 등 유발선박에 대한 우선점검 시행
- 사고원인 식별, 재발방지를 위한 특화된 점검시행 및 지적된 결함에 대한 출항전 시정조치 이행
- 타 국가와의 점검 공조로 지역내 기준미달선박 운항 퇴출
- 일본, 중국 등 주변 국가와의 공조점검을 통한 기준미달선 퇴출 및 신조선 대체 유도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항 해사안전연구회와 부산항 항만국통제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전문성을 향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체제 구축 ○ 국제적 주요현안 사항(평형수관리협약, 대기오염 등)을 중심으로 분야별 · 분기별 부산항 자체집중점검(B-CIC) 확대 실시 ○ PSC 우선 대상선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우선 점검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개항장 기항선박, 보안사고 공표선박, MOU 및 국가공표 불량선박(Under Performing Ship), 결함신고선박, 사고선박, 타국 이첩선박, 여객선 등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IR(New Inspection Regime)*에 따른 고위험선박(HRS)과 점검 우선순위가 높은 선박(Priority I) 위주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선(HRS, 2~4개월) / 표준위험선(SRS, 5~8개월) / 저위험선(LRS, 9~18개월) ○ 기준미달선(Under Performing Ship)*은 매 입항시 마다 점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태지역에서 연 3회 이상 출항정지를 받은 선박(T-MOU에서 통보) ○ 편의치적선*, 非IACS 입급선 및 고선령이고 최근 2년 이내 출항정지 이력 선박 등 우선 · 상세점검 시행, 결함사항 출항 전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고, 캄보디아, 시에라리온 등 T-MOU 공표 Black List 해당 기국 등록선박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령 20년 이상 노후선박에 경험 많은 선박검사관 우선 배치 ○ 유류 · 케미컬 등 위험물운반선 및 NIR방식에 의한 고위험선박 우선 점검 ○ 해양사고 등 해상교통질서 교란 선박 우선 점검 실시 ○ 정부대행검사기관(KR)과의 기술 연구회 운영(분기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기술 공유 및 협약 연구 등을 통한 선박검사관 역량 강화 - 최근 항만국통제 주요 결함사항 공유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국·선급·점검이력 등 감안하여 안전관리 취약선박 집중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태지역 항만국통제협약체(Tokyo MOU)에서 공표한 고위험선박*에 대해 우선적으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국통제 점검대상 선박 선정방식인 NIR(New Inspection Regime)에 따라 분류된 위험도가 높은 선박(HRS) - Tokyo MOU에서 공표한 기준미달선박(Under-performing ship)에 대해서는 매 입항 시 점검 - 선령 30년 이상, 최근 2년 내 출항정지 이력, Tokyo MOU 공표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p>Black list에 해당하는 국가 및 非IACS 등록선박은 상세점검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선원 무단이탈 선박에 대한 입항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입항 시 점검이력(2개월 이내)이 없는 경우 우선적으로 점검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품질 제고(2인 1조 운영) 및 취약요인 고려 맞춤형 현장 점검 실시 ○ 중점 추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안전도에 따른 고위험선박 및 기준미달선 우선점검 - 안전관리 부실 기국·선급 등록선박 강력제재 - 다중이용선박 및 보안취약선박 점검 강화 - 선박 집중점검*(9~11월) 실시 <p>* Concentrated Inspection Campaign(집중점검 캠페인) : 일정기간동안 항만당국이 특정분야를 집중 점검하는 제도</p>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국, 선급 및 점검이력 등을 감안, 고위험선박 집중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태지역 항만국통제협약체(Tokyo MOU) 공표 안전관리 취약선박(HRS) 및 점검 우선순위가 높은 선박(Priority I) 우선점검 * 항만국통제 점검대상 선박 선정방식인 NIR(New Inspection Regime)는 선박의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선박(HRS), 표준위험선박(SRS), 저위험선박(LRS)으로 분류·점검주기를 구분하고, 우선순위(Priority I, II, III)를 부여 - 선령 30년 이상, 최근 2년 이내 출항정지 이력, Tokyo MOU 공표 Black list에 해당하는 국가 및 非IACS 등록선박은 우선점검 및 상세점검 시행 - Tokyo MOU 공표 기준미달선박(Under-performing ship)*은 입항시마다 우선·상세점검 시행 및 주요결함 출항전 시정 원칙으로 처분 * Tokoy-MOU 내에서 최근 12개월 중 3번 이상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선박 ○ 해양사고, 결함신고 선박 및 항만보안사고 등 해상교통질서 교란선박 특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해사안전정책과) 및 우리청 항만물류과 등 유관부서와의 공조체계 강화로 해양사고, 결함신고 선박 및 항만보안사고 등 유발선박에 대하여 우선점검 시행 - 사고원인 식별, 재발방지를 위한 특화된 점검시행 및 지적된 결함에 대한 출항전 시정조치 이행 지시 ○ Tokyo MOU, Paris-MOU 공동 집중점검(CIC) 참여·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점검 기간 중 입항 외국적선박의 이전 점검이력을 감안,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p>집중점검 전수 시행(9~11월)</p> <p>* '18년도 집중점검 주제 :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MARPOL Annex VI)</p> <p>○ 항만국통제관 업무환경 개선 추진</p> <p>- 점검선박 이력, 점검매뉴얼 및 관련협약 현장 즉시 확인을 위한 점검 장비 구입·지원</p>
목포청	<p>○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미달선박 우선점검</p> <p>- 아태지역 항만국통제협약체 공표 안전관리 취약선박* 우선점검 시행</p> <p>* NIR(New Inspection Regime)에 따라 분류된 고위험선박(HRS)</p> <p>○ 불개항장 기항선박 안전관리 강화</p> <p>- 불개항장에 기항하는 외국적선박 집중점검</p> <p>○ 항만국통제 집중점검 실시</p> <p>- 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방지 관련 사항 집중점검 실시</p> <p>○ 국내·외 교육 참가로 항만국통제관 역량 강화</p>
포항청	<p>○ (점검대상)</p> <p>- 고위험 선박 등 기준미달선의 국내 입항 억제</p> <p>- 미이행선박*(Under-Performing Ships) 최우선 점검</p> <p>* 아·태지역에서 최근 1년 동안 3회 이상 출항정지 된 선박</p> <p>- 사고의 주요원인인 '인적과실' 예방을 위해 ISM분야 중점점검</p> <p>* 점검 시 시스템 숙지, 이행실태 및 비상대응훈련도 병행 실시</p> <p>- 도선사, 선원 및 항만이용자 등의 결함신고 선박 최우선 점검</p> <p>○ (조치계획)</p> <p>- 출항정지선박은 결함사항 시정완료 후 출항을 원칙으로 엄격 관리</p> <p>- 결함선박에 대한 철저한 개선 조치로 선박의 안전관리수준 제고</p>
평택청	<p>○ 안전기준 미달선박 대상 우선점검 시행</p> <p>- 아태지역 항만국통제협약체(T-MOU)를 통해 공표된 안전 관리 취약선박을 우선적으로 점검</p> <p>- 편의치적선, 고위험군 선박을 대상으로 시설 및 선원의 비상대응 능력과 각종 운항능력에 대한 심화 점검 실시</p>
울산청	<p>○ (점검목표) 항만특성 고려, 위험물운반선 점검 강화</p> <p>- 위험물운반선의 입항 비중을 감안, 전체 점검척수의 50% 이상 점검</p> <p>○ (점검대상) 고위험선박(HRS) 등 기준미달선 입항 시 우선 점검</p> <p>- 고위험선, 편의치적선 및 출항정지 척수가 많은 국적*선박 등을</p>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p>집중적으로 고강도 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항정지 등 중대결함선박은 결함사항 시정 시까지 엄격관리 (시정·보완 후 출항을 원칙으로 하여 기준미달선이 국내 입항을 기피토록 유도) ○ (점검방법) 점검의 내실화를 기한 2인1조 점검체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1조 점검반 편성, 점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원격지 입항선박 점검 강화(온산, 신항·남항) ○ (역량제고) 항만국통제관 역량강화를 위한 스터디 그룹 운영(연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선사, 안전관리업체 등 항만국통제 출항정지 사례 연구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산항 항만 특성을 고려한 위험물운반선에 대한 점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산항 입·출항선박 대부분은 위험물운반선으로 사고발생 시 해양오염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존해 점검 내실화를 위한 2인 1조 점검체계 유지 및 유조선 맞춤형 점검 실시 ○ 기국, 선급 및 점검이력 등을 감안, 고위험 선박 점검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협약체(Tokyo MOU) 공표 안전 관리 취약선박 우선점검 시행 - Tokyo MOU 공표 기준미달선박(Under-performing ship)에 대해서는 매 입항 시 점검 시행 - 선령 30년 이상, 최근 2년 내 출항정지 이력, Tokyo MOU 공표 Black list에 해당하는 국가 및 非IACS 등록 선박은 우선점검 및 상세점검 시행 ○ 해양사고 및 항만보안사고 등 해상교통질서 교란선박 특별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물류과 등 유관부서와의 공조체계 강화로 해양사고 및 항만 보안사고 유발선박에 대한 우선점검 시행 - 사고원인 식별, 재발방지를 위한 특화된 점검시행 및 지적된 결함에 대한 출항 전 시정조치 이행

2-4-2

국적선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관리 우수국가 지위 유지

□ 배경 및 필요성

- '16년 국적선의 유럽지역 항만국통제 출항정지 발생으로 '17.7.1.자로 유럽지역에서 안전관리 우수국가 지위 상실

□ 추진계획

◆ 유럽지역 기항 국적선박에 대한 사전·동행점검 지속 시행, 중점관리 대상선박에 대한 점검 강화 및 사업자 계도를 위한 주기적인 간담회 시행

- 국적선 중점관리 대상선박 지정, 기국통제 강화
 - 최근 3년 내 출항정지선박 및 국제기준에 따른 고위험선박(HRS)을 매분기 중점관리 대상선박으로 지정·공표하여 특별점검 시행
 - 유럽지역 기항 예정 국적선박은 지방청에 사전 신고를 통해 자발적인 기국통제 수검 유도
 - 외국항 출항정지 예방을 위한 상세점검 및 선원교육 강화
- 외국항 출항정지선박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 출항정지 시 선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재발방지대책회의 개최 및 해당 선박 특별점검 실시
 - 연 2회 이상 출항정지 발생 선사에 대해서는 사업장 특별점검 시행
 - * 선사의 안전관리시스템(ISM) 재검토, 운항구역 조정 등 자구책 마련 유도
- 미국·유럽 등 항만국통제 취약지역 기항선박에 대한 사전·동행점검 적극 유도

- 취약지역 기항선박 대상 정부대행 검사기관의 PSC 사전점검 수검 적극 유도
- 사업자 계도를 위한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
 - 국적선 외국항 출항정지 예방대책 설명, PSC 집중점검 대응을 위한 설명회, 항만국통제 동향 설명회 등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통한 사업자 계도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선 중점관리 대상선박에 대한 기국통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분기 중점관리 대상선박으로 지정·공표되는 국적선박에 대하여 특별점검 및 선원교육 실시 - 주요국가의 점검동향 파악, 국적선 대응능력 향상교육(반기별) ○ 외국항 출항정지 선박에 대한 집중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및 필요시 선사 특별심사 실시 * 선사의 재발방지대책, 안전관리시스템 재검토 등 자구책 마련 유도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로 지정하는 출항정지 선박 및 고위험선박에 대하여 관할 항만 입항시 예방적 차원에서 누락 없이 점검 ○ 외국항 항만국통제 우선점검이 예상되는 위험물운반선 등 특수선종에 대한 선택적 점검 실시 ○ 2인 1조의 집중점검 및 출항정지 예방교육 등 병행 실시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관리대상 국적외항선에 대한 기국통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유럽 등 항만국통제 취약지역 기항선박에 대해 항만국 통제에 준하여 점검 실시(필요시 대행검사기관 합동점검) - 고위험선박(HRS)에 대한 점검 강화 및 선원교육 병행 실시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선 중점관리 대상선박 모니터링 강화 및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국통제 미수검선박 발생 방지를 위해 할당된 분기별 대상 선박*의 국내기항 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 * 최근 3년 내 출항정지선박 및 국제기준에 따른 고위험선박(HRS)을 매분기 중점관리 대상선박으로 지정·공표(본부) - 점검이력이 없는 경우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1회 이상의 점검 이력이 있는 선박은 항만국통제 점검주기를 인용하여 점검 ○ 선박안전관리체제(ISM) 적정이행 여부 특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대응훈련, 선원의 안전관리체제 숙지도 등 중요항목은 결함지적 방지를 위해 필수점검 및 선원교육 병행 실시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선 출항정지 저감을 통한 안전관리 우수국가 지위유지 지속 및 내항화물선의 사고개연성을 사전에 차단 - 중점관리대상선박 관할 항만 입항 시 특별점검 실시(연중)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선 중점관리 대상선박 지정에 따른 기국통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내 출항정지선박 및 국제기준에 따른 고위험선박(HRS)의 중점관리 대상선박 지정·공표에 따른 특별점검 시행 - 특별점검 시, 외국항 출항정지 예방을 위한 상세점검, 선원 교육 강화 및 안전운항을 위한 교육자료 배포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선 중점관리 대상선박 기국통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공표된 매분기 중점관리 대상선박 특별점검 시행 - 외국항 출항정지 예방을 위한 상세점검 및 선원교육 강화 - 사전점검을 통한 외국항 항만국통제 점검 대비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대상) 외국항 PSC 출항정지 선박, 중점관리대상선박, 선령 20년 이상 노후선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항 PSC 출항정지 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및 특별심사 - 중점관리대상선박에 대한 3개월 주기로 분기점검 실시 - 선령 20년 이상 노후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조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점검 결과 중대결함 식별 시 출항 전 시정·개선 요구 - 동일 선박이 연 2회 이상 출항정지 시 해당선사 특별심사 - 점검반 2인1조를 원칙으로 선체와 기관분야 별 고강도 점검 - 선박점검 시 선원교육 병행으로 선원의 안전관리역량 강화 <p>* 개정 협약규정, 출항정지 사례 제공 등 외국항 PSC 대응교육</p>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선 중점관리 대상선박에 대한 기국통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중점관리 대상선박에 해당되는 국적선박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취약점에 대한 선원교육을 병행 - 위험물운반선의 경우 외국 항만에서 우선·상세점검의 가능성이 높아 해당선박 국내 입시 우선 점검대상으로 관리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관리대상선박의 모니터링·특별점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활용, 입항 시 우선 점검대상 선정 - 2인 1조 점검반 구성, 선박 서류·증서의 최신화 및 관리 상태, 선체·기관·항해·소방설비 등 선박설비의 유지·보수 상태 중점점검 - 구명정, 비상소화펌프 등 안전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점검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항에서의 출항정지 결함 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해 선박 안전관리체제 적정 이행여부 집중점검 - 선박 안전관리체제 이행 관련 중대결함 식별 시 선급 추가심사 지시 - 선원 대상 PSC 정책 및 주요국 동향, 최근 PSC 지적 사례 등 출항정지 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실시 - 최근 제·개정된 협약의 숙지·이행 현황 점검 후 미흡 시 현장교육 ○ 관내 일시 외국항 운항 선박을 위한 안전정보 제공 - 외국항 항만국통제 대응을 위한 주요 기항지별(일본,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출항정지 사례 등의 정보제공(반기별)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선 중점관리 대상선박에 대한 기국통제 강화 - 매 분기별 지정·공표된 중점관리 대상선박 관할 항만 입항시 특별점검 시행 및 외국항 출항정지 예방을 위한 선원교육 병행 - 항해·기관분야 2인 1조 점검의 전문성 강화

2-4-3

국적선사의 안정적 해운활동 지원 등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기준미달선박의 입항 억제, 국적선박의 외국항 출항정지 예방 및 주변국가와의 조화로운 항만국통제 시행을 위한 중국, 일본 등과의 국제협력 강화
- 일본, 중국, 호주 등과의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 시행 등 지속적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협의체 내에서의 위상 강화 필요

□ 추진계획

◆ 일본, 중국, 호주 등 주요 국가와의 항만국통제 국제협력 강화, 아태지역 항만국통제협의체 내에서 우리나라 위상 제고

- 국적선사의 안정적 해운활동 지원을 위한 주요 국가와의 협력 강화
 - 일본, 중국, 호주 및 싱가포르와의 조화로운 항만국통제 시행, 국제적 협력체계 공고화 등을 위한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 지속 추진
 - 캐나다 등 신규 국가와의 교환근무 프로그램 개설 추진
- Tokyo MOU 등 국제협력체 적극참여를 통한 우리나라 위상 제고
 - 비회기 기간 중 협력체 내의 주요 작업반 전수참여로 회원국과의 협력관계 강화 및 주요의제 논의에 대한 주도적 역할 수행
 - 개발도상국에 아국 항만국통제관(전문가) 강사파견으로 항만국통제 점검기법 전수 및 우호세력 확보

2-5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지속적 추진

2-5-1

연안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14.9.1)을 마련하여 이행 중이나, 여객선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
- 여객선 해양사고의 사전 예방과 안전에 대한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지속적인 이행 필요

□ 추진계획

◆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 이행 및 시민이 참여하는 4중 안전관리 체제 도입

- 기존 3중 안전관리 체제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4중* 안전관리 체제로 확대하여 해양사고 사전 예방
- * 정부(해사안전감독관), 공공기관(운항관리자), 선사(안전관리책임자)의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연 1~2회 시민들이 참여는 여객선 안전관리 추진
- 계절(봄·여름·겨울) 및 특별수송(설·추석) 등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 합동(지방청·해경·KST)으로 맞춤형 특별점검 실시(연 5회)
- 차량·화물 과승·과적 차단, 여객 승선절차 이행 등 혁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불시 점검 및 해사안전감독관의 지도·감독 강화
- 사업자별 여객선 이력관리 및 안전정보 공개 이행 여부 점검(반기 1회)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선·사업자는 연 3회 이상 정기·수시 지도·감독, 운항관리자는 연 4회 이상의 정기 지도·감독 실시 ○ 차도선 및 카페리어객선의 화물·차량 적재·고박상태, 노후여객선(선령20년 이상)의 선체·기관·여객 편의시설 관리 실태 등 중점 감독 ○ 차량 선적권 및 여객승선권 전산발권으로 과적·과승 차단, 여객 신분증 확인, 여객선 안전정보 및 이력관리 시스템 점검 등 예방적 현장지도·감독 강화 ○ 계절별(봄·겨울), 휴가철(명절연휴 포함) 등 기상특성 및 여객 폭주기간 대비 관계기관 합동(KST·해경 등)으로 맞춤형 특별점검 실시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점검 대상별 3회 이상 감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선·사업자는 정기·수시감독, 운항관리자는 정기감독 실시 - 사전 예방적 현장지도·감독 강화 ○ 계절별, 휴가철 등 특성에 따라 정부대행검사기관 등과 사전 점검 실시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선 안전사고 취약분야별 집중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항 전) 항해준비상태, 감항성, 고박·적재, 소화·구명, 안전·보안 등 - (운항 중) 비상탈출경로, 선수문 등 특수설비와 수밀설비의 이상 유무, 화재예방, 화물적재 상태, 여객 안전 확보, 기관 작동상태 등 ○ 주기적 비상훈련 실시 및 숙지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내비상훈련(소방훈련, 구명뗏목, 비상조타, 그 밖의 비상시 대비훈련 등) 실시 여부 및 기록 상태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상별 3회 이상 점검 및 하계, 추석 등 시기별 특성을 고려한 특별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사업장) 정기 2회, 수시 1회(5척, 2개소) / (운항관리자) 정기 4회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선 안전설비 뿐만 아니라, 차량·화물 등의 과적 차단, 이용객 신분확인 철저 등 전반적인 연안여객선 이용시스템 감독 강화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 여객선 안전관리 협력을 통한 연안여객선 안전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별(봄·여름·겨울), 휴가철(명절연휴 포함) 등 특성에 따라 민·관 합동(해경·KST·지방청 등)으로 맞춤형 특별점검 실시 * 정부(해사안전감독관), 공공기관(운항관리센터), 선사(안전관리책임자)의 상시 점검 체계 구축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화물 등의 과승·과적 차단, 이용객 신분확인 이행 철저 ○ 설날·하계·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 및 봄철 농무기, 겨울철 대비 관계기관* 합동 여객선 특별점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청, 운항관리센터, 선박검사대행기관 등 ○ 간담회 등을 통한 점검지적 사항 공유로 선사 및 안전관리자 역량 제고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여객선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상별 연간 3회 이상 점검은 자제하고 하계, 추석 등 시기별 특성을 고려한 특별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선박 6척, 사업장 5개, 운항관리자 8명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화물 관리, 항해·기관 및 주요 설비 안전점검 등 관리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화물 등의 과승·과적 점검, 이용객 신분증 확인 등 ○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해사안전감독관의 분기별·특별점검으로 사전 예방적 현장 지도·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별(봄·여름·겨울), 휴가철(명절연휴 포함) 특별수송 등 특성에 따라 관계기관(운항관리실 등) 맞춤형 합동 특별점검 실시 ○ 국고여객선(차도선) 건조계약 체결 및 책임용역 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흥-가의도 항로의 노후선 백화산호 대체선박 건조

2-5-2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 배경 및 필요성

-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이용객의 다소 감소하였으나, 안전관리 혁신대책('14.9) 이행, 해양사고 예방활동 강화 등으로 여객선 이용객*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수송실적(만명) : ('12) 1,454 → ('13) 1,606 → ('14) 1,427 → ('15) 1,538 → ('16) 1,542

- 그 간의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이행 점검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 받는 대중교통으로서의 자리매김 필요

□ 추진계획

◆ 상시 제도개선 및 각 지역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현안해소를 위해 분기별 항로현안 점검회의(총 4회) 추진 및 민·관 협의회 개최

- 체계적인 항로 운영을 위해 분기별 항로현안 점검회의 실시
 - 본부-지방청 간 주요 현안점검*, 노하우 공유,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한 항로현안 점검회의를 정기적(분기 1회)으로 실시
- * 여객선 운항중단, 신규항로 개설 수요, 기타 민원(제도개선 포함) 등에 대하여는 별도 현황조사를 통해 정기보고 실시(월 1회)
-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 제도개선
 - 안전관리분야 제도개선을 위해 우리부-해운조합-선박안전기술공단 간 정기 협의회를 개최하여 제도개선 사항 발굴
- * 매년 연말(10월) 및 연초(1월) 정례협의회 개최

2-5-3

연안 해상교통 노후 인프라 개선

□ 배경 및 필요성

- 국고여객선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이 우려되며, 지자체가 관리 하고 있는 소규모 항포구는 관심 및 예산 부족으로 열악한 실정
- 여객선 이용객이 안심하고 해상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선박 대체 건조, 접안시설 정비 등 연안 해상교통 노후 인프라 개선 필요

□ 추진계획

◆ 해상교통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낙도보조항로 노후 국고여객선 대체건조, 낙후된 여객선 기항지 정비 등 해상교통 인프라 지속 개선

- 낙도보조항로(27개 항로 26척) 운항 여객선 중 노후선박을 적기에 대체 건조, 투입하여 도서민 등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 도모
- '18년 국고여객선(1척)을 차질 없이 건조하고, 단계적으로 국고여객선을 건조·확대('18년 1척 → '19년 3척)하여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 조성
- 아울러, 여객선의 안전한 입·출항 및 이용객 승하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낙후된 여객선 기항지 접안시설 정비 추진
- 특히, 지자체 등이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항포구(170개소)의 접안 시설 중 시급성·타당성 등을 감안 '18년에는 총 9개소 선정·정비* 추진

* '18~20년까지 33개소 정비계획 수립('18년 9개소, '19년 11개소, '20년 13개소)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화된 국고여객선 건조·대체 - 군산-어청도 운항 국고여객선* 대체건조를 위한 예산요구('17.10) * 뉴어청훼리호 : 121톤, 일반선, 15노트, 2002년 진수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종 변경(일반선→고속 차도선) 및 선속 증대(15노트→18노트)를 위한 설계로 운항시간 단축(2시간20분→2시간 이내) 추진 ○ 말도항로 접안시설 보수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도항로 여객선의 차도선 변경투입('18.1)에 따른 기존 계단식 물양장의 경사식 물양장 개조 필요 - 말도항(우리청)과 장자도항(군산시)의 경사물양장 건립주체 구분하여 조속건립 추진 * 군산-말도 항로 5개 기항지중 말도(해수부), 장자도(군산시) 건립 추진 중이며, 관리도, 방축도, 명도의 접안시설은 본부 및 지자체와 건립협의 지속논의

2-6

비제도권 선박·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2-6-1

시운전 선박 안전관리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국내 조선소에서 연간 400여척이 선박교통이 빈번한 연안수역에서 시운전(급선회, 급정지 등) 시행, 해상교통안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우려

□ 추진계획

◆ 시운전 금지해역 설정 추진, 위반행위 단속 및 안전점검 강화

- 「해사안전법」에 시운전 금지해역 설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원* 및 하위법령 적기 개정 추진

* 「해사안전법」 개정 의원발의 : 김종태의원('17.1.25), 박찬우의원('17.2.7)

- 임시항해검사 시 항해·통신장비의 정상작동, 적정 승무자격자 승선 여부 확인, 특히 비상대응 배치표 및 소화구명설비 작동 중점검사 지속 추진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운전 금지해역의 법제화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운전 금지구역의 법적 근거 및 위반 시 처벌조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 시운전선박의 운항수칙 준수 여부 확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운전 금지해역 항해여부, 항해당직 인수인계 등이 포함된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확인하고 검토 - 시운전 전의 안전뿐만 아니라 시운전 종료 후에도 시운전에 대한 안전 관리 인식 제고 <p>* 시운전기간의 항적도 및 항해당직규정 준수여부, 비상대응훈련 결과 확인 등</p>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운전선박의 임시항해검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행구역에 따른 구명·소화설비 설치여부, 항해·통신 장비 작동 여부 등 점검 - 선박의 항적을 조사(선박모니터링시스템 활용)하여 항행구역 준수여부 등 확인 ○ 시운전선박의 사고 및 위험사례 공유를 통한 시운전선박 사고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대행검사기관, 도선사회, 조선소로 구성·운영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운전 선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선사 간담회 개최(연 1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항해검사 시 식별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조선사별 안전관리기법 공유 ○ 시운전선박 운항구역 준수 등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시운전 선박 동승점검” 시행(반기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해와 관련한 조건 준수 여부, 비상대응능력, 항해 안전 확보 여부 등 점검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조선박 시운전 항해안전 협의회 개최(반기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운전 금지해역 설정 안내 및 시운전 선박 안전대책 논의 * 구성: 우리 청, 관내조선소, 선박검사대행기관 ○ 신조 외국적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해구역별 선박설비 비치 및 항해·통신장비 정상 작동여부 점검 - 시운전 선박 적정 승무자격자 승선여부 확인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저한 임시항해검사 실시로 시운전 선박 감항성 확보(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행구역에 따른 선박설비* 적정수량 비치여부 및 작동상태 검사 * 레이더, AIS 등 항해·소화 설비 등에 대한 성능 확인 강화 - 시운전선박 승선직원의 자격 검증 강화로 적정 승무자격자·인원 승선 여부 확인 ○ 시운전 금지구역 운항 준수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운전 운항금지해역 설정*에 따른 지정 항로 준수 여부 모니터링 * '15년 설정된 시운전 금지해역 준수 여부 철저 확인 ○ 시운전선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연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항해검사를 통해 식별된 시운전 선박 안전 운항 저해 요소 및 결함사항 공유, 시운전선박 항행안전 확보 방안 논의 등

2-6-2

해상펜션·수상가옥 안전관리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선박안전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 수산업법 등의 적용이 제외되는 해상펜션·수상가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추진계획

◆ 해상펜션·수상가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 추진

- 해양안전종합관리 TF 등을 통해 사업요건 정비방향 검토
 - 지자체 등과의 논의를 통해 구명조끼·구명부환·소화기 비치, 구조기관과의 연락수단 확보 등 안전관리체계 검토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경상남도	○ 해상펜션 점검을 통하여 해상펜션 내 안전사고 예방 및 문제점을 개선하여 안전사고 대응 및 필요한 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 관내 해상펜션 현황(57개소 161개동)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계</th><th colspan="7">경상남도</th></tr><tr><th>소계</th><th>창원</th><th>통영</th><th>사천</th><th>거제</th><th>고성</th><th>남해</th></tr><tr><td>유어장</td><td>57</td><td>57</td><td>10</td><td>11</td><td>4</td><td>20</td><td>1</td><td>11</td></tr><tr><td>유어장 내 해상콘도</td><td>161</td><td>161</td><td>37</td><td>19</td><td>15</td><td>66</td><td>2</td><td>21</td></tr></table>	구분	계	경상남도							소계	창원	통영	사천	거제	고성	남해	유어장	57	57	10	11	4	20	1	11	유어장 내 해상콘도	161	161	37	19	15	66	2	21
	구분			계	경상남도																														
소계		창원	통영		사천	거제	고성	남해																											
유어장	57	57	10	11	4	20	1	11																											
유어장 내 해상콘도	161	161	37	19	15	66	2	21																											
○ 현실태 및 문제점																																			
- 체험레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낚시와 캠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어장 내 해상펜션이 영업 중																																			
- 유어장 내 설치된 해상시설물의 시설기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미흡																																			
○ 방안대책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일반유어장에 난간 높이, 가스, 전기시설등 설비 기준이 없으나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세부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에 준하여 난간높이, 부력체 등 설치 지도																																			
전라남도	○ 해상펜션·수상가옥에 대한 안전사고 대응 체계 구축																																		
	○ 해상펜션·수상가옥 안전실태 전수조사 실시																																		
	- 운영현황 조사를 통한 문제점 도출 및 안전사고 대응 방안 검토																																		
	○ 안전사고 대응에 필수적인 구명조끼, 구명부환, 소화기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수색구조기관과의 연락수단 등 설치 권고																																		

2-6-3

항내운항 소형선박 및 관공선 안전관리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항내 안전한 항만여건 조성을 위해 '무역항 해상안전 중점관리 지침'에 따라 항만별 사고예방활동 및 불법행위 단속강화 지속추진 필요

□ 추진계획

◆ 취약분야 사고예방 활동 및 항만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 (취약선박 사고예방) 무동력 비자향선(부선·준설선), 모래운반선 등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
 - 모래운반선의 과적운항 금지 및 안전운항 규정준수를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현장 지도·감독 강화
 - * 지방청별 관할 사업장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사고방지 교육실시(연1회 이상)
 - 화물창 덮개를 제거한 채 운항함으로써 기상악화 시 등에 해양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선박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
 - * 덮개 제거 운항 이력 선박에 대한 본부·지방청 합동특별점검 실시(연1회)
- (소형선박) 노후 선체·주요설비 상태검사 및 집중점검 시행
 - 특히 항내운항 소형선박에 대한 정기검사시 선체 및 주요설비의 노후상태에 대한 집중검사 시행(연중)
- (관공선) 선체·설비 안전관리기준 마련 및 관공선 정비수리대행 업체 위탁관리제도 도입 검토
 - 관공선(중앙부처·지자체·산하단체 등) 안전관리 실태 전수조사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중심의 취약요인 집중 계도 및 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기별 관계기관(해경, 어업관리단 등)과의 공조로 항법을 위반하는 소형선박(어선, 요트 등)을 중점적으로 안전운항 홍보·안내 및 점검 실시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항내 운항중인 급유선·급수선·예선·통선 등 소형선박에 대한 해사안전감독관 지도·감독 실시 ○ 항내 소형선박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하여 무역항 해상 안전 중점관리 지침에 따라 특별단속기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반기 각 1회, 명절 특송기간 등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 내 운항중인 소형선박에 대한 해사안전감독관 지도·감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선 해사안전감독계획 중 소형선에 대한 지도·감독 포함 ○ 선원 대상 사고예방 방선 및 집합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도 해양수산 종사자 교육 자체 시행계획에 따름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내운항 소형선박 점검강화 및 안전관리 지원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 내 운항중인 소형 급수선·통선·예선·기타선 등에 대한 해사안전감독관 정기 지도·감독 실시(연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소형선박 선체·주요설비 상태 점검 - 선박소유자 및 선박운항자 대상 사고예방 교육·감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원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법행위 예방 등 - 영세업자 소유 항내운항 소형선박의 안전설비 교체 시 선박 안전법, 선박설비기준 등 관계법령에 대한 자문 제공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에서의 공사작업 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현장 안전관리 강화(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확인, 작업선박(현장)의 최소 승무정원 및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등 현장 관리감독 철저 ○ 항내운항 소형선박 점검강화 및 안전관리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 내 운항중인 통선, 예선 등에 대한 지도감독 추진(연1회) 및 마리나선박 등 소형선박 현장점검 요청 시 유관기관 점검 지원 - 선박소유자 및 선박운항자 대상 사고예방교육 지속 실시 ○ 안전한 관공선 운항을 위한 주기적인 선박검사 및 일일안전 점검 실시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관 개방정비 등 상시 유지보수 및 정기적인 상가수리 추진 - 해상순찰 전·후, 선내 구역 침수여부 및 선박기기 작동여부 등 점검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내운항 소형선박 점검강화 및 안전관리 추진 - 항만내 운항중인 소형 급수선, 통선, 예선, 기타선 등에 대한 해사안전감독관 정기 지도·감독 추진(연 1회) - 선박소유자 및 선박운항자 대상 사고예방 교육·감독 강화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 내 운항중인 소형 급수선·통선·예선·기타선 등에 대한 해사안전감독관 정기감독 추진(연 1회) ○ 소형선박 안전설비 교체 시 선박안전법, 선박설비기준 등 관계법령에 대한 자문제공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내운항 소형선박 안전점검 추진 - 포항 항만 내 운항중인 급수선·통선·예선·기타선 등의 소형선박들에 대한 현황 파악 후 해사안전감독관 정기 지도감독 시행 ○ 영세업자 소유 항내운항 소형선박의 안전설비 교체 문의 시 선박안전법, 선박설비기준 등 관계법령에 대한 자문 제공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내 운항선박 대상 해사안전감독관 지도·감독 실시 - 화물선을 대상으로 한 내년도 해사안전감독계획 중 항내 운항선박의 지도·감독을 병행 실시 - 우리청 소속 관공선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설비에 대한 관리 교육도 진행 <p>* (필요시) 안전점검과 교육 진행 중 해사안전감독관·선박검사관 동행</p>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내운항 소형선박 안전점검 추진 - 울산 항만 내 운항중인 급수선·통선·예선·기타선 등의 소형선박들에 대한 현황 파악 후 해사안전감독관 정기 지도감독 시행 - 필요시 선박검사기관과 합동점검 시행 ○ 영세업자 소유 항내운항 소형선박의 안전설비 교체 문의 시 선박안전법, 선박설비기준 등 관계법령에 대한 자문 제공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내운항 소형선박 점검강화 및 안전관리 지원 추진 - 항만 내 운항중인 소형 급유선·급수선·통선·예선·기타선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p>등에 대한 해사안전감독관 정기 지도감독 추진(연 1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소형선박 선체·주요설비 상태검사 및 점검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소유자 및 선박운항자 대상 사고예방 교육·감독 강화 ○ 우리청의 관공선 한우리호, 등대호 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공선 선체·설비 등 자체 안전점검 및 안전설비 시연회 실시(연 1회)

2-6-4

마리나업 운항선박 안전관리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조선과 해운 등 전통 해양산업의 침체속에 요트와 모터보트의 임대와 수리·정비, 판매 등 마리나업이 새로운 해양 신산업으로 급부상
 - 마리나업 시장 확대로 요트스테이* 등 마리나 관련 다양한 상품의 출시에 따라, 사업 유형별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 * 정박중인 요트를 일정기간 사용자에게 임대해 주는 상품으로, 요트 내 숙박과 모임, 항해와 파티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제공

□ 추진계획

◆ 마리나업 운용 실태에 적합한 선박 안전관리 방안 마련

- 스마트폰 등 ICT 기술을 활용한 '마리나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마리나업 운항선박의 안전정보와 사업 방식에 대한 통합관리 추진
 - 마리나 예약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마리나선박의 종류와 사업의 형태 및 승선자 명단의 전자적 관리방안 마련으로 실시간 안전관리체계 구축
- * '바다야놀자', '요트북' 등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마리나 예결제 시스템('17.5 도입)
- 요트스테이, 파티보트 등 마리나업에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선박에 대한 맞춤형 현장 안전관리 강화 추진
 -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감독관 등 선박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유형별 선박 안전관리 기준* 마련 및 현장점검 추진
- * 마리나선박의 운항과 정박, 마리나 이용자의 숙박과 해양활동 등 선종별, 이용 형태별 안전관리 기준 수립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마산청	○ 마린나 사업장 및 선박 검사·확인 추진 - 마린나업에 등록된 선박 안전점검 실시(필요시 유관기관 합동)		
부산광역시	○ 마린나업 운항선박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연간 100명)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사업예산 : 2억원(시비 1억, 자담 1억) - 추진방법 : 사업수행기관 공모 - 사업내용 : 마린나 전문인력 100명 양성 - 교육대상 : 마린나 및 해양레저 관련 종사자, 예비창업자 등 - 내용 : 마린나 시설 운영, 선박운항, 마린나선박 수리·관리 등		
	분 야	인원	교 육 내 용
	① 마린나시설 운영	20	마린나업 창업 행정절차 등
	② 마린나선박 운항	40	마린나선박 종류별 운항실습, 해상사고 대비훈련 등
	③ 마린나선박 수리·관리	40	주요 엔진 정비 및 선체관리

2-6-5

수면비행선박(위그선) 상용화 기반 마련

□ 배경 및 필요성

- 수면비행선박의 기술개발에 따른 상용화를 위해서는 관련 시설의 구축, 제도 보완 등 기반마련 필요
 - 수면비행선박의 운항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 제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 등 추진 필요

□ 추진계획

◆ 수면비행선박의 상용화에 대비한 제도적·시설적 기반 마련으로 안정적인 운항기반 조성

- 소형수면비행선박의 경량화 특성을 반영한 안전·설비기준 현실화
 - 방화구조 및 항해설비 등 「수면비행선박기준(고시)」 일부 개정
- 계류시설 및 이착수 해역관리 등 위그선 취항 인프라 구축 검토
 - 수면비행선박에 적합한 객관적 해상교통안전 평가기술 개발 및 선박별 조종성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관리방안 검토

3. 범바다 안전의식의 획기적 전환 유도

□ 대국민 대상 해양안전캠페인의 확대 등 해양안전의식의 저변화와 확산을 위한 다각적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 해양안전의 날(매월 1일) 대국민 캠페인 행사 추진(연중), 해양안전 문화확산 콘텐츠 제작·배포 등

□ 해양안전 전문강사의 양성과 이를 활용한 현장안전교육 실시로 실효성 있는 해양안전 교육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강사 132명 양성, 학생·일반인 등 55,000명 교육(비상 시 탈출요령, 구명뗏목 개방 및 탑승, 해상 생존방법, 심폐소생술 실습, 구명조끼 착용법 등)

□ 해양사고 발생시 국민의 비상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안전 체험시설 건립('18.하반기 건축물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해양안전체험관(경기도 안산시) 지원(50억), 국민해양안전관(진도군) 지원(56.4억)

□ 기존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조직의 통합으로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안전문화 사업추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 기존 해양안전문화 관련 단체(해양안전실천본부, (사)해양인적안전진흥협회, 선박안전관리자협의회) 통합·법인화 추진

□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 구축·운영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 체험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워터파크 연계 해양안전체험시설 구축운영, 해양안전체험버스 운영 등

3-1

해양안전 홍보·캠페인 지속시행

3-1-1

해양안전문화 확산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 스스로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기적으로 해양안전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계기 마련 필요
 - 국민의 안전한 바다 이용을 위해 해양안전 캠페인 및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해양안전 공모전' 등 추진

□ 추진계획

◆ 대국민 대상 해양안전 캠페인의 확대 등 해양안전실천본부를 중심으로 해양안전 의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 활동 추진

- 해양안전실천본부 주관 및 유관단체·지자체 협업으로 해양안전의 날 (매월 1일) 대국민 캠페인 행사 추진(연중)
 - * 지역축제와 연계한 캠페인 참여도 제고 및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기초안전 수칙' 준수를 '18년 중점 캠페인 과제로 지정하여 집중 추진
-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18.6월, 부산),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18.11월, 일산) 등 현장홍보행사 등으로 대국민 안전의식 개선 도모
 -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등 홍보동영상·팸플릿 등 제작·배포, KTX·지하철·여객터미널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 추진
- 범국민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해양안전 공모전” 시행('18.9)
 - * (분야) 포스터, 해양안전 국민제안, 웹툰, 체험수기, 안전경영 우수사례
- 기초해양안전체험관 콘텐츠(해양안전 VR체험*) 확대 추진('18.5)
 - * 여객선 안전체험, 구명뗏목 작동체험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실천본부(부산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해양안전의 날’에 따른 캠페인 등 국민참여형 해양안전문화 활동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의 날」 및 「어선안전의 날」에 따른 해양안전 캠페인 실시(매월) - 「부산항 해양안전 사진전」 개최(5월) - 「제5회 부산항 해양안전 사진 공모전」 개최(10월) - 해양안전 달력 제작 및 배포(12월) <hr/> <p>【제주해양수산물관리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운송사업자 간담회 개최 및 해양안전 캠페인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운송간담회 : 연 2회 * 제주도, 해양경찰서, 선박안전기술공단, 여객선사, 화물선사 등 합동 점검 - 해양안전캠페인 실시 : 연 2회 ○ 해상교통안전 관련 현수막 제작·게시 : 연중 계속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해양안전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안전의 날 행사 등과 연계한 해양안전결의 대회 개최 - 시기별 특성을 고려한 해양안전 캠페인 개최 -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현수막 게시 및 홍보물 배포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의 날 행사 확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가철 해수욕장 및 여객선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대상 안전캠페인 확대 실시 - 해양안전실천 지역본부 활동과 연계하여 합동캠페인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안전의 날’(어업정보통신국) 및 ‘여객선 안전, 함께 海 보아요’ 등 병행 * 캠페인 및 안전교육 시행 시 마리나 선박 종사자 포함 ○ 국민의 해양의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체험 및 안전교육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항만시설 견학, 여객선 승선체험, 생존수영, 찾아가는 해양교실 등 ○ 다중이용시설 내 안전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선 터미널 내 구명조끼 착용 마네킹 비치 - 해양안전 홍보영상 상시 방영 및 구명설비 전시 등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의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해양안전의 날」 운영 지원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캠페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중심의 해양안전실천 경남지역본부 재구성* 및 자체 캠페인 추진을 위한 어깨띠·플래카드·기념품 등 지원 - 지자체, 업·단체와 연계한 해양안전 문화 확산 운동 전개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해양안전 홍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별 해양사고 예방 현수막 제작, 해양사고 예보(증해심 제공) 우리 청 홈페이지 및 SNS 게시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생존능력 강화를 위한 국민참여형 현장캠페인 확대 추진(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명조끼 착용체험, 소화기 작동 시연, 비상 시 응급조치(심폐 소생술) 교육 등 국민참여형 프로그램 마련·시행 ○ 성숙한 해양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해양안전교육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 있는 해양안전 관리 및 국민 해양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해운 업·단체, 유관기관 등과 지식·정보 교류·소통을 위한 교육 추진 ○ 해양안전의 날(매월 1일) 캠페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해양안전문화 홍보로 관련 종사자의 자율적 해양안전의식 독려 <p>* 문자, SNS, 우리 청 홈페이지, 플래카드 등을 이용한 해양안전정보 제공 및 해양안전 홍보문구 배포</p>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의 날(매월 1일) 캠페인 확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가철 해수욕장 및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장소 대상 국민 참여형 안전캠페인 및 지역단위 축제 연계 등 다양성 확보 * 구명장비 작동체험, 구명조끼 입기, 선박모형 만들기 등 - 해양안전 홍보물 및 리플렛 제작 배포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실천 전남서부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해양안전의 날(매월 1일) 캠페인 지속 추진 * 참여기관: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운조합 등 ○ 설·추석 명절 귀성객 대상 “여객선, 안전 함께 해(海) 보아요” 캠페인을 통한 해양안전문화 확립 - 기초안전수칙이 인쇄된 홍보물 제작·배포로 이용객 참여 유도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선터미널 내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안전홍보 캠페인 실시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사고 줄이기 안전운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페인) 民 주도의 해양안전실천 캠페인 개최(연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원집합교육과 연계하여 안전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현장캠페인 전개 - (해양안전의 날) 월별 특성에 맞는 해양안전 테마 선정, 취약요인 중점점검 등의 해양사고예방 홍보를 통한 업체의 자율적 안전점검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우리 청 SNS·전광판·팝업창 등에 홍보 - (대책홍보) 계절별 안전대책 홍보물 제작·배부(현수막, 포스터) ○ 기상, 해상교통 등 항해안전정보 제공(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트위터 및 페이스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기상정보, 해사안전정책 추진 현황 및 자료 등 제공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의 날 캠페인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권 해양안전실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가두행진, SNS홍보, 선박안전설비체험 등 캠페인 전개 ○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해양안전문화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남부수협, 인천어업정보통신국(수협),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양안전교육 실시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사고 줄이기 안전운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페인) 民 주도의 해양안전실천 캠페인 개최(연 5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원집합교육과 연계하여 안전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현장캠페인 전개 - (해양안전의 날) 월별 특성에 맞는 해양안전 테마 선정, 취약요인 중점점검 등의 해양사고예방 홍보를 통한 업체의 자율적 안전점검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관내 선사들에 홍보 - (대책홍보) 계절별 안전대책 홍보물 제작·배부(현수막, 포스터) ○ 기상, 해상교통 등 항해안전정보 제공(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트위터 및 페이스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기상정보, 해사안전정책 추진 현황 및 자료 등 제공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선박 및 다중이용시설(터미널 등) 안전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가철 해수욕장,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장소 또는 지역 축제를 연계한 국민 참여형 해양안전의 날 캠페인 지속 추진 * 구명설비 작동 시연, 구명조끼(My Life-jacket) 상시 착용, 해양안전 홍보물 배부, 비상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대피요령 숙지 등 -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현수막 및 전광판 안전문구 게시 ○ ‘어선안전의 날’과 연계한 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양안전교육 및 해양안전캠페인 실시(연 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안어업정보통신국, 선박안전기술공단 태안지부, 대전기상청, 해양환경관리공단, 수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 * 선원해사안전과(선박의 안전), 항로표지과(항로표지의 이해)에 대해 교육
부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회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장소 : 2018. 7월중(3일간)/벡스코 제1전시장 및 컨벤션홀 - 전시규모 : 11,164㎡ (180개사, 450부스) ※ 해외 : 15개국 20개사 - 사업내용 : 해양안전 산업전, 사고예방 홍보전, 국제 컨퍼런스 ○ 「어선안전의 날」 어업인 안전의식 고취, 문화 확산(매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홍보·캠페인 등 참여 * 시, 구·군, 해경, 기상청, 선박안전기술공단, 어업정보통신국 등 ○ 해사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현장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사안전 공감대 형성을 위한 관공선 홍보 현수막 부착 운항 - 「부산남항 해상안전센터」 해양안전문화 확대 홍보 방송 - 항내 계류선박 현황 및 전수조사와 병행하여 현장 해양안전 홍보 - 작업 전 충분한 현장 파악 및 2인1조 편성 등 현장 안전문화 조성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사고 다발시기 각종 어선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 어선 안전점검 및 낚시어선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 2018년 어선 및 낚시어선 안전점검 실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 : '18. 4월(봄철), 9월(가을철), 12월(겨울철) - 낚시어선 : '18. 2월(국가안전대진단), 7월(여름철), 9월~10월(가을철) - 장소 : 연안 5개 시(화성, 안산, 시흥, 평택, 김포) 연안 항구 - 점검대상 : 2톤 이상 어선 약 150척 , 낚시어선 80척 - 점검방법 : 관계기관(도·시,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합동 점검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전라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의 날 캠페인 지속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가철 해수욕장 및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전캠페인 실시 * 여객선터미널 내 해양안전 홍보영상 제공 및 전광판 활용 안전의식 고취 ○ 안전하게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터미널 안전 교육 실시 - 각종 점검으로 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시설 보강
전라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의 날(매월 1일) 캠페인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가철 해수욕장 및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장소 대상 국민 참여형 안전캠페인 및 지역단위 축제 연계 등 다양성 확보 * 구명장비 작동체험, 구명조끼 착용, 선박모형 만들기 대회 개최 등 ○ 다중이용선박 및 다중이용시설(터미널 등) 안전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선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 비상 시 대피요령 등 이용객의 비상 시 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안전수칙 사전교육 실시 - 다중이용시설 내 구명조끼 착용 사진 상설비치, 구명설비 사용방법 및 비상 시 대피요령 설명문 게시 등
인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의 날(매월 1일) 캠페인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가철 해수욕장 및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장소 대상 국민 참여형 안전캠페인 및 지역단위 축제 연계 등 다양성 확보 * 각종 해양 항만 주변 지역 축제 연계 캠페인 개최 등 ○ 다중이용선박 및 다중이용시설(터미널 등) 안전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선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 비상 시 대피요령 등 이용객의 비상 시 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안전수칙 사전교육 실시 - 다중이용시설 내 구명조끼 착용 사진 상설비치, 구명설비 사용 방법 및 비상 시 대피요령 설명문 게시 등
여수광양 항만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광양항 해양공원 공사이관으로 관광객 안전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 ○ 해양안전의 날 캠페인 확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실천본부 지역본부 활동과 연계하여 합동캠페인 전개 ○ 지역대학과 연계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사안전활동 홍보를 통한 대국민 해양안전문화 확산 및 인지도 제고 ○ 여수·광양항 안전신고함 제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신고함 제도 홍보 및 활성화를 통한 항만이용자 의견 수렴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회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참가 - 대국민 안전의식 고취 및 여수·광양항 해사안전 홍보 실시
울산항만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선박 종사자 대상 유인물 배포 및 가두 캠페인 실시 - 소형선박용 필수안전 수칙 및 안전운항 점검표 등 맞춤형 안전 유인물 제작 및 배포를 통한 Human Error로 인한 사고 저감 노력 - 통선장, 예선정계지 등 소형선박 작업장에 찾아가는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의식 고도화 - 월별 특성에 맞는 해양안전 테마 선정 및 홍보 - 계절별 안전대책 홍보물 제작·배부(현수막, 포스터)

3-1-2

해양안전 교육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중장기 해양안전문화 진흥 기본계획(‘13.12)」에 따라 국민의 안전한 바다 이용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지속 추진(‘14.8)
- 대국민 해양안전교육을 통해 해양안전의식 제고 및 해양사고 대응능력 향상

□ 추진계획

◆ 교사, 해양소년단연맹 직원 등을 강사로 양성하여 관할 학교(지역)에서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파교육 실시

- 강사 132명 양성, 학생·일반인 등 55,000명 교육을 목표로 강사 양성은 3~4일, 해양안전교실은 2시간 내외의 수업으로 운영
- 비상 시 탈출요령, 구명뗏목 개방 및 탑승, 해상 생존방법, 화재 시 대응요령, 심폐소생술 실습, 구명조끼 착용법 등
- * 해양안전에 대한 기본이론 강의(20%)와 실습·체험(80%)으로 구성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학생 대상 해양안전교육 확대,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운영 ○ 한국해양소년단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 한국해양소년단 충남·세종연맹 및 충북연맹 * 일정 : '18년 6월~8월
부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관내 중학생 대상 선상(어업지도선) 안전체험학습 확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15회 466 → '18년 15회 460명 - 대상 : 부산관내 중학생(171개교) - 장소 : 부산 제5부두, 어업지도선(부비호) 선상 - 운영 : 년 15회 460명 체험 예정 * 협력기관 : 항만소방서, 한국해양구조협회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레저 활동 안전관리 지원 협조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등 안전점검(6~8월) : 시, 구, 해경,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활동 등 불법 행위 단속 지원 - 해양경비안전서, 소방본부 등 구조 장비 등 지원 체계 확립 ○ 개인활동자 사고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명조끼 착용, 원거리 신고, 출항 전 개인 안전점검(연료유, 배터리 점검 등) 확행 등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매체 활용 홍보, 안내문 배포, 캠페인 등 * 국민안전처 맞춤형 홍보 전략 연계 ○ 부산해양스포츠아카데미 체험교실 안전교육 의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장소 : 5~11월, 부산시 소재 5개 해수욕장 - 추진내용 : 해양레포츠 체험 및 수상레저 안전교육, 응급처치 교육 등 ○ 2018년 부산국제보트쇼 수상레저안전 홍보부스 운영
경상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7개소) 해양안전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대상 해양안전교육 실시 : 2018. 4. ~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영시(2개소), 창원·사천·거제시 각1개소, 고성·남해군 각1개소

3-1-3

대국민 해양 친숙화를 위한 홍보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안전문화 확산, 관련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전시회 개최 및 관련 박람회에 참가하여 국민에게 우리부 해양안전 정책홍보
- *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3회 주최,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2회 참가('15년~)

□ 추진계획

◆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18.6, 부산),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18.11, 고양) 등 주요 안전관련 행사와 연계한 현장 홍보활동 강화

- 제4회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개최('18.6, 부산)

구 성	해 양 안전 · 사고 예방 홍보전	해 양 안전 기술 · 장비 전시회	해 양 안전 국제 컨퍼런스
내 용	○ 정부, 업·단체 홍보부스 - 해양안전 정책·기술 발표 ○ 해양안전 체험특별관 운영	○ 해양(조선)안전 기술 및 기자재 전시 - 통신장비, 구명설비, 구조· 구난설비 등	○ 해양사고와 인적요인 ○ 해양안전 기술 및 산업

- 제4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 및 홍보부스 운영('18.11)

-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해양안전 핵심내용을 도식화, 시각화한 전시·체험공간으로 구성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추진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강좌 「水요일엔 바다톡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 '18년 4월~10월 매월 둘째, 셋째주 수요일, 대상 : 대전 시민 ○ 현장체험학습 「水요일엔 바다톡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 '18년 4월~10월, 대상 : 충남·충북·대전·세종 소재 초·중·고교 ○ 토크콘서트 「우리의 미래, 오션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 '18년 4월~12월, 대상 : 충남·충북·대전·세종 소재 고등학교 8개교

3-2

체험형·맞춤형 해사안전 교육 확대

3-2-1

지역별 체험공간 마련

□ 배경 및 필요성

- 연간 100만명의 관람객이 찾는 등대박물관을 복합적 해양문화공간으로 육성하여 등대의 가치와 해양안전의식을 고취하는 장소로 활용
- 다시 찾고 싶은 해양안전 문화공간으로써 등대가 자리매김하도록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하며, 무인화된 등대시설을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으로 활용할 필요

□ 추진계획

◆ 해상교통 안전자원인 등대를 활용한 해양안전 문화인프라 구축 및 지속적인 해양안전 문화 보급 추진

- 등대 관련 유물관람·체험·교육·휴식이 가능한 복합해양문화공간기능의 국립등대박물관 확대건립 시설사업 추진('18.1~11)
 - * 기본·실시설계용역 및 유물관·교육관 신·증축사업 시행
- 전국 9개소* 등대해양문화공간에서 지역별 독창적이고 특색 있는 음악회, 전시회, 콘서트, 공모전 등의 행사 추진('18.3~12)
 - * 국립등대박물관, 영도(부산), 우도(제주), 팔미도(인천), 오동도(여수), 속초·묵호(동해), 간절곶(울산), 소매물도(마산)
- 청소년의 해양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등대 체험교실 운영('18.6~11)

* 장소: 영도(부산), 우도(제주), 팔미도(인천), 소매물도(마산), 간절곶(울산)

** 체험: 일일 등대장, 해양레포츠, 등대모형 만들기 등

○ 등대해양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유도 및 활성화를 위해 대중 미디어를 통한 홍보강화 및 등대스탬프투어 방문시설 개선

* 대중교통시설(버스·철도 등) 스크린도어 및 영상 광고 / 등대여권 스탬프 보관 및 인증시설 개선(16개소)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 내 해양안전체험관 운영(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여객터미널 내 해양안전 체험관을 운영하여 안전장비 상시전시 및 해양안전 기구 체험을 통한 이용객의 해양안전 지식 향상 도모 * 가용예산을 활용한 해양안전체험관 확충 및 해양안전설비 마련 추진 ○ 항로표지관리소(등대)를 중심으로 한 해양안전문화 체험공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 정책안내 및 해양안전 중요성 홍보를 위한 등대 해양교육 추진 * 청소년을 대상으로 등대해양학교 및 찾아가는 등대교실 운영 ○ 초·중·고생들을 위한 체험 위주의 해양안전특강 추진(수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소년 비치사커·카약체험 행사’ 등 해양스포츠활동을 접목 시킨 다양한 해양안전 홍보활동 시행 - 청소년 여름해양학교, 직업진로체험 방문학생 대상 해양안전 퀴즈, 소화기 사용법 교육 등 실시 ○ 해양계열 학생 등 예비 해양인력을 대상으로 직업소개 특강 및 해양분야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 미래 해양인력 확충 및 저변 확대 도모
부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해양안전센터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2018~2019년 - 사업비 : 8,340백만원(국비100%) * 부지·선박 : 한국해양대 - 사업위치 : 한국해양대학교 수변공원 인근 (해양수산혁신지구 내) - 운영주체 : 한국해양대학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해양안전센터 세부 활용방안 연구용역 (한국해양대) ○ 관계기관 협력 MOU체결(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한국해양대) ○ 사업내용 : 구)한바다호를 활용한 선박해양안전센터 조성
인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안전한 해양레저이용을 위한 기초 수상안전 수칙과 비상 대응요령 교육 실시 및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소년단인천연맹, 한국마리나협회, 요트협회인천연맹 등의 체험시설 활용 ○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여객터미널, 해수욕장 등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명조끼 착용법, 응급처치 및 대응요령 등 ○ 수협중앙회 주관 어선안전조업교육 시 위급상황 조치 교육 강화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폐소생술, 조난신고 등
전라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해양안전관(진도군)과 청소년해양교육원(여수시)의 조속한 건립 추진 ○ 연안항 여객선터미널 시설을 활용한 안전장비 전시시설 확충 ○ 해수욕장, 여객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추진 ○ 홍보영상물 상시 제공으로 터미널 이용객 안전의식 제고
전라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의 안전한 해양레저이용을 위한 기초 수상안전 수칙과 비상대응요령 교육 실시 및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소년단전북연맹, 전라북도세일링연맹, 사)군산시 요트협회 등의 체험시설 활용 ○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여객터미널, 해수욕장 등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명조끼 착용법, 응급처치 및 대응요령 등 ○ 수협중앙회 주관 어선안전조업교육 시 위급상황 조치 교육 강화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폐소생술, 조난신고 등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984번지(방아머리문화공원) - 사업비 : 400억원(국비 300, 도비 100, 안산시 부지제공) - 사업기간 : 2015 ~ 2019년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 연면적 9,550㎡/지상 3층 - 조성방안 : 해양재난을 직접 체험하고 대응경험이 쌓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해양생존 체험, 이안류 체험, 급물살 체험, 여객선 탈출 - 선박운항 체험, 선종별 안전체험, 해양사고 피난·구조 체험 등 - 추진실적 및 계획 - ‘17. 8. 30. ~ ‘18. 6. 25. : 전시 및 건축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 ‘18. 6. ~ ‘19. 12. : 공사업체 선정, 공사 착공 및 준공

3-2-2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체험확산

□ 배경 및 필요성

-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수산부의 해양경찰청, 교육부, 지자체 등은 해양안전체험교육 관련투자 확대 중
 - 중복투자 방지 및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유관기관간 상호 협력체계 마련 필요
 - * 콘텐츠 개발, 교육 프로그램 마련, 시설운영 등 다각적 협력 필요

□ 추진계획

◆ 교육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해양안전 체험
기회의 다양성 도모와 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 지자체 보유시설 현황파악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하여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해양안전실천본부” 활동과 연계추진(연중)
- 해양안전종합관리 TF회의 등을 통해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및 체험교육의 구체적 개선방안 논의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인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 유관기관 관련시설을 활용한 체험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경장비 전시 및 체험을 통한 시민의 해양안전체험 확산 추진 ○ 초·중학생 대상 해양안전교육 확대 및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한국해양소년단과 협조하여 추진 ○ 제23회 바다의 날 행사 시 해양레저 체험 행사실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모형 만들기, 해양레저체험 등
전라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운영중인 각종 체험관, 청소년 수련 시설 등 기존시설을 활용한 해양안전체험 기회 확대 ○ 매월 1일 「어선안전의 날」 활용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으로 어업인 및 일반인 해양안전 체험 기회 확대 제공 ○ 목포어업정보통신국의 안전조업 상설교육장을 활용 어업인 안전장비(소화기, 구명조끼 등)에 대한 체험 기회 확대 ○ 도서벽지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순회교육” 확대
전라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 유관기관 관련시설을 활용한 체험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학생해양수련원을 활용한 도민의 해양안전체험 확산 추진 ○ 초·중학생 대상 해양안전교육 확대 및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및 한국소년단전북연맹과 협조하여 추진

3-3

체험중심의 고품질 해양안전 지식 보급

3-3-1

해사안전 지식전파 및 보급

□ 배경 및 필요성

- 기존의 집체교육을 통한 일방적인 해사안전 지식전파 및 전달 위주의 교육방식의 실효성 의문
- 해양사고 발생 경향과 피 교육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해사안전 지식전파 및 보급방안 마련 필요

□ 추진계획

◆ 해양사고 발생의 경향과 수요를 분석해 고품질 해양안전 지식 보급

- 선장의 비상대응능력 강화 지원 및 선종별 눈높이 교육자료 제작
- 선박 사고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내외 주요 해양사고사례 분석 등을 통한 선장의 비상대응 역량강화 지원방안 도출
- 선종별 주로 발생하는 해양사고에 대해 분석해 선원의 눈높이에 맞고 실효성 있는 사고예방 교육자료를 개발, 선박 종사자에 제공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해양사고 교훈집, 해양사고 예보 등 배포·홍보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등에서 발행 중인 주요 해양사고 교훈집, 해양사고 예보 등 교육자료 활용 해양종사자 교육·홍보 시행 * 매월·계절별 안전운항실천 구호 등 홈페이지 게시 및 SMS 문자 발송

3-3-2

해사안전 평생교육 기반마련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해양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습득을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의 해양안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안전교육 방안 마련

□ 추진계획

◆ 생활밀착형 해양안전체험시설 구축·운영으로 초등학생 등 일반인들의 해양안전 체험교육 활성화 추진

- 워터파크와 연계한 “해양안전체험시설 운영”,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 버스 운영” 등 5개 분야 10개 세부과제 수립·시행
- 접근성 향상 등 폭넓은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놀이형(2), 이동형(2), 현장형(2), 거점형(2), 이벤트형(2) 등 5개 분야로 과제를 추진
- 계속사업인 “해양안전교실” 등은 체험교육을 강화(‘18.1~)하고, 신규사업*은 소요예산 확보 등 단계적 사업추진(‘18~‘19)

* 워터파크 해상생존체험장·안전전시관, 안전체험버스, 청소년 진로프로그램 등 6개 과제

- 예산확보 용이 등을 위해 “워터파크 연계 해양안전체험시설 운영사업”은 상록리조트(천안)와 연계하여 시범사업 추진(‘18.1)

붙임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 구축·운영 방안’ 세부과제

○ (5개 분야 10개 과제) 소요예산 : 총 29.8억원 /(*) 신규사업 : '19년 예산 확보(19.8억원)

추진 과제	주요 내용	소요예산
□ 놀이형 해양안전체험		
① 워터파크 물놀이장 內 해상생존체험장 운영	◦ 상록워터파크 시범사업('18.1) ◦ 전국 광역시·도로 사업 확대('19)	5억원* (17개소)
② 물놀이시설 등 위락시설 內 해양안전전시관 운영	◦ 상록워터파크 시범사업('18.1~) ◦ 전국 광역시·도로 사업 확대('19)	3.4억원* (17개소)
□ 이동형 해양안전체험		
③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버스 (BUS)’ 운영	◦ 체험버스 차량 제작·운영('19~)	5억원* (1대)
④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체험교육 강화	◦ 초중고교, 일반단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장비 체험프로그램 강화('18)	5억원 (5만명)
□ 현장형 해양안전체험		
⑤ 선박해설사를 통한 여객 대상 안전설비 현장교육	◦ 선박해설사 교육·운영('18~) ◦ 인사혁신처 프로그램 제안('19)	1억원 (4명)
⑥ 내항선 지도·감독 시 안전 장비 시연 확대	◦ 구명뗏목 팽창 시연, 구명신호기 등 안전설비 시연 확대('18)	2억원 (110회)
□ 거점형 해양안전체험		
⑦ 지역별 기초해양안전체험관 설치·운영 지원	◦ 전국 광역시도 대상 공모사업으로 해양안전시설·장비 지원('19)	3.4억원* (17개)
⑧ 기초해양안전체험관 VR 기반 체험콘텐츠 확충	◦ VR기반 교육프로그램 개발('17.12) ◦ 체험교육 콘텐츠 확충('18)	2억원
□ 이벤트형 해양안전체험		
⑨ 해양안전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강사 확보 및 협력업체 MOU체결('18)	0.6억원* (6회)
⑩ 현장에서 함께하는 해양 안전홍보관 운영	◦ 지역행사 및 피서철 해수욕장 등 해양안전 홍보부스 운영 등('19)	2.4억원* (130회)

3-4

해양안전문화 확산 기반 조성

3-4-1

민간주도의 해양안전문화 확산기반 마련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안전문화 확산사업을 위한 전담조직·인력의 부재, 예산 부족 등으로 안전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
- 민간주도의 체계적인 해양안전문화 확산기반 구축·지원 필요

□ 추진계획

◆ 기존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조직의 통합유도로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안전문화사업 추진기반 조성

- 해양안전문화 창달 및 확산을 위해 활동 중인 민간단체 현황 파악 및 활성화 추진방안 마련('18.下)
- 해양안전문화 관련 민간단체*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 통합 또는 상근운영을 위한 법인화 추진 지원('18.下)

* 해양안전실천본부, (사)해양인적안전진흥협회, 선박안전관리자협의회

3-4-2

부처간 통일된 안전정책 확산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해운·해사, 수색·구조, 어선 등 분야별 안전문화 정책*의 개별 시행으로 일관성·지속성 미흡

* 해양사고예방(해양수산부), 수색구조(해양경찰청), 내수면 선박(지자체) 등

- 캠페인 등 기관별 유사정책 산발적 시행으로 정책효율 저하 우려

□ 추진계획

◆ 해양안전 관련부처와 민간기관간 체계적·지속적 협업체계 마련으로 통합적 해양안전정책 및 효과적 대책시행 도모

- 해양안전 유관기관간의 안전정책 정보공유 및 통합적 정책추진을 위한 “해사안전정책 확산 협의체” 구성·운영 추진('18.上)
 - 해양안전 캠페인 공동 개최, 연도별 중점홍보과제 선정시행 등 부처별 해양안전문화 정책추진 협업 및 통일성 확보
- 해양안전문화 확산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별도로 운영하는 ‘해양안전의 날’과 ‘어선안전의 날’ 합동운영(매달 1일) 추진(연중)

4. 해상 종사자의 역량제고와 고품질 복지제공

□ 전체 해양사고의 91%를 차지하는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18년 목표 : 49,500명, 비상대응, 안전장비 사용법 등 기초안전수칙 집중교육

□ 연안여객선, 유조선, 예인선 등 취약선종 승무원에 대한 맞춤형 안전 교육 시행 및 교육 콘텐츠 보강 등 고품질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기존 교육과정 재점검 및 현장방문을 통한 연안선박 교육과정 개선방안 마련('18.12)

□ 해양수산분야 경영진(CEO)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강화로 업계의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 교육과정 평가 설문결과 반영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편성, 강사섭외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18년 목표 : 330명)

□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권역별 복지지원 사무소 설치, 장제비 지원 등 체감형 선원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 원격의료 시범사업 지속추진('18년 누적 60척 예정)

□ 국제 선원기준 변화에 부합하는 노사정 협력체계 유지, 해기사 양성 프로그램 확대 등 우수해기사 양성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 해사노동협약(MLC) 3자 특별회의('18.4) 등 국제협약 안건 선제적 대응

□ 선원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운영, 선원인력수급계획 수립 등 안정적 선원고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선원 이·전직지원센터 운영, 선원인력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분석 연구용역 추진

4-1

해사안전관리 주체별 맞춤형 안전교육 체계 정립

4-1-1

종사자 안전교육 실효성 확보

□ 배경 및 필요성

-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해운업계 최고경영자 및 종사자 대상 맞춤형·현장형 해양안전교육 확대 시행

* (근거) 중장기 해양안전문화 진흥 기본계획('13.12),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14.9)

□ 추진계획

◆ 중소 선사 CEO 대상 해양안전교육을 실시(300명)하고, 선원 등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교재개발 및 체험형 방선·집합교육 시행(49,500명)

- 선사 경영진에게 안전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임을 인식시켜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경영문화가 업계에 정착되도록 유도('18.2~12, 330명)
 - 일방적 주입식이 아닌 참가자가 능동적으로 과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 사례 위주의 열린 강좌로 구성
 - * 우수사례 토론, 체험 실습, 브레인스토밍,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 육해상 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취약선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해양사고 예방교육 추진('18.3~12, 49,500명)
 - 비상보고체계, 주요 안전장비 사용법 등 해양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요령을 교육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의식 함양 제고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해사안전 지도·감독 및 선박보안심사 시 선원에 대한 현장 방선교육 병행 실시(수시) ○ 해양계 관련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미래 해양인재 대상 현장 맞춤형 실무 교육 실시(매분기) ○ 선박안전관리자 대상 해양안전세미나 개최(7월) ○ 해양안전실천본부를 중심으로 관련 지자체 및 업·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 지원(수시) <hr/> <p>【제주해양수산물관리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항선 방선교육(안전점검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기 및 장소 : 연중 / 제주·서귀포항 및 연안항(4개항) ○ 무역항 선박종사자 집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기 : 상반기(제주항), 하반기(서귀포항) 각 1회 - 교육장소 : 제주해양수산물관리단(제주), 서귀포수협(서귀포) * 제주 : 화물선, 여객선 교육, 서귀포 : 어선, 유도선 교육 ○ 내항화물 및 내항여객 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기 / 장소 : 봄철 및 동절기 각 1회 / 제주해양수산물관리단 - 교육내용 : 운송사업자에 대한 각 취약시기별 안전교육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항유조선, 예부선, 화물선 선사는 물론 다중이용선박 사업자 대상 전문기관에 의한 1일 과정의 해양안전 집체교육 실시 ○ 선박점검, 심사 등 현장 업무 추진시 선박 종사자 대상 방선교육 연중 실시 ○ 미래해양안전 인력인 해양수산계 고등학생 대상 해양안전 예방 이론과 구명·소방설비 사용법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실시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집합교육 실시(연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해양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안전항법 교육 및 시청각자료, 실습자료를 활용한 안전장비 교육 등 현장감 있는 교육 실시 ○ 선종,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교육지원단과 교육 관련 내용 사전협의 및 맞춤형 교재 제작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div>○ 어선종사자 합동교육 실시(연 3회, 어업정보통신국 일정에 따름)</div> <div>- 해양안전실천 지역본부 활동과 연계한 합동교육을 통해 불필요한 중복교육 방지 및 편의 도모</div>		
마산청	<div>○ 선종별 맞춤형 집합교육 실시(해양안전교육지원단 협조)</div> <div>- 현장감* 있는 교육과정, 피교육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시</div> <div>* 사고사례학습, 비디오 등 시청각 교재 활용, 구명설비 시연 등</div>		
	교육 대상	교육 장소	교육 시기
	조선소 및 예부선 종사자	현장교육	반기별
	여객선	통영시	반기별
	<div>○ 사고 취약선박 현장 방선교육 실시</div> <div>- 선박심사, 지도·감독, 기국통제 시 선종별 사고예방* 교육</div> <div>-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수배하여 전문교육 실시</div> <div>* 사고사례, 선박 필수설비 사용법, 음주운항 예방 교육 등</div>		
동해청	<div>○ 해양안전정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문교육 강화 및 종사자 흥미유발 프로그램(설비시연, 동영상 시청 등) 등을 활용한 안전교육 추진</div> <div>- (대상) 선원, 안전관리자 등 육·해상 관련 종사자</div> <div>- (내용) 구명설비 시연 등 전문성 있는 직무교육, 관할 해역 내 사고취약요인 숙지교육 및 계절별 해양안전 종합대책 안내 등</div> <div>* 순회교육(3, 9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협조), 반기별 특별교육(6, 12월)</div> <div>○ 노트북, 태블릿PC 등 현장 활용도가 높은 모바일 전자기기를 활용한 안전관련 교육영상 시청 등 효과 높은 방선교육 실시(연중)</div> <div>- (대상) 사고취약 선박 선원 및 관련 종사자</div> <div>- (내용) 기초 항해당직 수칙, 기관정비 요령 등 기본수칙 집중 교육 및 주요 기기별 관리요령을 담은 동영상 교육자료 등 제공</div> <div>* 가용 예산(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활용, 교육용 전자기기(태블릿 PC등) 등 확보 추진</div>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종사자 대상 체험·참여형의 현장감 있는 집합교육 시행(연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파교육, 비디오 등 시·청각 자료, 안전설비 직접사용 등 현장감 있는 교육 강화 및 피교육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시행 ○ 안전관리 취약선박(예·부선 등) 및 선종별 특성화된 교육 병행 확대(수시)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선박 점검·검사 시 교육 병행 실시(방선교육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항해당직 수칙 및 항법, 최근 해양사고 사례 및 비상 대응 요령 등 ○ 해양사고 예방 및 비상상황 대응교육 실시(집합교육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항, 완도항 선박종사자 대상으로 구명뗏목, 소화기 등 안전장비 작동 실체 체험·교육 진행 - 여객선 사고사례 및 대응방법, 선박직무교육 및 종사자 안전 의식 제고 교육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작업관련 종사자의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해양안전교육지원단*을 통한 안전의식 향상 전문교육 및 안전장비 실사용을 통한 체험교육 실시 ○ 해사안전감독관 정기(수시) 지도·감독과 연계하여 교육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예부선 등 사고 취약선박 방선교육 계획 인원 450명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종사자의 특성에 맞춘 교육여건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종사자의 업무 특성에 맞춘 교육자료를 준비하고 시행 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 ○ 경기권 학생을 대상으로 해양안전 교육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발전수준과 해양관련 활동이 증대되는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추후 이용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필요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교육) 선주, 안전관리자 등 육상종사자 대상 집합교육 (연 1회), 해상 종사자 집합교육(반기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급 대상 최근 해양사고사례 및 사고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집합교육 실시, 소속 선박의 해상종사자에 자발적 전파교육 유도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조선, 급유선, 선박블록·공사작업 예부선등 사고다발 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충돌, 좌초사고 예방을 위한 관내 안전 취약 요소 및 사고사례·교훈 설명 - 대형선박사고 발생 시(타 항만 포함), 관련 선종의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육·해상 종사자 특별교육 실시(필요 시) ○ (방선교육) 취약선박 종사자 대상 해양사고 예방 현장교육(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선박(내항유조선, 예부선 등) 종사자 대상 기초항해 당직 수칙, 기관사고 예방을 위한 직무교육 등의 현장교육 실시 * 충돌예방규칙·레이더 판독법, 기관설비 점검방법 등 - 해양안전예보 활용 월별 해양사고사례 설명 및 안전운항 당부 ○ (교육지원) 정유사, 항만공사 시행사 등 취약선박 종사자 선원 대상 교육 요청 시 적극 지원을 통해 안전교육 대상자 범위 확대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 종사자 대상 집합교육 및 방선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교육) 충남해양과학고 승선 관련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눈높이 교육 실시 * 동영상을 활용한 시청각 교육, 소화기 사용법, 구명뗏목 진수 시연회 등 - (방선교육) 국적외항선 특별점검, 내항선 인증심사, 국적선 보안심사, 해사안전감독관 내항선 안전점검 시 선원교육 병행 실시 * 연안항해 안전수칙준수, 항해장비·통신장비 사용법, 기상불량 및 해양 사고 시 비상대응법 등 집중 교육 - (연계교육) 태안어업정보통신국, 선박안전기술공단 태안지부, 대전기상청, 해양환경관리공단,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어업인 대상으로 각 어항포구를 찾아가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연 4회)
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 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집합 전문교육 실시(선박안전기술공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선원, 안전관리자 등 육·해상 관련 종사자 - (내용) 구명설비 시연 등 전문성 있는 직무교육, 관할 해역 내 사고취약요인 숙지교육 및 계절별 해양안전 종합대책 안내 등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p>(관련법규, 안전설비, 안전장비사용, 인명구조, 응급조치 요령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회 지도 점검 교육 실시, 현장 안전장비 및 시설 상태와 관리 방법 응급조치 및 대피 등 현장중심으로 선박 안전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사고취약 선박 선원 및 관련 종사자 - (내용) 기초 항해당직 수칙, 기관정비 요령 등 기본수칙 집중 교육 및 주요 기기별 관리요령
울산항만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종사자 직종을 고려한 맞춤형 집합교육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선박 종사자 등 해상종사자 집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조선, 급유선, 선박블록·공사작업 예부선등 사고다발 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충돌, 좌초사고 예방을 위한 관내 안전 취약요소 교육 등 - 선주, 안전관리자 등 육상종사자 대상 집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급 대상 최근 해양사고사례 및 사고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집합 교육 실시, 소속 선박의 해상종사자에 자발적 전파교육 유도

4-1-2

취약선종 맞춤형 교육체계 확립

□ 배경 및 필요성

-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에 따라 연안선박 선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연안선박의 선종별 승선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연안선박 특화 교육과정 정비
- 선종별 현장점검을 통해 실제 승선현장에서 교육이 요구되는 사항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

* 여객선 기초교육, 여객선 상급교육, 연안선 직무교육 등

□ 추진계획

◆ 연안선박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개선

- 연안선박 관련 기존 교육과정을 재점검하여 연안선박에 특화되면서 교육 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용이하도록 교재 및 교육과정 개선 추진
- 실제 현장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들이 교재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선사 및 선원 면담 등 선종별 현장방문 실시('18.3월~)

* 지정교육기관(해양수산연수원) 교원 현장방문 프로그램 시행

- 연안선박 교육과정 개선방안 마련 : '18.12월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항 안전관리 취약선 150척, 선원 900명 대상 방선교육 실시(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이행 안내서」 통한 교육 병행 ○ 해운선사 CEO 대상 해양안전리더교육 실시(2회, 100명)

4-1-3

최고경영자, 안전관리책임자 등 교육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선박소유자 등 선사 경영층의 안전의식 내재화를 통한 업계의 안전문화 정착 도모
- 안전경영에 대한 선사 경영진의 인식전환과 가치정립은 해양사고 저감을 위한 전제요건이므로 교육 지속·확대 추진
- * (근거) 중장기 해양안전문화 진흥 기본계획('13.12),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14.9)

□ 추진계획

◆ 해양수산분야 경영진에게 안전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임을 인식시켜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경영문화 정착을 위한 해양안전 리더교육 추진('18.2~12, 330명)

- 기존 사업('14~'16년)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17년에는 해양수산 CEO 대상 안전경영 전문교육으로 확대
- 교육과정 평가 설문결과 반영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편성, 강사 섭외 등 추진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 (명칭변경) 선사 CEO 대상 해양안전리더교육 → 해양수산 CEO 대상 해양안전리더교육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항 안전관리 취약선 150척, 선원 900명 대상 방선교육 실시(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이행 안내서」 통한 교육 병행 ○ 해운선사 CEO 대상 해양안전리더교육 실시(2회, 100명)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 CEO 대상 해양안전리더 교육실시(1회) ○ 집합교육이 곤란한 내항 중·소형 선박의 선원들에 대해서는 각종 심사 및 지도·감독시 교육 병행 실시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 CEO대상 해양안전리더 교육실시(우리부 시행계획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상황의 인식과 인적 안전관리 등을 통해 안전경영을 우선으로 하는 해양안전문화 구축 - 참가자가 능동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 사례 위주의 강좌로 구성 * 교육 내용 및 구성 등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위탁기관과 사전 협의 ○ 중·소형선박 종사자 방선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교육이 곤란한 내항 중·소형 선박의 선원들에 대해서는 각종 심사 및 지도·감독 시 교육 병행 실시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경영자 대상 해양안전 의식·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사 경영층, 다중이용선박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품질 경영문화 확산을 위한 '해양안전리더 교육' 시행 ○ 주요 사고사례 등에 대한 정기적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분기별 해역별 주요 사고사례 정보 배포(중해심 제공)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경영자 대상 해양안전 의식·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사 경영층, 다중이용선박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품질 경영문화 확산을 위한 '해양안전리더 교육' 시행(연 1회) ○ 중·소형 선박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체교육이 곤란한 내항 중·소형 선박종사자 대상 방선교육 실시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해양수산CEO 대상 해양안전리더 집체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경영에 대한 이론교육, 사례 공유로 선사 경영진의 인식전환 유도 - 능동적 교육(토론, 사례연구 등) 위주의 열린 강좌로 구성 * 교육내용: 안전경영 전력과 리더십, 내항해운 경영자의 역할과 책임 ○ 참여율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교육 과정 평가 설문결과 반영 등 고려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청 관내 교육생(CEO) 모집 장소 및 강사섭외 등 전반적인 사항 수행 - 내항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자, 예부선, 화물선 선사 등 해양 분야 경영자를 대상으로 집체교육 실시 - 일방적 주입식이 아닌 참가자가 능동적으로 과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 사례 위주의 열린 강좌로 구성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 최고경영자 대상 해양안전리더교육 시행 - 선사 경영자, 선박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안전경영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진행 ○ 선사 등을 대상으로 해양안전관련 자료 배포 - 해양사고와 관련된 사례집과 연안수역의 교통여건 등 선박안전 운항과 관련된 정보를 우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기적 제공

4-2

어선종사자 안전관리 역량제고 및 인력관리체계 개선

4-2-1

어선원 안전교육 개선

□ 배경 및 필요성

- '17년도 해양사고 인명피해(사망·실종) 87%가 어선에서 발생, 상대적으로 승선환경이 열악한 어선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필요
- 어선원에 대해 매년 일정시간(4시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어선이 전체사고의 70%^{*}를 차지하는 등 실효성 미흡

* 선종별 해양사고 비중('13~'17년) : 어선 70.1%, 상선 29.9%

□ 추진계획

◆ 어선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체험·참여형, 맞춤형·수요자 중심 교육 및 중장기적으로 교육대상을 일반·외국인 어선원까지 확대

- (체험·참여교육) 연중교육 가능한 체험·참여형 상설교육장 운영 확대 등 교육내실화 추진
-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인천·포항·목포) 활용, 심폐소생술, 소화·구명설비 사용법, 기관고장시 응급처치법 등 실습교육 연중 실시
- 내실 있는 체험·참여교육을 위하여 거점별 상설교육장 확대(3→10개소), 1회 교육인원 축소(104명→50명)등 교육환경 지속개선

* 상설교육장 확대 : ('17)3개소 → ('18)5개소 → ('19)8개소 →('20~)10개소

** 회당 교육 실시인원 축소 : ('17) 104명 → ('18) 75명 → ('19~) 50명

- (맞춤·수요자 중심교육) 톤급별·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도서벽지 등에 “찾아가는 순회교육” 등 수요자 중심교육 실시
- 톤급별·업종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구성 및 교재개발 등 어업인 눈높이에 맞는 강의기법^{*} 도입

- 지구별 수협 등과 협조하여 원거리 도서지역·비조합원 등을 대상, 출장 순회교육 실시

* '18년 교육 계획 : 49천명(비조합원 2천명 포함) 497회 실시 / 예산 3.4억원

- (교육대상 확대) 중장기적으로('19~) 선주·선장·간부선원 외의 일반 어선원(7만명 추정) 및 외국인어선원도 안전교육 실시

* 일반 어선원 포함 시 교육대상자는 현행 4~5만명에서 12만명 수준으로 증가

4-2-2

외국인 어선원 안전교육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선박 척수의 증가로 선원수요가 커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선원의 승선기피 등으로 인해 외국인 선원의 고용 및 비중 증가
- 외국인 선원에 대한 적응 교육기간이 짧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건·사고 발생 가능성 증대

□ 추진계획

◆ 외국인 어선원의 이탈방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지원 및 사전교육 강화

- 외국인 어선원 대상 안전교육 강화
 - 외국인 어선원(20톤 이상 어선승선)의 입국 전·입국 후 교육일수를 3일에서 7일로 강화하고, 조업안전규칙, 비상시 행동요령 등 안전 교육 시행
 - 외국인 선원용 외국어 교육자료 제작·배포(선주단체)

4-2-3

외국인 선원 직무환경 및 수급관리 체계 개선

□ 배경 및 필요성

- 외국인 선원의 선내 부적응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기 적응 방안 마련 및 안정적인 고용관리 체계 구축
-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 등 수급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

□ 추진계획

◆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외국인 선원 신고제도 개선 추진

- 외국인 선원 송출비용 저감 및 불법체류 감소 방안 마련
 - 송출업체의 과도한 송출비 징수 금지, 외국인 선원 송출국 정부(주한 대사관)과 협조체제 유지, 국내 송입업체 수수료 제도 개선 등
 - 외국인 선원 신고제도 개선
 -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최초·변동신고)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유관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및 효율적 관리, 신고인 편의 도모
- * 선박별·선사별 외국인선원 현황 등 파악 가능

4-3

고품질 선원복지 서비스로 선원직 매력 회복

4-3-1

내항선 근무여건 개선

□ 배경 및 필요성

- 우수한 선원이 장기 승선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 필요

□ 추진계획

◆ 선원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선원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선원근로감독 강화

- 국내 선원 및 외국인 선원의 근로여건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개선필요 사항 권고

○ 선원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선원법령 개정 추진

- 선원의 날 제정, 최저임금 규정 명확화, 직무상 사망 범위 명확화 등
- * IMO가 정한 세계 선원의 날(6.25)을 고려하여 6월 세 번째 금요일로 정함

4-3-2

선원복지 정책 마련

☐ 배경 및 필요성

- 우수한 선원이 장기 승선할 수 있도록 선원복지 확충 필요

☐ 추진계획

◆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체감형 선원복지 확대 추진

○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

- 장기간 운항하는 원양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 지속 추진('18년 누적 60척 예정)

○ 체감형 선원복지 확대 추진

- 선원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복지지원 사무소를 설치하고 원양어선 조업현장 선원가족 방문 지원, 휴양콘도 지원, 장제비 지원 등 체감형 선원 복지 확대

4-3-3

국제 선원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체계 확보

□ 배경 및 필요성

- 국제노동기구(ILO)의 해사노동협약(MLC) 3자 특별회의('18.4)의 주요 안전에 대한 대응 및 국내 적용 준비

* 해적 및 무장강도에 의한 선박위협에 관한 사항은 1980년대를 시작으로 IMO의 주요 안전

□ 추진계획

◆ 국제협약 신규발효 등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사정 협력체계 유지 및 국내 수용방안 마련

- 국제노동기구(ILO)의 해사노동협약(MLC) 3자 특별회의('18.4) 대응

- 주요 안전*에 대한 국내 노·사·정 3자 회의 개최

* 노동자 측 개정안건 제출('17.8.23)내용은 해적 또는 무장강도에 대한 선원, 선박 등 보호 요구임

* 선박소유자 측 개정안건 제출('17.8.23)내용은 해적 등에 의한 선박납치시 임금 지급 확보방안 마련 제시임

- 국제 협약 안전의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 등 능동적 대응 추진

* 선주 측이 제시한 주요 안전은 영국의 국제해사고용주협의회(International Maritime Employers' Council : IMEC)가 보장하고 있는 IBF Agreement(IBF High Risk Area Clause)의 선원권익보장의 주요 내용임

4-4

우수해기사 및 관련 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

4-4-1

우수해기사 양성기반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선원수급 여건과 운항환경 변화에 맞춘 해운산업 맞춤형 해기사 양성 공급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설로 우수 해기인력 공급 지원
 - 우리나라 해기인력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해운산업 지원

□ 추진계획

◆ 국제선원기준 변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설, 신규 해기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우수 해기사 양성

- 해기사 보수교육 강화로 안전관리 인적역량 제고
 - 외항선원 대상 해적피해예방 교육과정 신규 개설·운영('18~)
 - * (해적피해예방 교육) 국제항해선박 및 선원에 대한 해적피해예방 및 대응
- 노후 실습선 대체 및 상선 실습선 신조
 - 노후 실습선 대체 건조 및 해사고 전용 실습선 신조를 통한 초급 해기사 효율적 실습 및 안전 확보
 - * 제2갈매기호 대체건조('15~'18) : 어선실습선
 - * 해사고 전용 실습선 신조 ('18~'21) : 상선실습선
- 서해권 종합비상훈련장 구축
 - 세월호 사고 이후 선원 안전교육 강화 및 교육수요 증가 대응

- 서해권 종합비상훈련장 구축으로 선원 안전교육 지역 편중 해소
- * 2018년 사업내용 : 시공('18~'20)

○ 해양플랜트 종합비상훈련장 구축

- 건조분야 위주의 국내 해양플랜트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분야로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 국내에서 국제수준의 해양플랜트 관련 안전·직무교육을 수행하여 국부유출을 예방하고, 동 분야의 신규 일자리 창출
- * 2018년 사업내용 : 시공('18~'20)

○ 교육실습장비 도입

- 해상안전에 대한 국제규정 강화에 따른 첨단 교육장비 확충으로 실습교육 확대
- * 2018년 사업내용 : 어선조업레이더 시뮬레이터 구축('18)

○ 오션폴리텍 해기사 양성(육상인력의 해기인력 전환배출)

- 해운산업 수요에 맞춘 실무형 초급 해기사 양성 공급
- 육상의 미취업 청·장년 인력 등을 단기 해기교육을 통해 해양산업분야 전문직인 '해기사'로의 진출기회 부여, 일자리 제공
- * 2018년 교육계획 : 외항상선 3급(80명), 내항상선 5급(40명)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기사 양성과정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18. 3 ~ '18. 11(9개월간) - 사업비 : 1,225백만원(국 800, 시 125, 자부담 300) - 교육인원 : 100명(3급 항해사 50, 3급 기관사 50) - 교육자격 : 3급 해기사 취득을 원하는 미취업자 - 교육내용 : 이론교육, 실습·항해교육, 어학교육, 취업박람회 등 ○ 법정교육 실시('18.3~11) ○ 선사초청 설명회 및 취업박람회('18.8) ○ 교육과정 수료('18.11)
해양수산연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기사 양성프로그램 운영으로 초급해기사 공급 지원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운산업 수요에 맞춘 실무형 초급 해기사 단기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의 중·장년층 대상 해기 전문교육으로 우수해기사 탄력적 공급 ○ 노후 실습선 대체 (14~18년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실습선 대체 건조를 통한 초급해기사 효율적 실습 및 안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호 대체건조 ('14~'17) : 상선실습선 건조 완료 * 제2갈매기호 대체건조('15~'18) : 어선실습선 * 상선실습선 후속선 건조 ('18~'21) : 상선실습선 ○ 서해권 종합안전비상훈련장 구축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월호 사고 이후 선원 안전교육 강화 및 교육수요 증가 대응 - 서해권 종합안전비상훈련장 구축으로 선원 안전교육 지역 편중 해소 - 그 간의 추진 경과 (~2017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립사업단 구성('16. 1) 및 훈련장 구축 계획 작성 * 사업부지 최종 확정(목해대 배후부지, '16. 11) * 부지변경 : 목포시 남향(2월) → 목해대 배후부지(6월) → 배후부지내 위치 변경(11월) * 설계용역 계약 및 설계 추진(실시설계 진행중, '16. 3~12)

4-4-2

해사 전문인력 양성체계 확립

□ 배경 및 필요성

-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 관련업계까지 종사가 가능토록 전문 산업 인력으로서의 해기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 방안 요구
- 해운업체, 선박 및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원관리, 선박수리·정비, 관련 기술개발 등 관련분야 인력에 대한 수요증가 예상
- * 선박 IT 관련 시장확대에 대비,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의 IT 기술응용 전문 인력 양성 필요

□ 추진계획

◆ e-Navigation 관련 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와 산업 선진화 견인을 위한 융합형 인재 개발

- 산·학·연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 인증체계 지원
- 해양산업계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분야별 e-Navigation 교육 훈련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 ICT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관 협의체 발족으로 e-Navigation 전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관리인 양성과정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2018. 3 ~ 2018. 11(9개월간) - 사업비 : 532백만원(국 317, 시 175, 자부담 40) - 교육인원 : 150명(선박관리인 100명, 어학전문가 50명) - 교육자격 : 협회와 협약을 체결한 선박관리기업 종사자 - 교육내용 :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총 21개 과정 및 어학강의 지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관리 전문가 양성교육 및 선박관리전문가 어학강의('18.4~11) ○ SI 양성사업 강의자료 제작('18.5~8) ○ SI 교육시스템 고도화('18.5~11)

4-4-3

지속가능한 선원수급기반 마련

□ 배경 및 필요성

- 해기인력 전문 양성 교육기관을 통해 양질의 해기사를 배출하여 관련업계에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해운·수산업계의 발전 도모

□ 추진계획

◆ 맞춤형·현장중심형 해기인력 공급 및 선원인력수급계획을 위한 조사·분석 연구용역 추진

○ 맞춤형·현장중심형 해기인력 공급

- 해사고, 일반인 대상 오션폴리텍 해기사 양성과정 운영, 해군전역 군인에 대한 해운분야 취업 연계 등 지속적인 해기인력 양성
- 해양수산연수원의 노후 실습선 '한반도호' 신조 및 해사고 전용 실습선* 추가 확보 등을 통한 실습 위주의 교육역량 강화 추진

* 실습선 건조 : 총사업비 480억원, 사업기간('18~'21), 5,200톤급, 170여명 승선

○ 선원인력수급계획을 위한 조사·분석 연구용역 추진('18.3)

- 선원수급 동향 분석, 선원수급 추계모형 개발 및 수급전망 등

4-5

중소형 선박 인적오류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제도 개선

4-5-1

요트운항에 필요한 승무기준 검토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레저 활동 저변 확대를 위하여 레저선박 자격기준 검토

- 과도한 자격기준으로 마리나 및 해양레저산업 활성화가 저해된다며 부산시에서 '17. 2월 운항자격기준 완화 추진 건의

《건의 내용》

현 행				개 정 안			
《요·보트 면허기준》▷ 선박직원법				《요·보트 면허기준》▷ 선박직원법			
구 분	5~25톤미만	25~55톤미만	55톤 이상	구 분	5~25톤 미만	25~55톤 미만	55톤이상
허 용 면 허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	6급항해사, 6급기관사 한정 6급 해기사	선장(6급항해사) 기관장(6급기관사)	허 용 면 허	(현행과 같음)	6급항해사, 6급기관사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	(현행과 같음)

□ 추진계획

◆ 25톤 이상 55톤 미만 레저선박의 운항자 자격요건은 운항의 안전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방향 마련

○ 25톤 이상 요트 운항자 자격 요건 등은 관련 법령* 등을 검토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3.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

4-5-2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 배경 및 필요성

- 처벌기준 상향, 종사자 의식개선 등을 통해 소형선박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 도모

□ 추진계획

◆ 음주운항 제도개선, 종사자 교육·제도 및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 어선·기타선 등 소형선박 운항자의 관행적 음주운항 경각심 제고를 위해 음주운항 처벌기준 상향* 입법 지원

* 해사안전법 개정 의원발의 : 김종태의원('17.1), 박찬우의원('17.2), 백혜련의원('17.7)

- 음주운항에 대한 종사자 의식개선 교육·제도 실시

- 기관별로 시행중인 각종 안전교육*시 종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와 함께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의식개선 교육 병행(연중)

* 지방청·선박검사관 방선교육, 수협 어업인교육, 해경 해양안전교육 등

- 음주운항단속 이행력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협업 강화

- 해경 음주운항 집중단속시 지방청 관공선, 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및 지자체 합동단속 등 협업 지속 추진(분기별)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취약선박 현장 방선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심사, 지도·감독, 기국통제 시 선종별 사고예방* 교육 -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수배하여 전문교육 실시 * 사고사례, 선박 필수설비 사용법, 음주운항 예방 교육 등
인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운항 관련 제도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개별법에 따라 각기 적용되고 있는 음주운항 벌칙 기준 통일로 관련제도 및 벌칙의 일관성·형평성 확보에 적극 의견 제출 ○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종사자 의식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의 날(매월 1일) 캠페인 적극활용 ○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음주운항단속 요청 시 적극협조 ○ 불법어업 단속 시 계도
전라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운항 관련 제도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개별법에 따라 각기 적용되고 있는 음주운항 벌칙 기준 통일로 관련제도 및 벌칙의 일관성·형평성 확보에 적극 의견 제출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수협중앙회) 병행 실시 ○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종사자 의식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의 날(매월 1일) 캠페인 적극활용 ○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음주운항단속 요청 시 적극협조 ○ 불법어업 단속 시 계도

5. ICT기반 첨단 해상교통안전관리 체계 구축

□ 위험물 취급항만의 통항여건 진단과 위해요소의 선제적 제거로 안전한 해상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15년~'16년) 울산 등 6개항 → ('17년) 군산·마산항 → ('18년~) 좁은 연안수로 등

□ 한국형 e-Navigation 핵심기술 개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시험 운영 등 e-Nav 구현을 위한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최적안전항로 지원 등 e-Nav 서비스 Prototype(시제품) 개발, 초고속해상무선 통신망(LTE-M) 및 e-Nav 운영시스템 1단계 구축

□ 해상교통안전진단의 해외사례 분석, 진단서의 다각적 세부검증을 위한 검증체계 강화 등 안전진단제도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진단기술기준 현실화 및 개정 필요성 검토, 진단 심사위원 확대운영 추진

□ 국내 항로여건을 고려한 항로표지의 확충 및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고도화 추진 등 차세대 항로표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항로표지 통합관리센터 구축 추진, eLoran 핵심기술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 연안해역의 지속적인 수로조사, 주요항만에 대한 정밀 수로측량 실시로 해역별, 선종별 맞춤형 해도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연안·항만해역에 대한 정밀 수로측량 시행, 해저지형·해저면 영상탐사기술을 이용한 3차원 해저영상물 제작

□ 소형선박의 운항·조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자해도 제작·보급으로 어선·레저보트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겠습니다.

* 어민 안전조업 지원을 위한 정밀 전자해도 제작, 소형단말기용 전자해도 제작, 보급

5-1

해역별 맞춤형 안전관리 및 항행안전 서비스 제공

5-1-1

해상교통 밀집해역 안전관리 개선

□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열악한 자연조건(높은 조석차, 빠른유속 등), 복잡한 항해 위험요소(양식장, 부유물, 좁은수로 등)로 인해 항로주변 사고위험 산재
- 항만 및 연안항로 등 해상교통 밀집해역에서의 입·출항 선박 운항 안전관리 강화 필요

* '17.12.3. 인천 영흥수로에서 급유선(명진호)·낙시어선(선창 1호)이 충돌·전복

□ 추진계획

◆ 항만수역별 해역안전개선 협의체 구성·운영, 연안수로 통항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레이더 설치 및 관제구역 확대 등

- “연안선박 해양안전 종합대책(‘18.2월)” 추진과제에 포함하여 국내 연안 해역의 교통환경 개선 도모
- 지방청별 관할 수역의 안전관리 기관, 업·단체 등이 참여하는 해역 안전간담회 등을 통해 선박통항 위해요소 상시 발굴개선(연중)
- * 계절별 대책 등에 지방청별 해역안전개선 협의체 운영 반영
- 영흥수로와 같은 항계 밖 연안수로의 통항 안전관리를 위해 레이더 설치 및 관제구역(VTS) 확대 추진(‘18년~)
- * 사고빈도, 좁은 수로 등 선박교통안전 환경을 분석하여 취약해역 관제구역 확대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중심의 선종별 특성에 맞는 취약요인 집중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초, 해양오염 사고 위험성이 높은 취약선박(남외항 장기정박 선박, 감수보존선박* 등)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 (사례) SKAZOCHNYJ MOST호(감수보존, '16.7.21)에 대하여 남외항 장기정박으로 인한 항만운영 지장초래에 대한 협조 요청(BPA→부산지법민사집행과)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항로 해상 장애물 신속 제거 및 항법 계도·홍보 등 위반 다발 해역·시간대에 순찰선 중점 운영 * 특히 선박교통이 밀집되는 항로·방파제 입구 등의 취약지역에 순찰선 집중 운용 ○ 상·하반기 각 1회 야간·공휴일 등 순찰 취약시간에 단속활동으로 통항 위해요소의 사전 제거 등 인천항 내 통항안전 확보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수항 VTS와의 협의체 운영을 통한 해상교통 질서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집해역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항법규정 준수 등 협조요청 ○ 무역항 해상안전 중점관리지침에 따라 안전관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순찰선 해상 순찰활동 강화 및 장기 정박선박 관리 강화 등 ○ 항만 내 불법 어로행위 등에 대한 단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기간 설정·운영(반기 1회)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지역 항만 중 통항량이 가장 빈번한 동해·묵호항의 해상 여건을 고려한 해상안전 중점관리대책 수립·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내 해상교통 질서유지를 위한 해상순찰 강화 및 항만 내 불법행위(불법어로, 선박 미허가 수리 등) 집중 단속·계도 시행 - 장기 정박선박 및 위험물 운반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추진*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어로 합동단속 및 계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봄철 실뱀장어 불법조업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실시 및 가을철 낚시어선(주꾸미 조업) 안전항행 유도 강구 ○ 항행장애물인 방치선박 점검 및 안전조치 강구(분기) ○ 순찰선 운용을 통한 항계 내 질서위반사범 계도·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로행위, 미 허가 선박수리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무역항 단속 중점 추진 및 항만순찰선 순찰 강화 등 항내 안전한 해상교통질서 유지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점검, Port-MIS 모니터링을 통해 장기 정박선박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박 선박 모니터링을 통하여 선박명세, 비상연락망(소유자, 대리점, 전화번호 등) 관리인원 승선여부 확인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 무역항 해사안전 중점관리 지침에 의거 자체 계획 수립·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찰선 운영계획 및 취약구간 순찰계획 마련 ○ 항만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개항질서 위반사범 철저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통항에 지장이 있는 어업시설은 적발 즉시 제거 - 소형선박과 어선이 대거 입·출항하는 일출·일몰시나 종래 개항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던 주말 등 취약시간대 순찰 실시 ○ 특별 개항단속 기간 설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2회(5월 중순, 11월 중순),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 장기 정박선박(감수보존)의 침수·오염 등의 사고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강화 및 현장 확인점검(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박선박 중 안전에 취약한 선박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으로 직접 승선하여 선원 재선 및 기관사용 가능여부 등 확인 - 기상악화 대비 피항계획 등 자체 안전관리방안 마련·비치 확인 * 특히 태풍내습 시, 즉각적인 대처 가능 여부 현장점검 강화 ○ 감수보존선박 처분접수 시 계선신고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정박 예정시 대기 가능 장소 지정, 필수선원 승선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을 조건으로 계선신고 수리 - 기상악화시 유관기관 정박지 안전관리 강화 공조체계유지 - 필요시 유관기관 합동 승선점검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종사자 대상 계절별 해상교통안전대책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별 해상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기상여건, 교통상황 및 관련 계획 등을 안내하여 계절 특성에 따른 해상교통 정보 제공 ○ 취약선 종사자 대상 항행안전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취약선(급수선, 통선, 예선 등) 종사자 대상 SNS,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매월 항행안전정보 및 각종 해양 정보 전파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 무역항 해사안전 중점관리 지침에 의거 자체 계획 수립·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찰선 운영계획 및 취약구간 순찰계획 마련 ○ 항만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개항질서 위반사범 철저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통항에 지장이 있는 어업시설은 적발 즉시 제거 - 소형선박과 어선이 대거 입·출항하는 일출·일몰시나 종래 개항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div>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던 주말 등 취약시간대 순찰 실시</div> <div>○ 특별 개항단속 기간 설정·운영</div> <div><div>- 연중 2회(5월 중순, 11월 중순), 합동단속반 편성·운영</div></div> <div>○ 장기 정박선박(감수보존)의 침수·오염 등의 사고예방을 위한</div> <div><div>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강화 및 현장 확인점검(필요시)</div></div> <div><div>- 정박선박 중 안전에 취약한 선박을 대상으로 울산항만공사 합동으로 직접 승선하여 선원 재선 및 기관사용 가능여부 등 확인</div></div> <div><div>- 기상악화 대비 피항계획 등 자체 안전관리방안 마련·비치 확인</div></div> <div><div>* 특히 태풍내습 시, 즉각적인 대처 가능 여부 현장점검 강화</div></div> <div><div>* 기상악화시 관계기관과 울산항 긴급예선 지원 관련 업무협약 적극 활용</div></div> <div>○ 감수보존선박 처분접수 시 계선신고 철저</div> <div><div>- 장기정박 예정시 대기 가능 장소 지정, 필수선원 승선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을 조건으로 계선신고 수리</div></div> <div><div>* 정박지 관리주체인 울산항만공사에서 직접 관리토록 감수보존선박 관리체계 제도 개선</div></div> <div><div>- 기상악화시 유관기관 정박지 안전관리 강화 공조체계유지</div></div> <div><div>- 필요시 유관기관 합동 승선점검</div></div>																																																			
부산광역시	<div>○ 선박·인명(선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계류지 지정 운영</div> <div>○ 최근 3년 선박계류(1일 평균) 현황 (단위 : 척)</div> <table><tr><th>연도별</th><th>총계</th><th>외항선</th><th>연근해어선</th><th>항내운항선</th><th>기타선</th></tr><tr><td>2015</td><td>461</td><td>14</td><td>201</td><td>88</td><td>158</td></tr><tr><td>2016</td><td>448</td><td>8</td><td>205</td><td>59</td><td>176</td></tr><tr><td>2017</td><td>438</td><td>11</td><td>193</td><td>49</td><td>185</td></tr></table> <div>○ 선박별·선종별 계류지 지정</div> <table><tr><th>계류지</th><th>계류선박</th><th>계류지 구분</th></tr><tr><td>1 계류지</td><td>20톤미만 소형선, 연근해어선(통발)</td><td>부산남항서방파제</td></tr><tr><td>2 계류지</td><td>연근해어선(선망, 쌍끌이)</td><td>남부민동 현장사무실 ↔ 남항해양경비안전센터</td></tr><tr><td>3 계류지</td><td>20톤미만, 연근해어선(선망), 항내운항선, 기타선</td><td>남항해양경비안전서 ↔ 보수천</td></tr><tr><td>4 계류지</td><td>연근해어선(채낚기)</td><td>충무파제제(안쪽)</td></tr><tr><td>5 계류지</td><td>원양어선, 외항선(수리대기)</td><td>충무파제제(바깥쪽)</td></tr><tr><td>6 계류지</td><td>연근해어선(트롤), 항내운항선</td><td>보수천 ↔ 검조소</td></tr><tr><td>7 계류지</td><td>내항선(예인선), 외항선</td><td>대평동 호안</td></tr><tr><td>8 계류지</td><td>내항선, 외항선</td><td>남항동 굴항</td></tr></table> <div>○ 계류지 지정운영 안내 및 홍보 : 1회/월</div> <div>○ 계류지 현황 조사 : 1회/월</div>	연도별	총계	외항선	연근해어선	항내운항선	기타선	2015	461	14	201	88	158	2016	448	8	205	59	176	2017	438	11	193	49	185	계류지	계류선박	계류지 구분	1 계류지	20톤미만 소형선, 연근해어선(통발)	부산남항서방파제	2 계류지	연근해어선(선망, 쌍끌이)	남부민동 현장사무실 ↔ 남항해양경비안전센터	3 계류지	20톤미만, 연근해어선(선망), 항내운항선, 기타선	남항해양경비안전서 ↔ 보수천	4 계류지	연근해어선(채낚기)	충무파제제(안쪽)	5 계류지	원양어선, 외항선(수리대기)	충무파제제(바깥쪽)	6 계류지	연근해어선(트롤), 항내운항선	보수천 ↔ 검조소	7 계류지	내항선(예인선), 외항선	대평동 호안	8 계류지	내항선, 외항선	남항동 굴항
연도별	총계	외항선	연근해어선	항내운항선	기타선																																															
2015	461	14	201	88	158																																															
2016	448	8	205	59	176																																															
2017	438	11	193	49	185																																															
계류지	계류선박	계류지 구분																																																		
1 계류지	20톤미만 소형선, 연근해어선(통발)	부산남항서방파제																																																		
2 계류지	연근해어선(선망, 쌍끌이)	남부민동 현장사무실 ↔ 남항해양경비안전센터																																																		
3 계류지	20톤미만, 연근해어선(선망), 항내운항선, 기타선	남항해양경비안전서 ↔ 보수천																																																		
4 계류지	연근해어선(채낚기)	충무파제제(안쪽)																																																		
5 계류지	원양어선, 외항선(수리대기)	충무파제제(바깥쪽)																																																		
6 계류지	연근해어선(트롤), 항내운항선	보수천 ↔ 검조소																																																		
7 계류지	내항선(예인선), 외항선	대평동 호안																																																		
8 계류지	내항선, 외항선	남항동 굴항																																																		

5-1-2

항로 안전하이웨이 기반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 주요 항로는 빠른 유속, 높은 조차, 해무 발생 등과 함께 양식장 및 부유물 등 위험요소가 혼재하는 열악한 환경

* 여객선 항로에서만 연간 350여건의 긴급상황 발생(좌초, 침몰, 이물질걸림 등)

- 항로상 장애물, 저수심 등 위험요소를 조사하고 항해자들에게 안전항로 정보를 제공하는 ‘항로 안전하이웨이 구축’ 사업 추진

□ 추진계획

◆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항로에 대한 법정 항로조사* 및 항로별 특화서비스(항로대장, 여객선항로도첩 등) 제작·제공

* 선박 안전항해를 위하여 수로와 수로주변의 항해목표물, 장애물, 항만시설, 편의시설, 항로 특이사항 등 조사(공간정보구축관리법 제2조, 제31조)

- 항만 위주에서 항로별 현장조사 방법으로 연안항로조사 강화하고 항만해역 수로측량과 연계한 중요 항로 안전정보 집중조사
 - 수로측량과 연안항로조사 등의 활동으로 수집되는 항로정보를 연계하여 항로정보의 동적 운영체계(위험사항→항행통보·경보조치) 마련
- 항로별, 구역별로 도면(종이 및 전자)을 이용하여 항로의 위해요소를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항로정보시스템 구축
 - 항로부근 저수심 구역의 확장, 어업면허·어구의 실제 위치, 항해 장애요소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화하여 관리·제공
- 항로 관련자들이 참여하는 항로부근 사고저감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여 업무개선 및 정보공유 등 협력추진

5-1-3

이용자 중심 항만시설 개발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열악한 내항여객선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으로 이용객의 승·하선과 선박의 접·이안 안전성 제고 필요
 - 전국 여객 승·하선 시설 및 접·이안 시설의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 종합적 개선대책 수립 필요

□ 추진계획

◆ 기초안전시설인 선박 승·하선 및 계류시설 보완 등 추진으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

- 승·하선시 계류시설 이용 안전성 강화방안 수립
 - 선박계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안벽설비 보강 및 계류색 · 펜더 등 계류설비의 안전성 검증 추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고령자, 장애인 등) 대상 안전편의시설 강화
 -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지침*」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선박설계 및 시설개선 추진

5-2

주요 선박통항로 안전관리 신뢰성 제고

5-2-1

위험물 취급항만 통항로 안전성 평가 및 개선

□ 배경 및 필요성

- 주요 위험물취급 항만의 통항로 안전성 평가에서 도출된 개선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

* ('15) 울산·광양·인천 → ('16) 대산·평택당진·부산 → ('17) 군산·마산

□ 추진계획

◆ 울산항 등 주요 위험물 취급항만(8개)의 개선과제 이행실적을 확인하고, 중점과제를 선별하여 주기적으로 환류·관리

- 울산항 등 기 평가항만에 대한 개선과제 이행실적 확인

- 3개년 선박통항로 안전성 평가 종료('15~17년)에 따라 개선과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향후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중점과제를 선별**하여 이행실적 관리(반기별)

* 여건변화에 따라 대안이 필요하거나, 관리 필요성이 적은 사항 등에 대해 과제 변경·제외

** 관계기관, 업·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선정

- 목포항 등 소규모 위험물 취급항만으로 통항로 안전성 평가를 확대하고, 해상교통여건 개선사항 발굴 추진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 용역 결과에 따라 도출된 항로 안전 개선사항 시행 ○ 관내 위험물 운반선 지도·감독(수시) ○ 부산항 위험물 안전관리 협의체* 간담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간담회 실시(연1회) 및 필요시 임시간담회 추가 실시 * 협의체 구성은 해사안전정책과와 업무협의 완료 후 시행 예정 ○ 위험물 하역 현장 점검(연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자 배치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안전교육·비상대응 훈련시행 여부 확인 * 부산청(물류과,환경과,선원과) 및 BPA, 해경, KOEM 등과 합동점검 추진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交通安全특정해역 내 항법규정 준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수항 VTS와의 협의체를 통해 항법규정 준수 협조요청 ○ 1,4항로 직선화 사업 추진 등 중장기 과제에 대해 계획 수립 및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실시설계 반영, 등부표 재배치 등 계획 수립 및 검토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해상안전협의체 회의 개최(년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정책 공유 및 의견수렴, 현장 위해요소 발굴 및 대응 ○ 선박통항로 안전성평가 실시 및 맞춤형 개선방안 마련(본부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진단 기법 등을 적용하여 해역별 교통량, 지리·기상조건, 항로 신설·보완 필요성 등을 분석, 선박통항 위해요인 식별·보완 * 교통흐름·혼잡도조사, 충돌확률평가, 선박조종시뮬레이션 - 위험물부두 출입 시 안전한 운항경로·통항속력·예선 사용지침 등을 통합 제공하는 '안전항행 가이드라인' 수립·배포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선박통항로 안전성 평가 본부 용역 결과에 따라 도출된 항로 안전 개선사항 추진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안서 정박지 확장관련 어업보상 업무 계속(단기 1) ○ 평택·당진항 항로 상 어망 및 어로행위 관련 환경 개선(단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어로행위 단속 협조(서해단)및 관공선(해양호)을 통한 환경개선 ○ LNG 부두 저수심대 준설 작업 계속(장기 1) ○ 입파도 정박지 확장관련 어업보상 업무 계속(장기 2)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안~대산 도선점 상황 모니터링*(대산항 도선사회 / '17.11. 1. ~ '18. 4.30.) 후 해역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한 도선점 이동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선점으로 인한 입·출항 선박 간 통항위해요소 여부 등 모니터링 ○ 유조선 입출항이 잦은 대산항에 대한 '선박통항로 안전성평가' 실시 및 안전성 검토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진단 기법* 등을 적용하여 해역별 교통량, 지리·기상조건, 항로 신설·보완 필요성 등을 분석, 선박통항 위해요인 식별·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흐름·혼잡도 조사, 충돌확률 평가(근접도 평가),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등 ○ 선박 통항로 안전성 평가(세이프텍 리서치)를 통해 대산항 도선점 이동, 대형선을 위한 정박지 추가 지정 등의 도출된 안건 후속 조치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선점 이동 관련 이용 선박 모니터링 결과 반영 및 추가 정박지 지정을 위한 지속적인 입항 정보 공유 등 중장기 계획 이행 ○ 대산항 항로 운영 및 준설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산항 해양수리현상 조사용역비 예산요구('18~'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심측량, 준설토 입경조사 및 표사이동 관측, 조류관측, 침·퇴적 예측 - 대산항 항로준설계획 수립('1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로별 소요수심 조사, 준설량 산정과 투기장 확보계획 수립, 어업피해 영향조사용역 수행 및 단계별 준설계획 수립 등 - 항로 준설공사 시행('21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예산확보, 투기장 현황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 실시 * 필요시 어업피해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 실시

5-2-2

선박통항 항로·수역 안전확보

□ 배경 및 필요성

- 선박교통 밀집 해역에서 발생한 항행장애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평상시 업무 노하우 축적 필요 지속적인 개선사항 발굴 필요

□ 추진계획

◆ 항행장애물 과거 처리사례 공유 등 신속한 장애물 제거체계 마련으로 항로·수역 안전확보 추진

- 항행장애물 발생시 업무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과거 처리사례 (알파호 원목유출)에 대한 백서 발간 추진

* '처리 매뉴얼'은 백서 등을 통한 경험 축적 후 필요성 등 검토

- 항행장애물 제거관련 제도 개선 필요사항의 발굴을 위한 관계자 회의 개최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신히 항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토도 제거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신히 토도 제거공사 추진('17.7.~'20.4.)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어로행위 합동단속 및 계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항 질서 단속강화 방안 마련·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어로(어망·어구 설치) 행위 근절, 선박통항 위해요소 신속 제거, 항법 준수 유도 등 해상교통질서 유지 강화 - 개항질서 특별 단속기간 중(상·하반기) 불법 어로행위 합동단속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등 지자체, 인천해경과 협업 실시 - 인천어업정보통신국과의 협의채널 구축 및 불법 어로차단 방안 모색 - 순찰선 단속활동 중 식별된 항행 장애물의 적기 제거(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1호(제1항로, 경인항 입·출항로), 해양3호(내항) 및 해양5호(연안 여객선 항로, 제3항로) * 규모가 큰 항행 장애물의 경우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청항선과 출동 제거 실시(연중) *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원발생 및 비상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 해상 부유물에 대한 제거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청항선(3척) 운영을 통해 로프, 페그물 등 적기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구역 : 인천항 항계 내의 해상구역 및 경인항 - 항만과 연안구역의 개별 정화사업을 시행하여 각종 해양쓰레기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중간처분업체 선정 및 단가계약 실시 - 인천항 육상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인천항만공사, 항계 밖의 해양쓰레기는 해당 지자체에서 수거·처리토록 조치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순찰선 운용을 통한 항계 내 질서위반사범 계도·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로행위, 미허가 선박수리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무역항 단속 중점 추진 - 항만순찰선 순찰 강화 등 항내 안전한 해상교통질서 유지 - 해상부유물 등 항행장애물 적기 제거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행안전수역 확보 및 불법어로행위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반 편성 및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기간' 운영(반기별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항행에 지장을 주는 어구·어망의 신속한 제거 및 불법 어로행위 다발해역에 대한 순찰선 운영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어로 합동단속 및 계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봄철 실뱀장어 불법조업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실시 및 가을철 낚시어선(주꾸미 조업) 안전항행 유도 강구 ○ 항행장애물인 방치선박 점검 및 안전조치 강구(분기) ○ 순찰선 운용을 통한 항계 내 질서위반사범 계도·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로행위, 미 허가 선박수리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무역항 단속 중점 추진 및 항만순찰선 순찰 강화 등 항내 안전한 해상 교통질서 유지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어로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 단속기간 설정 및 순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민들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 단속기간 설정 - 항내 불법 어망설치 구역에 대한 정기 순찰 강화 ○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물 하역시설 점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역시설에 대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 점검 - 위험물 하역시설 안전관리 상태 여부 점검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공사 시행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수시로 관리 감독하여 항만 내 선박사고를 예방 ○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항 해상안전 자체 특별단속계획 수립 및 무역항 특별 단속 시행으로(상·하반기) 선박의 통항 안전을 확보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계 내 불법어로행위 단속철저, 항로상 사전예방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순찰선(해청1, 해청호) 일일 순찰 지속실시 - 유관기관 합동 단속 실시(울산해경서, 울산시청, 남구청 등) * 해경서와 불법 어로 행위 단속의 긴밀한 상호협력체제 유지로 기존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불법어로행위 단속정보 공유 ○ 해양부유 및 해안가 쓰레기 수거·처리를 통한 울산본항, 온산항 내 선박안전사고 방지 및 깨끗하고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생포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시행 - 민관·유관기관 합동으로 취약지역(방파제, 바닷가 등) 및 바다속 수중폐기물 정화활동 등 해양환경정화 활동 실시 및 폐기물 수거, 처리 ○ 항만공사 작업선박에 대한 해양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랑주의보 등 기상악화 예측 시 공사용 작업선에 대한 조기 피항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대산청	<p>요청 등 공사현장에서의 선박사고 적극 대비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작업선단 안전관리 방안 수립 여부, 세부적인 피항 계획(위치), 선단별 비상연락망 구축 등 항만공사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강화 <p>○ 대산항 항계 내 불법어로행위 차단을 위한 특별 단속반 편성 및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찰선 한우리호로 선박통항에 지장을 주는 어구·어망의 신속한 제거 및 불법어로 행위 단속 강화 <p>○ 해상에서의 공사작업 및 급유작업 중 사고예방을 위한 작업 안전지침 사전점검 및 현장 안전관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상황별 작업기준,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확인, 작업선박의 최소승무정원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철저 <p>○ 폐어망·페로프 등 해상부유물(해양쓰레기 및 항만폐기물) 발생 시 신속한 처리 및 수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선사, 해경, VTS, 해양환경관리공단 등과 정보 공유 및 협업 <p>○ 대산항 항로 운영 및 준설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산항 해양수리 현상 조사용역비 예산 요구('18~'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심측량, 준설토 입경조사 및 표사이동 관측, 조류관측, 침·퇴적예측 - 대산항 항로준설계획 수립('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로별 소요수심 조사, 준설량 산정 및 투기장 확보계획 수립, 어업피해영향 조사용역 수행, 단계별 준설계획 수립 등 - 항로 준설공사 시행('21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예산확보, 투기장 현황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 시행 * 필요시 어업피해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 실시
경상남도	<p><무역항질서 중점관리 추진></p> <p>○ 지속적인 무역항질서 유지와 관리를 통한 안전한 항만 조성</p> <p>○ 사고 집중 발생 시기별 집중단속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무기(3~6월), 태풍내습기(7~10월), 해빙기(11~2월) - 불법어로행위 및 선박수리 단속, 선박통항위해요소 제거, 항로·항법 준수 등 교통 질서 유지, 위험물 하역 현장 및 장기정박선박 안전관리 강화 <p>○ 4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단속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수·급유선 등 사고다발 안전관리 강화(작업허가, 관제 철저) - 취급부주의로 인한 위험물 사고 예방(교육·점검 지속 추진) - 강력한 행정처벌로 불법어로 행위 근절(해경 협조) - 경남도 항만시설운영세칙 및 속력제한규정 준수 단속 철저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급유업체 자체안전관리 능력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안전관리매뉴얼 작성 및 승인 기준 통일에 따른 일괄 정비 - 위험물 터미널, 급유업체 안전관리자 간담회 추진 ○ 무역항질서 효과 향상을 위한 육상 순찰 강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터미널, 수협부두 등 육상 순찰 강화(월 2회) - 정기 항만 순찰을 통한 사전 예방(주 2회 이상) <p><침몰선·방치폐선 관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 방치폐선 등 장애물 발생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치폐선 발생 예방을 위한 우범지역 현장 실태조사(분기별) - 방치폐선 적기 제거, 발생 대비 100% 제거 추진 - 침몰 방치폐선 특별처리비 지원
부산광역시	<p><조선소 상·하가 작업 중 통항선박의 안전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항 조선소 주변 수리선박 상·하가 중 부근 항행선박의 안전운행을 위한 상·하가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리선박 상·하가 스케줄(Schedule) 수신(매일 오전 10:00) - 상·하가 정보제공 : 상·하가 1시간전(1차), 30분전(2차) - 수리조선소 상·하가 정보제공 절차 <div data-bbox="438 1220 1430 1512">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가 시 주변 운항 선박에 미치는 위험성 안내 - 남항 내 조선소 안전관리자 비상연락망 구축 및 정기적 교류 <p><해상부유물 신속 처리로 선박손상 및 해양사고 예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중 대형부유물 신속한 제거로 항내 해양사고 요인 사전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리선박 상·하가 시 선박받침목 해상유입 방지 현장 지도 - 남항 유입 하천 오물걸림망 설치 - 항내 통항, 계류선박의 쓰레기 해상투기 감시 및 단속 - 물양장 쓰레기 해상유입 방지 정화활동 <p><방치선박 정리지원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치선박의 신속한 제거로 2차 해양오염 예방 및 항내 수역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p>대한 선박의 안전항로 확보</p> <p>○ 방치선박 정리지원 추진</p> <p>- 규모 : 13척/26백만원(국비 13, 시비 6.5, 구비 6.5)</p> <p>* 사하구 3척/6백만원, 강서구 10척/20백만원</p> <p>- 사업량 : 1톤미만 어선(척당 2백만원) 기준으로 산정</p>
울산항만공사	<p>○ 해저장애물 인양 추진</p> <p>- 유관기관 협의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추가 해저 정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양 추진</p>

5-2-3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 고도화

□ 배경 및 필요성

- 진단서 검토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현행 우리부 중심의 검토 체계를 전문기관(KST) 및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전환 필요

□ 추진계획

◆ 전문기관의 역할 확대 등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체계의 전문성 강화

- 진단서 검토의 전문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KST)의 진단장비 확충 및 역할 확대* 검토

* 진단서의 사전 기술검토에 한정된 전문기관(KST)의 역할을 '사전 기술검토 → 심사위원회 개최 → 최종 검토결과 해수부 제시'로 확대

- 우리부선박운용자(도선사 등) 위주의 현행 심사위원회를 항만·조선 등 각계의 진단관련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풀 확대

5-3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e-Navigation) 실현

5-3-1

e-Nav 서비스 핵심기술 개발

□ 배경 및 필요성

- 국제해사기구(IMO)의 e-Navigation* 도입('20년 단계적 시행)에 선제적 대응 및 해양안전 증진을 위해 '한국형 e-Navigation 사업' 추진

* 선박운항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 하여 각종 해양안전정보를 선박과 육상 간 실시간으로 공유·활용하기 위한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 추진계획

◆ IMO의 e-Nav 필수해사정보서비스(MSPs)와 우리나라 해상교통 환경에 특화된 서비스 구현을 위한 e-Nav 핵심기술 개발

- 최적안전항로 지원, 선박모니터링 및 해사안전정보 제공 등 e-Nav 서비스 시제품 시험 및 기능 요구사항 구현('20 서비스 개발 완료)

* 상위설계 개선 워크숍(3월), 서비스 단위/통합시험(9월), 육·해상 통합시험환경 구축(12월)

5-3-2

e-Nav 운영시스템 및 해사디지털 인프라 구축·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해상무선통신 디지털화 및 연근해(최대 100km) 선박 대상 대용량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상무선통신체계 구축
 -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어선 등 연안 소형선박에 전자해도 등 대용량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LTE 기반 통신체계 구축
 - (해상무선통신 디지털) 국제해상조난안전제도(GMDSS) 현대화*에 따른 디지털 초단파(VHF) 통신 시험망 구축
- * 국제해사기구(IMO) 및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국제선박용 통신체계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

□ 추진계획

◆ 한국형 e-Nav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시스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LTE-M)체계 구축(1단계) 및 디지털 해상무선통신망(VHF 등) 상세설계

- 연안 100km이내 해역의 선박에 e-Nav 및 상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LTE-M) 해안기지국 및 운영시스템 구축
 - * 보안성 검토(4월), 조달청 공고(6월), 본사업자 선정(9월), 디지털 해상무선 통신망 기술표준 국제회의 의제 제출(8월)

5-3-3

e-Nav 국제표준화 선도

□ 배경 및 필요성

- 국제해사기구(IMO) e-Navigation 도입('20년 단계적 시행)으로 해상통신 체계가 디지털화 될 경우 관련 산업의 스마트 혁명 촉진 예상
- e-Nav 관련 국제표준화 작업 대응 및 핵심기술 선도를 위한 주요 국제기구 및 지역별 회의에 주도적 참여와 전략적 대응 필요

□ 추진계획

◆ e-Nav 국제표준 선도기술 개발, 표준선점을 위해 관련 국제기구 동향에 선제적 대응 및 국제 거버넌스 체계 구성·운영

- LTE-M, S-Mode 등 e-Nav 관련 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e-Nav 기술 실험역 검증 국제협력 MOU(한국·스웨덴·덴마크, '14.1 체결) 참가국(중국 등) 확대
 - * e-Nav 기술협력 확대 MOU 체결(7월), 실험역 국제공동 Test bed(12월)
- '제2회 아·태 e-Nav 국제 컨퍼런스' 개최('18.6, 서울) 및 IMO-IHO HGDM* 의장 활동지원(10월)
 - * 홍순배 e-Nav 팀장 e-Nav 서비스 교환 표준개발을 위한 IMO·IHO 공동작업반 (HGDM) 의장 선출('17.3월)

5-4

ICT 기반 항행안전정보 제공체계 구축

5-4-1

항로표지 확충 및 맞춤형 특수신호 표지 설치

□ 배경 및 필요성

-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항행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거하기 위한 항로표지 증설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교통 환경 조성

- 세월호 사고이후 여객선항로 등 주요해역 및 사고발생 위험해역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특수신호표지* 설치 의무화('14.11)

* 항로 중요지점(AtoN AIS), 국지 기상정보(해양기상신호), 조류정보(조류신호)

□ 추진계획

◆ 국내 항로여건을 고려한 항로표지의 확충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특수신호표지 구축

- 수중암초, 방파제 등 항행위해요소에 항로표지 설치(20기, 74억원)

* 등표: 9기 56억원, 무인등대 및 방파제등대: 11기 18억원

- 항로표지 기능유지를 위한 노후시설 개량 및 기능강화(217억원)

* 시설물 보수·도장, 안전시설 보강, 장비·용품 개량, 전원시설 개량 등

- 노후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정밀안전진단 및 재배치(36개소, 8.5억원)

* 안전진단 34개소(5.3억원), 항로표지 재배치 조사(인천·평택항, 3.2억원)

- 조류(潮流)가 빠른 해역에 조류신호표지 설치(3기)

- 강조류 해역인 진도 명량수도(11.5kn) 및 장죽수도(7kn)

* 기간/예산액: '15.6~'18.7 / 총 83억원('18년 6.5억원, 시스템 설치 및 운영센터 설치)

- 대형 크루즈 선박의 안전을 위한 부산항(1항로) 조류정보 제공
 - * 기간/예산액: '18.3~'18.9 / 0.5억원(관측용 등부표 및 정보제공시스템 설치)
- 해양기상 관측정보의 관리체계 일원화 및 품질관리(QC) 등을 위한 운영센터 구축(측위정보원)
 - * 기간/예산액: '14.12~'18.2 / 총 22억원('18년 1.5억원, 품질관리 및 운영 S/W개발)
- 기상청과 관측자료 공동활용 등을 위한 간담회 개최(반기 1회)
 - * 전국 연안 주요지점에 해양기상신호표지 84기 설치('07~'16) 운영 중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성항 방파제등대 설치 : '18. 4. ~ '18. 11. ○ 항로표지 영상감시시스템 설치 : '18. 4. ~ '18. 11.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로표지 확충 및 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항갑문남방파제, 각홀도등대 개량공사(6억원) - 민어탄등표, 배동초등표, 울도등대 정밀안전진단(0.5억원) - 인천항 주요항로 항로표지 재배치 연구용역(2.5억원) ○ ICT기반의 항로표지 상태감시, 기상정보 등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 확충 및 성능개선(5억원)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통항 위해요소에 대한 항로표지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로표지 신설을 위한 실시설계(3건, 100백만원) - 항로표지 신설 및 개량을 위한 시설공사(4건, 1,440백만원) - 유도등부표 및 스파부이 인양정비(1건, 150백만원) - 항로표지 유지보수 및 전산 용역(2건, 400백만원) - 항로표지 장비대체 및 확보(1건, 500백만원) ○ 항로표지 운영율의 국제기구 권고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표지 운영효율 극대화를 위한 주기적인 점검·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표지(283기) 2,562회 점검·정비 - 남해권역(여수청, 목포청, 마산청, 제주단) 노후 부표류 적기 교체(147기, 25항차) - 사설항로표지 관리실태 지도·점검(1회, 256기)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로표지 개량 및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사용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철탑 등대 등의 개량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p>을 통해 항로표지 고시 기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풍·해무 등으로 주간표지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에 대한 정비 및 노후 장비 개량 등 항로표지 기능개선 추진 * 후진항방파제등대(개량), 유·무인표지 대수선, 항로표지 장비대체 및 확보 등 ○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 구축(2차) - 항로표지 정보에 대한 실시간 감시·제어가 가능한 관리운영 시스템의 연차적 구축으로 관리·운영 측면의 효율 강화 * 관내 35개소 현장기지국 추가 구축 예정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항행 위해요소에 대한 항로표지 제거 및 철거 후 신축 * 송대여 수중암 제거(380백만원), 갈매여등표 개량(2,000백만원) ○ 항행안전정보를 위한 AtoN AIS 운영, 항로표지 기능강화를 위한 ICT 기반의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 유지보수 및 시설물 보수·보강(도장 및 시설물 보수 등) 실시 *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 운영현황 : 모국 1개소, 자국 126기(AtoN AIS 31기, 집약관리 86기, 기상신호표지 9기) ○ 장기사용으로 인해 노후된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밀점검용역 실시(군산항을호등표 외 5개소)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 간출암 및 소규모 항포구에 항로표지시설 확충 및 개량 - (확충) 등표 1기(소우각서등표), 등대 1기(우도등대) - (개량) 등대 1기(법성포등대) ○ 효율적인 점검정비를 위한 충전실 및 선박직원 대기실 신축 추진 ○ 항해위험요인 해소 및 장비용품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추진 - 등표 2기(수도남방등표 외 1기) ○ 안전한 해양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진단용역(등대 3기) ○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추진(원격·집약·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 ○ 전구식을 LED등명기로 교체하는 등 최신 장비용품 및 예비품 확보 ○ 무인표지 점검정비 및 취약시기별 특별점검(397기) ○ 항로표지 확충 및 개량(진도소) - (신설) 실시설계용역(3기), 동백리동방·예작도서방등표(2기), 회동항·동고항방파제등대(2기) - (개량) 당사도등대무신호기, 복사초등표레이콘 - (정비) 항로표지선 수리, 유·무인표지 대수선, 관리운영시스템 유지보수 등 ○ 특수신호표지시스템 구축('15.~'18.)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해역) 강조류 해역인 명량수도(11.5kn) 및 장죽수도(7.0kn) - (정보제공) 전광판, AIS·ARS·FAX,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으로 통항선박에게 조류 방향·속도를 제공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로표지 확충 및 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행 위해요소에 항로표지를 확충하고 노후된 항로표지시설 개량 및 유지 보수를 통한 안정적인 항로표지 서비스 제공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항로표지시설 구축 ○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 기능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로표지운영 효율 향상 및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이용자 중심의 항로표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격관리장치 추가 설치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제18호 태풍(차바)의 영향으로 인해 파손된 울산항동방파제 상용전원 인입선로(화암추등대~울산항동방파제 구간)의 케이블 복구 ○ 울산항 전면해상에 설치·운영 중인 등부표(스파부이)를 적기에 교체 ○ 노후된 항로표지 기능강화를 위해 유무인표지 대수선, 표지선 수리 등 시행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표, 등대, 등부표 및 레이콘 신설 및 개량 추진 8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 속여등표 외 1기 - (개량) 만리포항 방파제 등대 외 5기

5-4-2

항로표지정보의 전자적 제공체계 마련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선박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로 사고 예방을 위한 해상 안전 정보제공 서비스체계 점검 및 개선 필요
- e-Navigation 서비스('22) 대비, 체계적인 항로표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및 데이터 표준화와 정보제공 일원화 필요
- 국제표준화에 선제적 대응 및 다양한 통신환경에서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국제표준 기술*(S-2XX) 개발 참여하여 선점 필요

* S-201(항로표지정보), S-210(VTS), S-240(DGNSS), S-245~247(eLoran)

□ 추진계획

◆ 항로표지의 신뢰성 확보 및 운영효율 향상을 위한 국제표준 개발 및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 개선 추진

- 이용자 중심의 항행안전정보 제공(1억원)
 - 해로드(海 Road)를 해양안전 포털 앱으로 기능 확대
- 항로표지분야 정보교환을 위한 국제표준(S-200) 개발 추진('17~'19)
 - IALA 회원국과 S-200 표준 공동개발 및 국제협력 강화(1.2억원)
 - * S-201(국제협력 그룹 운영, AtoN WEB 설계 및 프로토타입 개발), S-245~7 (eLoran 적용방안 연구), 해양기상표지정보 정보교환 표준개발 제안 등
- 항로표지정보 수집 기반시설 확대 및 관리체계 일원화(13.5억원)
 - 원격감시시스템 확충, S/W 표준화, 원격단말장치(RTU) 성능 고도화
- 서비스 품질개선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0.5억원)
 - 이용실태 조사, 장비·용품 검사기준 강화, 유관기관간 파트너십 강화 등

5-4-3

해양예보서비스 선진화

□ 배경 및 필요성

- 해상교통량, 국민의 해양활동 증대 등으로 각종 해양사고로부터 위험 노출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예보의 중요성 실감
 - 해양기인성 자연재해(태풍, 해일, 파랑 등)로 인한 연안 피해 및 해양 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상시 해양예보서비스 제공 필요
 - * 상황별(사고, 재해 등) 최적화된 정보 활용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 추진계획

◆ 특화된 해양예보정보 제공으로 해양재해·사고 예방 등을 지원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 제공을 통한 국민친화형 예보 실현

- 전국 주요항만*과 인근해역에 대한 항해안전과 항만활동 안전성 제고를 위한 항계안전 해양정보(관측·예측) 융합 서비스
 - 해무정보에 대한 수요 증가로 해무예측 정보 서비스** 개선·확대
 - * 인천항, 평택항, 대산항, 군산항, 목포항, 광양항, 부산항, 부산신항, 울산항, 포항항
 - ** 인공지능망 학습방법과 인공위성을 활용한 해무탐지 기술 적용
- 해양예보 대중화 및 국민의 해양활동 증진을 위한 방송 편성 확대 및 방송 공유 매체의 지속 협력을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 * 선박운항지수의 항로별(12→16라인), 마리나(3→6개소)
 - ** 연근해 조업활동 지원위한 지역별 도면 확대(3→9개소) 및 태풍 내습 도면 제작
- 해양예보 대중화 및 국민의 해양활동 편의 증진을 위한 해양예보 방송 및 공중파 방송 서비스
 - * (매일) 내일의 바다정보, 바다낚시 지수, 연안항로 해양정보, 해수욕 지수, 바다 갈라짐 정보, (매주) 항행통보, (격주) KHOA NEWS, (수시) 바다속보, 우리 원 소식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울산항만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국민 대상 울산항 맞춤형 해양기상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정보 메일, SMS 등을 통한 기상정보 제공 - 기상전용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울산항 풍향 및 태풍정보 실시간 제공 - 전문예보관을 통한 울산항 특화 기상예보 제공 ○ 실시간 해수유동 관측시스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유동 관측시스템 유지 보수 및 관측정보 사전공개 - 해수유동 빅데이터 분석

5-5

수요자 중심의 차세대 전자해도 개발

5-5-1

차세대 수로정보 서비스 표준화

□ 배경 및 필요성

- 국제수로기구(IHO)는 항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양활동에 활용이 가능한 범용수로정보 표준(S-100 표준)을 개발 중('05년~)
 - 전자해도, 조석, 조류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서비스하기 위해 S-100 표준 기반의 다양한 제품 표준(S-10X) 개발
 - 새로운 S-100 국제표준 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수로정보 관련 국제 기술 선점 및 서비스 체계 구축필요
- * IHO는 한국, 미국, 영국을 차세대 수로정보 표준시험 운영국으로 지정('13.11월)

□ 추진계획

◆ 차세대 수로정보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기술 개발, 실선 테스트 및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 표준화 주도

- 국제수로기구(IHO) 표준화 기술 개발 및 국제협력 연구
 - * S-100 레지스트리 시범운영, S-100 상호운용성 검증 등
- S-10X 수로정보 표준 개발 및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시범테스트
 - * 국내의 S-100기반 표준뿐만 아니라 IHO 등 국제표준 개발 및 변경 시에도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
- 전자해도, 실시간 조석, 해양예측 정보 등 차세대 수로정보 시범 제작

5-5-2

수요자 맞춤형 해도제작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레저, 관광 등 연안해역을 통항하는 소형선, 여객선의 증가에 따라 해상사고 발생 위험성 해소를 위한 정밀 수로정보 확보필요
 - 유조선 충돌, 여객선 전복 등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색구조, 방제 등을 위해 최신정보 유지 필요
- * '17년까지 연안해역 32천km²에 대해 87% (27.8천km²) 정밀 해저지형 조사 완료
- ** 무역항(31개 항), 연안항(29개 항) 총 60개 항에 대한 주기적 조사 실시
- 수요자가 필요로하는 다양한 해양관련 정보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부족

□ 추진계획

◆ 연안해역에 대한 지속적인 수로조사 및 주요항만에 대한 정밀 수로측량 실시로 해역별, 선종별 맞춤형 해도정보 제공

- 항해위험물(침선, 암초, 해저장애물 등) 파악 및 해저지형 변화 모니터링을 위해 연안·항만해역에 대한 정밀 수로측량 시행
 - 선박의 좌초사고, 신규항로 개설 등 긴급한 수요발생 시 선박의 안전운항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수로측량 실시
 - 해저지형·해저면 영상탐사기술을 이용한 3차원 해저영상물 제작
- 수요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실시
 - 최신 수로조사 성과를 이용한 신·개정판 해도제작 및 보급으로 안전 항해 지원
 - 국가·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전자해도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행정용 전자해도 서비스
 - 해상·해저의 장애물, 해상사격훈련, 항로표지 변동 등 해양안전 관련정보(해도, 수로서지, 항행통보, 항행정보 등) 지속 제공

5-5-3

소형선박 안전조업 유도를 위한 전자해도 제작·보급

□ 배경 및 필요성

- 소형선박이 주로 통항하는 연안해역의 정밀한 전자해도 미비로 해상사고 발생 위험성 증가
 - 기존의 해도는 연안해역의 자세한 정보가 미흡하여 어선 등 소형선박의 조업에 필요한 정보제공 기능강화 필요

□ 추진계획

◆ 연안해역의 정밀한 정보를 반영한 대축척 전자해도 보강 및 어민의 안전항해에 필요한 필수정보 제공으로 어선안전조업 유도

- 대형선박용 전자해도와 별도로 소형선박이 주로 항해하는 연안해역의 전자해도 제작 및 서비스
 - 연안해역의 정밀수로조사 성과를 이용한 정밀 전자해도 제작으로 어민의 조업활동 및 항해안전 지원
- 소형단말기(ECS)에서 활용 가능한 정밀한 전자해도 제작·보급

5-6

어선안전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5-6-1

어업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 배경 및 필요성

- 무선통신장치(VHF-DSC) 설치의무 대상이 확대(5톤→2톤)되고, 연근해 어선 어획실적 보고업무 이관(지자체→어통국)으로 수협(어업정보통신국) 업무량 급증

* 통신국 가입어선 관리 : '15년 11,000척 → '18년 20,000척 → '20년이후 25,000척

** 연근해 어획실적 관리 : '15년 11,000척 → '16년이후 45,000척

□ 추진계획

◆ 통화량이 급증하는 완도·보령·고흥지역에 어업정보통신국 신설('18~'19), 노후화된 안전조업시스템 고도화('19~) 등으로 안정적 통신 인프라 확충 추진

- (어업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통화량이 급증하고 있는 완도·보령 지역에 어업정보통신국을 신설(16국→19국)하고, 통신이 원활치 못한 음영구역에 VHF-DSC 중계소 추가 구축

* 완도어업정보통신국 개국('18.下), 보령어업정보통신국 개국('18.上), 고흥어업정보통신국 개국('19.上)

- (안전조업시스템 고도화) 노후화된 어선안전조업시스템 기능 고도화로 연근해어선의 안전관리 체계화

- 연차별 투자계획 : ('18)3,418백만 → ('19)2,041백만 → ('20)1,870백만

*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용역완료('17.5~11월)

5-6-2

어업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지도선 확충

□ 배경 및 필요성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해 한·중 공동협력, 단속 및 처벌 강화, 외교적 노력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불법 어업은 여전히 성행
 - 불법어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어업인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중국어선 불법어업 지도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지도선 확충 필요

□ 추진계획

◆ 국내·외 어선세력 및 불법어업 동향, 광범한위 수역, 어업관리 공백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8개 해역관리에 필요한 1,500톤급 지도선 4척 추가 확충

-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근절, 동·서해 특정해역집중관리, 중국어선 세력이 급팽창하는 제주 서남부해역 등 원해역 집중관리를 위하여 어업지도선 4척(1,500톤급) 신규 투입('18.10) 및 단속정 승·하강장치 등 보강, 불법조업 단속인력(88명) 확충

* (현행) 34척 → (확충) 40척(1,500톤급 '18년 4척 준공 및 '19년 2척 준공 예정)

6. 해사안전산업 글로벌 선도국가 입지 구축

□ 현존선 BWMS 설치기한 유예를 기회로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선점 및 국내해운사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 핵심부품의 국산화 기술개발, 해외 마케팅, 형식승인 절차 제도 정비 등

□ 친환경선박 등 환경규제 관련 법 제정으로 친환경 선박 건조 지원을 위한 제도기반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술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관련 부처 협의('18.1~) 후 입법 추진('18년 下)

□ 2020년 IMO 회원국감사(IMSAS) 대비 제도개선, 인력보강 등 감사의 성공적 수감을 위하여 철저히 대비 하겠습니다.

* 「해사안전법」 개정을 통한 근거규정 마련, IMSAS 감사 대응인력 확보 등

□ IMO 현지대응체제 강화, 산·학·연·관 협업을 통한 체계적 대응 체계 구축으로 IMO A그룹 이사국 10연임을 달성하겠습니다.

* 해사안전연구소 설립('18.상), A그룹 이사국 10연임 추진('19.12)

□ 국제해사분야 주요이슈에 대한 국제공조 활동으로 양·다자 회의 및 정책·산업·학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양·다자회의 개최(연중), 한국해사주간 개최('18.6), 국제저널 발간('18.하)

□ 韓-IALA(국제항로표지협회) 간 협력 및 개도국 대상 항로표지 유·무상 협력사업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제고를 도모하겠습니다.

* 제19차 IALA 컨퍼런스 성공적 개최('18.5) 및 후속사업 개발 등

6-1

해사안전산업의 세계시장 주도역량 강화

6-1-1

선박평형수 세계시장 점유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발효('17.9.8)되었으나 현존선에 대한 BWMS 설치 기한의 유예로 신규 발주가 급감
 - 국제 규범과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현 위기를 기회로 극복할 수 있도록 개발사의 역량 강화 지원

□ 추진계획

- (기술개발) 핵심부품의 국산화* 기술개발 및 글로벌 서비스망 구축으로 국내 제품의 경쟁력 강화
 - * 센서류, 오존발생기, 밸브, 유량계 등('18~'21년, 65억)
 - 우리나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신속한 미국 형식승인 획득을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을 USCG IL* 추가지정 지원(계속)
 - * 미국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독립시험기관(미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 한국(한국선급) 5개 기관 지정)
- (마케팅) 해외 선주초청 국제포럼 개최('18.6), 국내기술의 IMO 기술표준화 및 개도국 기술협력 등을 통한 국제협력 추진
 - * IMO에 국제 표준을 위한 제안을 통해 Global Standard 선도, 각국의 관련 공무원이 참석하는 국제세미나를 개최, 우호세력 확보
- (제도 정비 등) IMO 新 식승인 기준 도입 및 국내 형식승인 절차의 간소화 등 제도 정비 추진
 - 안정적 수주를 위한 해운사-개발사간 민간상생협의체 운영(계속)
 - * 구성 : 선주협회, 해운사, 한국선박평형수협회, 개발사, 시험기관, 선박검사기관

6-1-2

선박 대기오염 규제강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국제 선박 대기오염(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온실가스 등) 규제 강화를 아국 조선·해운 산업 재도약 기회로 삼기 위한 적극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 규제 이행을 위한 대응 체계 구축 및 핵심기술 개발·산업화 지원

□ 추진계획

◆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등의 국제기준강화에 따른 기술 개발(R&D), 제도적 대응체계 사전 확보

- IMO 국제 대기환경 규제 이행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산업화 지원*
 - * IMO 선박 국제 규제 선도 기술개발 사업 (총 사업비 290억원, '18년~'21년)
 - (황산화물) 배기가스 탈황장치 기술실증·상용화 및 연료유 품질 검증 시스템 구축 (총사업비 100억원, '18년 15억원)
 - (전기추진선박) 중소형 선박 규모(500톤 이하)에 적용 가능한 LNG 기반 전기추진 시스템 개발 (총사업비 45억원, '18년 8억원)
 - (미세먼지 저감장치) 소형/중·대형 선박용 미세먼지 저감장치 개발 및 해상실증 추진 (총사업비 10억원, '18년 2억원)
-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행체계 및 국제규제 대응기반 마련
 - IMO DCS* 대응 표준 연계시스템 구축 및 온실가스 감축관리를 위한 '선박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DB)' 구축(~'18년下)
 - * 선박 연료소모량 데이터수집시스템 : 5천톤 이상의 국제항해 종사선박 강제화('19~)
 -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미세먼지 등) 관리 기능 추가를 위한 '선박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작업 추진('18년~)

6-1-3

친환경선박 등 환경규제의 산업화 기반조성

□ 배경 및 필요성

- 국제해사기구(IMO), 미국, EU, UN 등의 환경규제 강화추세에 따라
고효율, 환경친화적 선박의 수요증가가 예상되나,
 - 해운경기의 불황지속에 따른 신규투자 위축, 선박 노후화 등으로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한 국내여건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실정
- * 온실가스(CO₂) 30% 감축을 위해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규제 강화('23년)

□ 추진계획

◆ 관련 법 제정을 통한 제도기반 및 해양신산업 육성·지원 방안 마련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술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으로 친환경 선박 건조지원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18.1~)
- * (주요내용) 기본계획(매5년)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보급 정책협의회 설치,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추진,
친환경선박 구매자에게 자금 등 지원 등
- 관련부처 협의('18.1~) 후 입법추진('18년下)

6-2

해사안전분야 국제협약 대응능력 강화

6-2-1

2020년 IMO 회원국감사(IMSAS)의 성공적 수감

□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국제해사기구(국제협약 당사국의 의무사항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16년부터 IMO회원국감사제도(IMSAS)를 강제화
- (필요성) IMO는 매년 25개국씩 전회원국을 7년 주기로 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우리나라는 2020년 수감 예정
- 해사안전관리 미흡국가 판정시, 우리선박 용선기피, 보험료 상승, 항만국통제 강화 등 경제적 손실 우려와 IMO A그룹 이사국 지위손상 등 해사분야의 선도국 역할 수행 곤란

* (감사항목)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법령체계, 국가책무 이행을 위한 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실태, 업무절차, 민간대행기관 감독실태 등

□ 추진계획

◆ 2020년 우리나라 첫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여 제도적, 인적 및 시스템적 보완추진

- (제도정비) 회원국감사에 대비하여 감사대응 및 연차점검 계획 수립 근거 마련을 위해 「해사안전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 (인력확보) IMSAS 감사수감계획 수립, 범부처·부내 협력 및 정책 조정, 제도개선 연구 등 감사 대응업무 수행 인력 확보(5급 1명, 6급 1명)
- (거버넌스) 회원국감사에 대비한 전략개발 및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감사관 및 심사관 양성, 범부처 협의체 구축
- (ISO9001 고도화) 해양안전 품질경영시스템 개정판 인증 전환(버전 2008→2015) 추진

6-2-2

국제해사협약 제·개정에 체계적 대응

□ 배경 및 필요성

- 국제해사협약의 지속적인 제·개정에 따른 대응전략 필요
 - IMO는 조선·해운 관련 해사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양사고 피해 보상 등과 관련된 국제협약을 지속적으로 제·개정 중
 - 국제협약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효율적인 전파 필요

□ 추진계획

◆ 국제해사협약 제·개정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전파를 통한 대응방안 및 수용여부 검토 추진

- IMO 협약 대응방안 및 미가입 협약 수용여부 검토
 - 난파물 제거(WRC) 협약 발효('15.4) 및 EU의 유해물질해상운송(HNS) 협약 가입 촉구 결의서 채택('17.4) 등에 따른 협약 가입검토 추진
- 국제협약 제·개정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효율적인 전파 추진
 - IMO 회의별 전문기관·전문가 지정 및 국제해사협의회(산·학·연·관 공동, 연 2회 이상) 개최를 통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대응전략 수립
 - IMO 협약 및 회의자료의 전산 시스템 관리(IMO KOREA) 및 국제해사동향 발표회 개최(하반기)를 통한 최신정보 전파

6-2-3

IMO 장기전략계획 대응 및 국제표준화 주도

□ 배경 및 필요성

- IMO '18~'23년 新전략계획 수립에 대응한 산·학·연·관 협업 대응 체계 마련 필요
 - UN은 국제사회의 공동목표로 '16~'30년 지속개발계획(SDGs*)을 수립 하였으며, IMO는 '18~23년 新전략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서 채택('17.12)
 -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 과제, 169개 세부목표
 - ** 협약이행, 규정작업 통합, 기후변화대응, 오션거버넌스, 기반확충과 보안강화, 규정 효과성, 조직의 효율성 등 7개 전략방향 설정

□ 추진계획

◆ 산·학·연·관 협업을 통한 IMO 장기전략계획 분석, 대응전략 수립을 통한 국제표준화 주도

- IMO 新전략계획에 따른 아국 대응전략 개발 및 활동계획 수립
 - IMO 新전략계획*(Res.A.1110(30)), 적용지침(Res.A.1111(30)) 및 新·舊 전략 계획 비교·분석을 통한 아국의 단·중·장기 대응전략 및 활동계획 수립
 - * 목표·전망선언, 전략계획을 위한 주요 원칙, 전략방향, 성과지표, 작업과제 등
 - 新전략계획 분석을 통한 장·단기 현안을 도출하고, 조선·해운산업 활성화 등 국익 창출이 가능한 전략의제 개발 등 추진

6-3

해사안전 글로벌 선도역량 제고

6-3-1

국제해사 대응체계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대응체계 강화) 아국은 선진국 주도의 해운·조선기술 기준을 빠르게 수용·대응해왔으나 국제기준을 주도하는 역량은 크게 미흡
 - IMO 협약 제·개정은 산·학·연·관의 전문적이고 긴밀한 협업이 절실하므로 정부와 민간, 본부와 런던현지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필요
 - (IMO 기술협력) IMO A그룹 이사국 진출('01.11) 관련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IMO와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03.6)
 - 세계해사대학 장학사업, 개도국의 협약이행 지원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세미나, 워크숍 등) 등 지원
- * IMO 제안사업과 우리부 발굴사업 중에서 당해년도 사업 결정

□ 추진계획

◆ IMO 회의 전략적 대응, 정책기반 마련을 통한 IMO 대응체계 강화 및 회원국 동반성장을 위한 개발도상국 대상 협약이행 지원 강화

- (대응체계 강화) IMO 회의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및 정책제안 기반 마련
 - IMO 현지대응 및 국제표준 주도역량 강화를 위해 주영대사관에 IMO 전담직원* 파견 추진(연중)
- * IMO 연락관 근무처를 대사관으로 변경 등
- (재)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KMC)에 해사안전연구소*의 신설·운영 지원을 통한 IMO 협업대응 체계 본격가동
- * KMC내에 상근 연구인력(4명)을 채용하여 운영('18.2월)

- (기술협력) IMO 회원국 감사제도 강제화에 따라, IMO 협약의 효율적인 이행지원을 위해 저개발국 및 군소도서국가 우선 지원
 - 수원국의 예측가능한 교육 및 훈련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정기적이고 연속적인 인적역량 개발사업 발굴 및 지원
 - IMO에 연 평균 미화 50만달러의 기술협력 자금 제공
- * 우리나라 기술협력기금은 '17년까지 약 750만 달러, 101개 사업 추진

6-3-2

IMO 대응 전문인력 양성

□ 배경 및 필요성

- 국제해사 분야 전문가 역량 제고 및 미래 전문가 양성 필요
 - 기관별 IMO 회의 담당자의 빈번한 교체 등으로 인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 곤란
 - 국제해사 분야 및 국제기구 진출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도 제고 및 창의적인 시각에서의 의제개발 등 필요

□ 추진계획

◆ IMO 분야별 전문가 발굴, 역량제고 및 국제해사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추진

- IMO 회의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전문가 발굴 및 역량제고 추진
 - 회의별 대응 전문성·지속성 확보를 위한 회의별 전문가 및 전문기관 지정·운영 및 지원(연중)
 - 국제회의 전문가의 역량을 제고*하고, 국제해사정책 수립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국제해사협의회 정례개최 추진(연 2회 이상)
- * IMO 회의 대응방안(IMO 회의절차, 전략계획, 문서작성 방법 등) 교육 병행
- 국제기구 진출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제고 및 미래 해사산업을 주도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제4회 모의 IMO 총회 개최
 - IMO 관련주제 전반에 대한 대학생 시각에서의 창의적인 의제개발 및 영어 발표('18.8월 예선, 9월 본선)

6-3-3

해양안전 학술 및 교육협력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학술역량 강화) e-Nav 등 IMO의 주요 의제는 선행적으로 학계·연구소에서 논의가 전개되고 회원국의 공감대 형성이후 상정
- 해사 안전·환경에 관한 세계적 석학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저널 발간 및 학술포럼 개최를 통한 향후 IMO 의제 파악, 대응 가능

□ 추진계획

◆ 해사안전·환경 관련 학술역량 강화 추진

- 해사안전·환경 관련 학술역량 강화
 - IMO 주요현안, 미래의제 등을 다루는 국제 학술지(SEAS*) 발간 추진('18년 2회)
 - * Journal of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Environmental Affairs and Shipping
 - 중·장기적인 IMO 의제 파악·대응을 위한 국제해사분야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018 한국해사주간 개최 추진('18.6)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울산항만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제2회 울산항 위험물 안전 및 해양오염 국제컨퍼런스 개최(12월 예정) - IMO, OCIMF, ITOPF 등 국제 단체 관계자 초청 - 국제 해사안전 및 해양오염 정책 교육 - OCIMF 소개 및 MOU 체결 * OCIMF : 전 세계 원유 및 화학을 취급하는 선사 및 터미널 화주 등 112개의 멤버를 구성하여 선박검사 및 터미널에 대한 안전 가이드를 논의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포럼

6-4

다각적 국제협력 추진으로 국제사회 입지 강화

6-4-1

해적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全 세계적으로 해상안전을 위협하는 해적행위 지속 발생**
 - * '13년(264건) → '14년(245건) → '15년(246건) → '16년(191건) → '17년(180건)
 - ** 해적행위로부터 선원·선박의 안전 확보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국제 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17.12.28 시행)
- **소말리아 해적위험해역 인근 연안국 및 연합해군과의 협력, 말라카·아시아지역 해적행위 퇴치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필요성*** 증대
 - * '16.3월 ~ '17.3월 기간중 Sulu-Celebes Sea 및 Sabah주 동부 해역에서는 총 22건의 해적공격사고가 발생, 58명의 선원이 납치됨

□ 추진계획

◆ 국제 연합함대 활동 지속 참여,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와의 해적 대응 국제적 공조·협력체계 강화

- **국제 연합함대 활동 지속 및 선제적 해적대응을 위한 정보력 강화**
 - 소말리아 해역*에서 연합함대 해상안보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청해부대('09.3~) 활동 지속 유지를 통한 국적선박의 안정적 운항 지원
 - * 유럽-아시아를 잇는 수에즈 운하, 중동 원유 수입 등 국가 전략물자수송로
 - 국제상공회의소(해적정보센터) 및 아시아지역 해적정보공유센터와 긴밀한 정보공유·전파를 통해, 국적선박·선원의 해적피해 사전예방 조치*
 - *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위험해역 통항보고, 보안경보장치 테스트, 해적정보 제공 등
- **유관 국제기구를 통한 해적대응 및 국제협력 공고화**

- UN(CGPCS*) 및 국제해사기구(IMO) 등 해적관련 국제회의 적극 참여·여론 주도를 통해 국가 해운산업 보호 및 국익 제고

*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Contact Group on Piracy off the Coast of Somalia)

6-4-2

양자간 국제협력활동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IMO 선도국 및 우리선박이 주로 기항하는 국가와 해사안전정책 및 인적자원 교류를 통해 상호이익 증진 및 해양산업의 국익창출 도모
- IMO의 새로운 규제 등 국제해사분야 주요이슈에 대한 공동대응과 협력활동을 통해 IMO 회원국의 동반성장에 기여

□ 추진계획

◆ 주요 해사국가와 양자협력 및 아태지역 국가간 다자회의를 통해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국제 포럼 개최를 통한 해사분야 주요 현안 논의

《 양자 회의 》

- (중국, 일본) 다양한 해사안전정책 공유 및 인적교류를 통한 양국간 운항선박 안전관리 강화 및 해사안전 정책·제도 이해 증진
 - (호주, 싱가포르) 관리자급 교환근무 추진(호) 및 항만국통제관 상호파견, 아시아해적방지협정(싱)을 통해 공조체계 강화
 - (베트남, 필리핀) 2차 양자회의를 통한 해사안전분야 협력관계 공고화, 해사안전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한 동반성장 및 아국 해사산업 국익창출
- * (비정례회의) EU, 러시아, 미국과 양자회의는 희망의제 파악 후 개최여부 결정

《 다자회의 및 국제포럼 》

- (APHoMSA) IMO 新규제 협약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가별 정책 방향 공유 및 기술협력을 통해 국내 해사산업 육성 기회로 활용
- * 아·태 해사안전기관장회의(APHoMSA) : Asia-Pacific Heads of Maritime Safety Agencies
- (국제 포럼) 국내외 전문가와 주요 석학들이 참여하는 한국해사주간*을 개최하여 새로운 선박환경 규제 등 해사분야 주요현안 논의
- * 개별 행사(국제해사포럼, 해사산업포럼 등)를 연계하여 매년 6월 마지막 주에 고정적으로 개최

□ 배경 및 필요성

- 항로표지분야 최대 국제행사인 제19차 IALA 컨퍼런스('18.5)의 성공적 개최로 국제협력 강화 및 기술 공유 등 화합의 장 마련
- 개도국 항로표지개발 지원을 위한 유·무상 협력사업 및 IALA WWA를 통한 항로표지공무원 초청 교육 추진

□ 추진계획

◆ 제19차 IALA 컨퍼런스 개최 및 韓-IALA(국제항로표지협회) 간 항로표지협력을 통한 개도국 대상 항로표지 유·무상 사업 추진

- 2018 제19차 IALA 컨퍼런스 성공개최로 국제협력 강화
 -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국내외 홍보('18.1~), 국제기구 등 주요인사 (IMO, IHO) 초청('18.3), 제19차 IALA 컨퍼런스 개최('18.5)
 - * 세계등대유물전시회, 산업전시회인천선언, 기념등대 준공, 항로표지선 초청 등
 - 국제기구와 개도국 항로표지개발 공동 컨설팅, 항로표지 기술 현지 시범사업 등 국제기구와 협력 및 교류활성화를 위한 IALA 컨퍼런스 후속사업 개발
- 인도네시아 항로표지시설 설치 타당성조사용역 완료('17.3) 후 EDCF (경제개발협력기금)을 활용한 본 사업 형성 적극 지원('18.1~)
- 개도국 공무원 초청 IALA 국제항로표지교육기관(WWA) 인증 '항로표지고위정책과정(Level1+)' 교육 실시('18.5)
 - * (기간/대상/기관) '18.5.(1주) / 아시아·태평양권역 공무원 10명 / 항로표지기술협회

< 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인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제19차 IALA 컨퍼런스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2018.5.27. ~ 6.2 - 장소 : 인천 컨벤시아 - 참석 : 83개 회원국 400여명 참석 - 내용 : 66, 67차 이사회 및 항로표지 논문발표, 산업전시회 개최

6-4-4

해양사고 조사 국제협력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국제적으로 대형해양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명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조사에 대한 국제적 이목 집중
- 이에 중대 해양사고 발생 시 관련국과의 원활한 공조를 통한 신속한 사고조사 수행을 위해 국제적 협력증진 강화·확대 필요

□ 추진계획

- ◆ 중대 해양사고에 대한 특별조사 강화
- ◆ 해양사고조사 관련 국제회의에서의 주도적 역할 수행
- ◆ 新 조사기법 공유 및 글로벌 조사협력 네트워크 확대 등

- (협력강화) 중대 해양사고에 대한 특별조사 강화
 - 국내외 발생 아국 선박·선원과 관련된 중대 해양사고에 대해 특별 조사부 구성·운영을 증대*하여 신속한 사고조사 및 국제공조 강화
- * '18년 증원되는 인력(2명)은 중대해양사고 특별조사업무에 전담하여 정밀조사 수행
- (국제회의) 해양사고조사 관련 국제회의에서의 주도적 역할 수행
 - IMO 회의 등에서 해양사고조사 관련 최근 논점사항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중장기 검토 가능한 의제(사고 분석·전파 등) 개발·제출
 -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간 조사협력 증진을 위해 제21차 아시아 해양사고조사관 회의(MAIFA) 개최
- (워크숍개최) 新 조사기법 공유 및 글로벌 조사협력 네트워크 확대
 - 다양한 해외 해양사고조사국(관)을 초청하여 조사기법 공유, 사례 발표·토론 등을 통해 조사관 역량 강화 및 글로벌 협력기반 마련
- (교류강화) 호주교통안전국(ATSB) 교육과정 참여, 한·중 조사관 교환 근무 및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간 우호관계 증진

V

투 자 계 획

□ '18년 해사안전시행계획 투자소요는 3,591억원

- 안전문화 확산, 종사자 의식개선·교육 등 해양사고 예방활동의 지속적 시행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노력 필요

□ 전략 5 “ICT기반 첨단 해상교통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전체예산의 61.5% 소요

- “전략 1” 선박안전 신뢰성 제고 및 맞춤형 안전관리 : 469억원
- “전략 2” 자율적 안전관리 기반확대 및 해사안전관리체계 고도화 : 193억원
- “전략 3” 범바다 안전의식의 획기적 전환 유도 : 148억원
- “전략 4” 해상 종사자 역량제고와 고품질 복지 제공 : 468억원
- “전략 5” ICT기반 첨단 해상교통 안전관리 체계 구축 : 2,207억원
- “전략 6” 해사안전산업 글로벌 선도국가 입지 구축 : 106억원

【 과제 별, 기관 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구분	추진 과제 1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 3	추진 과제 4	추진 과제 5	추진 과제 6	합계
전략 1	-	1,140	-	187	38,588	7,000	46,915
전략 2	859	19	13,599	244	3,940	500	19,332
전략 3	1,050	13,463	280	-	-	-	14,793
전략 4	-	340	5,510	40,923	-	-	46,773
전략 5	175	8,389	28,830	35,466	13,100	134,745	220,705
전략 6	4,100	440	675	1,955	-	-	10,606

붙임

과제별 소요예산

□ (전략 1) 선박안전 신뢰성 제고 및 맞춤형 안전관리

(단위: 백만원)

과제명	소요예산
합계	46,915
1-1. 현장중심의 선종별 취약요인 집중안전관리 추진	—
1-1-1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 강화	—
1-1-2 노후선 안전관리 강화	—
1-1-3 선박안전관리 통합운영체계 구축	—
1-2. 어선 안전관리체계 고도화	1,140
1-2-1 어선안전관리 제도개선	—
1-2-2 어선 안전설비·장비 지원	1,140
1-2-3 원양어선 안전관리 강화	—
1-3. 선박검사제도 신뢰도 제고	—
1-3-1 선박검사제도 선진화	—
1-3-2 선박용 물건 형식승인제도 선진화	—
1-3-3 선박검사 인력·장비 확충	—
1-4. 위험물 운송 안전관리 이행력 강화	187
1-4-1 위험화물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178
1-4-2 위험물 운반선 안전성 제고	9
1-4-3 위험물 하역시설 안전성 강화	—
1-5. 선박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	38,588
1-5-1 선박안전성 확보 및 신조선 건조지원 확대	38,588
1-5-2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
1-5-3 페어망·로프 감김사고 예방 대책 추진	—
1-6. 선박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 확대	7,000
1-6-1 선박 안전성 확보기술 개발	2,800
1-6-2 국내 어선의 최적화 표준선형 개발	4,200
1-6-3 선박설비 및 기타 안전분야 기술개발	—
1-6-4 차세대 자율운항선박 설계 및 운항기준 마련	—

□ (전략 2) 자율적 안전관리 기반확대 및 해사안전관리체계 고도화

(단위: 백만원)

과제명	소요예산
합계	19,332
2-1. 정부의 안전관리제도 기반·역량 고도화	859
2-1-1 해양안전 관계기관 협력기반 강화	-
2-1-2 해사안전감독관 안전관리 고도화 추진	619
2-1-3 중대해양사고 발생선박 안전관리 강화	-
2-1-4 해양사고 통계 개선	240
2-2. 선사의 안전관리 능력제고로 자발적인 안전관리체계 정립	190
2-2-1 안전관리체제 이행 선진화	40
2-2-2 해양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강화	150
2-2-3 선사의 안전관리능력 제고 지원	-
2-3.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업 분야 재난관리체계 구축	13,599
2-3-1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역량 강화	2,566
2-3-2 해양사고 발생대비 상황관리체계 강화	3,073
2-3-3 항만 및 선박보안관리 체계 공고화	7,960
2-4. 외국선박 및 국적 외항선 관리 강화	244
2-4-1 안전관리 부실 외국적선박 항만국통제 강화	244
2-4-2 국적선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관리 우수국가 지위 유지	-
2-4-3 국적선사의 안정적 해운활동 지원 등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2-5.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지속적 추진	3,940
2-5-1 연안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강화	-
2-5-2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
2-5-3 연안 해상교통 노후 인프라 개선	3,940
2-6. 비제도권 선박·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500
2-6-1 시운전 선박 안전관리 강화	-
2-6-2 해상펜션·수상가옥 안전관리 강화	-
2-6-3 항내운항 소형선박 및 관공선 안전관리 강화	-
2-6-4 마리나업 운항선박 안전관리 강화	500
2-6-5 수면비행선박(위그선) 상용화 기반 마련	-

□ (전략 3) 범바다 안전의식의 획기적 전환 유도

(단위: 백만원)

과제명		소요예산
합계		14,793
3-1. 해양안전 홍보·캠페인 지속시행		1,050
3-1-1	해양안전문화 확산	350
3-1-2	해양안전 교육 확대	500
3-1-3	대국민 해양 친숙화를 위한 홍보 강화	200
3-2. 체험형·맞춤형 해사안전 교육 확대		13,463
3-2-1	지역별 체험공간 마련	13,463
3-2-2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체험확산	-
3-3. 체험중심의 고품질 해양안전 지식 보급		280
3-3-1	해사안전 지식전파 및 보급	180
3-3-2	해사안전 평생교육 기반마련	100
3-4. 해양안전문화 확산 기반 조성		-
3-4-1	민간주도의 해양안전문화 확산기반 마련	-
3-4-2	부처간 통일된 안전정책 확산체계 구축	-

□ (전략 4) 해상 종사자 역량제고와 고품질 복지 제공

(단위: 백만원)

과제명	소요예산
합계	46,773
4-1. 해사안전관리 주체별 맞춤형 안전교육 체계 정립	—
4-1-1. 종사자 안전교육 실효성 확보	—
4-1-2. 취약선종 맞춤형 교육체계 확립	—
4-1-3. 최고경영자, 안전관리책임자 등 교육 강화	—
4-2. 어선종사자 안전관리 역량제고 및 인력관리체계 개선	340
4-2-1 어선원 안전교육 개선	340
4-2-2 외국인 어선원 안전교육 강화	—
4-2-3 외국인 선원 직무환경 및 수급관리 체계 개선	—
4-3. 고품질 선원복지 서비스로 선원직 매력 회복	5,510
4-3-1 내항선 근무여건 개선	—
4-3-2 선원복지 정책 마련	5,510
4-3-3 국제 선원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체계 확보	—
4-4. 우수해기사 및 관련 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	40,923
4-4-1 우수 해기사 양성기반 강화	40,923
4-4-2 해사 전문인력 양성체계 확립	—
4-4-3 지속가능한 선원수급기반 마련	—
4-5. 중소형 선박 인적오류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제도 개선	—
4-5-1 요트운항에 필요한 승무기준 검토	—
4-5-2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

□ (전략 5) ICT기반 첨단 해상교통 안전관리 체계 구축

(단위: 백만원)

과제명	소요예산
합계	220,705
5-1. 해역별 맞춤형 안전관리 및 항행안전 서비스 제공	175
5-1-1 해상교통 밀집해역 안전관리 개선	-
5-1-2 항로 안전하이웨이 기반 구축	175
5-1-3 이용자 중심 항만시설 개발 운영	-
5-2. 주요 선박통항로 안전관리 신뢰성 제고	8,389
5-2-1 위험물 취급항만 통항로 안전성 평가 및 개선	361
5-2-2 선박통항 항로·수역 안전확보	8,028
5-2-3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 고도화	-
5-3.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e-Navigation) 실현	28,830
5-3-1 e-Nav 서비스 핵심기술 개발	7,575
5-3-2 e-Nav 운영시스템 및 해사디지털 인프라 구축·운영	16,930
5-3-3 e-Nav 국제표준화 선도	4,325
5-4. ICT 기반 항행안전정보 제공체계 구축	35,466
5-4-1 항로표지 확충 및 항법시스템 고도화	30,100
5-4-2 항로표지정보의 전자적 제공체계 마련	1,620
5-4-3 해양예보서비스 선진화	3,746
5-5. 수요자 중심의 차세대 전자해도 개발	13,100
5-5-1 차세대 수로정보 서비스 표준화	1,000
5-5-2 수요자 맞춤형 해도제작	9,550
5-5-3 소형선박 안전조업 유도를 위한 전자해도 제작·보급	2,550
5-6. 어선안전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134,745
5-6-1 어업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16,879
5-6-2 어업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지도선 확충	117,866

□ (전략 6) 해사안전산업 글로벌 선도국가 입지 구축

(단위: 백만원)

과제명	소요예산
합계	10,606
6-1. 해사안전산업의 세계시장 주도역량 강화	4,100
6-1-1 선박평형수 세계시장 점유 확대	750
6-1-2 선박 대기오염 규제강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3,350
6-1-3 친환경선박 등 환경규제의 산업화 기반조성	
6-2. 해사안전분야 국제협약 대응능력 강화	440
6-2-1 2020년 IMO 회원국감사(IMSAS)의 성공적 수감	100
6-2-2 국제해사협약 제·개정에 체계적 대응	310
6-2-3 IMO 장기전략계획 대응 및 국제표준화 주도	30
6-3. 해사안전 글로벌 선도역량 제고	675
6-3-1 국제해사 대응체계 강화	3,536
6-3-2 IMO 대응 전문인력 양성	155
6-3-3 해양안전 학술 및 교육협력 강화	420
6-4. 다각적 국제협력 추진으로 국제사회 입지 강화	1,955
6-4-1 해적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845
6-4-2 양자간 국제협력활동 강화	70
6-4-3 항로표지 국제협력 확대	825
6-4-4 해양사고 조사 국제협력 강화	215

붙임 2

과제별 담당부서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및
1-1-1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 강화	해사안전정책과	김세준 主	044-200- firsea@ko
1-1-2 노후선 안전관리 강화	해사안전정책과 해사산업기술과 연안해운과	강용석 事 이민중 事 김덕영 事	044-200- ys0307@ko
1-1-3 선박안전관리 통합운영체계 구축	해사안전정책과	김세준 主	044-200- firsea@ko
1-2-1 어선안전관리 제도개선	어선정책팀	박상혁 事 최정호 主	044-200- parktur@ko
1-2-2 어선 안전설비·장비 지원	어선정책팀	박상혁 事 최정호 主	044-200- sjchoi5866@
1-2-3 원양어선 안전관리 강화	원양산업과	김세희 事	044-200- kisse@ko
1-3-1 선박검사제도 선진화	해사산업기술과	이민중 事 김동진 主	044-200-58 ju077@kor
	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기준실	박호상	044-330- hosang72@f
1-3-2 선박용 물건 형식승인제도 선진화	해사산업기술과	서지만 事	044-200- seojm@ko
1-3-3 선박검사 인력·장비 확충	검사기준실	박호상	044)330-2 hosang72@f
1-4-1 위험화물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해사산업기술과	김지홍 事	044-200- jihong76@k
1-4-2 위험물 운반선 안전성 제고	해사산업기술과	김지홍 事	044-200- jihong76@k
1-4-3 위험물 하역시설 안전성 강화	항만운영과	김병남 主	044)200-5 lym3419@k
1-5-1 선박안전성 확보 및 신조선 건조지원 확대	연안해운과	이세훈 主	044-200- navyjeong@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및
1-5-2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해사안전정책과	강용석 事	044-200- ys0307@ko
1-5-3 페어망·로프 감김사고 예방 대책 추진	해사안전정책과	강용석 事	044-200- ys0307@ko
1-6-1 선박 안전성 확보기술 개발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안전기술실	권수연	044-330- kissiny@ks
	해사산업기술과	서지만 事	044-200- seojm@ko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안전기술실	이기동	044-330- kd777@ks
1-6-2 국내 어선의 최적화 표준선형 개발	어선정책팀	김형덕 事 이형록 主	044-200- hdkim@ko
1-6-3 선박설비 및 기타 안전분야 기술개발	공통과제		
1-6-4 차세대 자율운항선박 설계 및 운항기준 마련	해운정책과	임경은 事 이종호 主	044-200- limke@kor 044-200- firsea@ko
2-1-1 해양안전 관계기관 협력기반 강화	해사안전정책과	김세준 主	044-200- firsea@ko
2-1-2 해사안전감독관 안전관리 고도화 추진	해사안전정책과	강용석 事	044-200- ys0307@ko
2-1-3 중대해양사고 발생선박 안전관리 강화	해사안전정책과	최덕곤 事 강용석 事	044-200- choidg@ko 044-200- ys0307@ko
2-1-4 해양사고 통계 개선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이지원 主	044-200- dimple@ko
2-2-1 안전관리체제 이행 선진화	해사안전정책과	강용석 事	044-200- ys0307@ko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및
2-2-2 해양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강화	해사안전정책과	이삼준 事	044-200- kiminsu@k
2-2-3 선사의 안전관리능력 제고 지원	해사안전정책과	이삼준 事 강용석 事	044-200- kiminsu@k 044-200- ys0307@k
2-3-1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역량 강화	해사안전관리과	신창호 主	044-200- shinch82@k
	해사안전관리과	최정인 主	044-200- james59@k
2-3-2 해양사고 발생대비 상황관리체계 강화	해사안전관리과	김재윤 主	044-200- bhjy21@k
2-3-3 항만 및 선박보안관리 체계 공고화	해사안전관리과	서승준 主	044-200- klpa1010@k
	항만운영과	김광익 主	044-200- guardian30@
2-4-1 안전관리 부실 외국적선박 항만국통제 강화	해사안전정책과	김희곤 主	044-200-5 h2kin@kor
2-4-2 국적선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관리 우수국가 지위 유지	해사안전정책과	김희곤 主	044-200-5 h2kin@kor
2-4-3 국적선사의 안정적 해운활동 지원 등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해사안전정책과	김희곤 主	044-200-5 h2kin@kor
2-5-1 연안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강화	연안해운과	김덕영 事	044-200- a85851472@
2-5-2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연안해운과	정영광 主	044-200- gksqudghks@
2-5-3 연안 해상교통 노후 인프라 개선	연안해운과	김덕영 事	044-200- a85851472@
2-6-1 시운전 선박 안전관리 강화	해사안전정책과	조영진 主	044-200- gandi80@k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및
2-6-2 해상펜션·수상가옥 안전관리 강화	해사안전정책과	조영진 主	044-200- gandi80@k
2-6-3 항내운항 소형선박 및 관공선 안전관리 강화	해사산업기술과 해사산업기술과	이민중 事 김지홍 事	044-200- 044-200-
2-6-4 마리나업 운항선박 안전관리 강화	해양레저과	최종영 主	044-200- extreme@k
2-6-5 수면비행선박(위그선) 상용화 기반 마련	해사산업기술과	이민중 事	044-200- gem@kor
3-1-1 해양안전문화 확산	해사안전정책과	김세준 主	044-200- firsea@kc
3-1-2 해양안전 교육 확대	해사안전정책과	이삼준 事	044-200- kiminsu@k
3-1-3 대국민 해양 친숙화를 위한 홍보 강화	해사안전정책과	이삼준 事	044-200- kiminsu@k
3-2-1 지역별 체험공간 마련	해사안전정책과	김세준 主	044-200- firsea@kc
	항로표지과	김정식 事	044-200- haidori@kc
3-2-2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체험확산	해사안전정책과	김세준 主	044-200- firsea@kc
3-3-1 해사안전 지식전파 및 보급	중앙해양안전 심판원	이수진 主 김영권 主	044-200- 044-200-
3-3-2 해사안전 평생교육 기반마련	해사안전정책과	이삼준 事	044-200- kiminsu@k
3-4-1 민간주도의 해양안전문화 확산기반 마련	해사안전정책과	김세준 主	044-200- firsea@kc
3-4-2 부처간 통일된 안전정책 확산체계 구축	해사안전정책과	김세준 主	044-200- firsea@kc
4-1-1. 종사자 안전교육 실효성 확보	해사안전정책과	이삼준 事	044-200- kiminsu@k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및
	교육운영팀	정영옥	051-620- jyo@seama
4-1-2. 취약선종 맞춤형 교육체계 확립	교육운영팀	정영옥	051-620- jyo@seama
4-1-3. 최고경영자, 안전관리책임자 등 교육 강화	해사안전정책과	이삼준 事	044-200- kiminsu@k
4-2-1 어선원 안전교육 개선	소득복지과	정재훈 事	044-200- jaehunbb@k
4-2-2 외국인 어선원 안전교육 강화	선원정책과	김해기 書	044-200- seabase@k
4-2-3 외국인 선원 직무환경 및 수급관리 체계 개선	선원정책과	김해기 書	044-200- seabase@k
4-3-1 내항선 근무여건 개선	선원정책과	안희영 事	044-200- 1234567@k
4-3-2 선원복지 정책 마련	선원정책과	안희영 事	044-200- 1234567@k
	선원정책과	강정희 事	044-200- kjh7895@k
4-3-3 국제 선원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체계 확보	선원정책과	강정희 事	044-200- kjh7895@k
4-4-1 우수 해기사 양성기반 강화	선원정책과	황영진 事	044-2020- why1@kor
4-4-2 해사 전문인력 양성체계 확립	공통과제		
4-4-3 지속가능한 선원수급기반 마련	선원정책과	안희영 事	044-200- 1234567@k
	선원정책과	황영진 事	044-2020- why1@kor
4-5-1 요트운항에 필요한 승무기준 검토	선원정책과	김도순 事	044-200- moowool@k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및
4-5-2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해사안전정책과	조영진 主	044-200- gandi80@k
5-1-1 해상교통 밀집해역 안전관리 개선	공통과제		
5-1-2 항로 안전하이웨이 기반 구축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	박인영 主	051-400- piyocean@k
5-1-3 이용자 중심 항만시설 개발 운영	공통과제		
5-2-1 위험물 취급항만 통항로 안전성 평가 및 개선	해사안전정책과	조영진 主	044-200- gandi80@k
5-2-2 선박통항 항로·수역 안전확보	항만운영과	민현태 主	044-200- findory@k
	해양보전과	이희재 主	044-200- solpi1004@k
	해사안전관리과	최정인 主	044-200- james59@k
5-2-3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 고도화	해사안전정책과	조영진 主	044-200- gandi80@k
5-3-1 e-Nav 서비스 핵심기술 개발	해사산업기술과	홍순배 書	044-200- hong0610@k
5-3-2 e-Nav 운영시스템 및 해사디지털 인프라 구축·운영	해사산업기술과	홍순배 書	044-200- hong0610@k
5-3-3 e-Nav 국제표준화 선도	해사산업기술과	홍순배 書	044-200- hong0610@k
5-4-1 항로표지 확충 및 항법시스템 고도화	항로표지과	김영진 主	044-200- ds3kgu@k
	항로표지과	전기준 事	044-200- jeon3845@k
	항로표지과	이병곤 事	044-200- gon0609@k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및
5-4-2 항로표지정보의 전자적 제공체계 마련	항로표지과	이병곤 事	044-200- gon0609@k
	항로표지과	전기준 事	044-200- jeon3845@k
5-4-3 해양예보서비스 선진화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	서광호 연구사	051-400- seogh777@k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	김영택 연구사	051-400- kyt5824@ko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	한광남 主	051-400- hkn0112@k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	최원진 主	051-400- ch8331@ko
5-5-1 차세대 수로정보 서비스 표준화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	백용 主	051-400- ybaek@ko
5-5-2 수요자 맞춤형 해도제작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	이병성 主	051-400- james52@k
5-5-3 소형선박 안전조업 유도를 위한 전자해도 제작·보급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	이병성 主	051-400- james52@k
5-6-1 어업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어선정책팀	박상혁 事 최정호 主	044-200- (parktur@ko
5-6-2 어업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지도선 확충	지도교섭과	박영기 書	200055- soccerj@ko
5-6-3 어선안전관리 조직정비를 통한 어업관리 역량강화	지도교섭과	박영기 書	044-200- (choicine@k
6-1-1 선박평형수 세계시장 점유 확대	해사산업기술과	조경주 事	044-200- ckj0403@ko
6-1-2 선박 대기오염 규제강화에 대비한 선제적	해사산업기술과	양진영 事	044-200-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및
대응체계 구축			yangjinyoung
6-1-3 친환경선박 등 환경규제의 산업화 기반조성	해사산업기술과	양진영 事	044-200- yangjinyoung
6-2-1 2020년 IMO 회원국감사(IMSAS)의 성공적 수감	해사안전정책과	김석훈 事	044-200- navigator@k
6-2-2 국제해사협약 제·개정에 체계적 대응	해사안전정책과	이창용 書	044-200- leecy@kor
6-2-3 IMO 장기전략계획 대응 및 국제표준화 주도	해사안전정책과	이창용 書	044-200- leecy@kor
6-3-1 국제해사 대응체계 강화	해사안전정책과	이창용 書	044-200- leecy@kor
	해사안전정책과	김석훈 事	044-200- navigator@k
6-3-2 IMO 대응 전문인력 양성	해사안전정책과	이창용 書	044-200- leecy@kor
6-3-3 해양안전 학술 및 교육협력 강화	해사안전정책과	이창용 書	044-200- leecy@kor
6-4-1 해적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해사안전관리과	방종화 事	044-200- bjh125@kc
6-4-2 양자간 국제협력활동 강화	해사안전정책과	김석훈 事	044-200- navigator@k
6-4-3 항로표지 국제협력 확대	항로표지과	김강온 事	044-200- ohmiri@ko
6-4-4 해양사고 조사 국제협력 강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제조사팀	김구종 事	044-200- master114@